

IV. 부산 청년의 생애 이행 경로: 주요 지사체와의 비교

1. 개요: 청년의 생애 이행 경로

1) 청년의 생애 이행 경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생애과정 관점 연구의 의의

- 한국 청년의 삶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은 주로 특정 설명 변수가 취업·출산·결혼 등과 같은 생애사의 중요한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개별적으로 다루는 경향을 나타냈을 뿐(남재욱 외 2018; 변금선 2018; 성미애 외 2015; 이삼식 외 2012) 청년의 삶 전체를 조망하는 접근 방법을 채택한 실증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움(노법래·양경은 2020, 72).
- 하지만 살아가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경험들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다루는 생애사에 대한 총체적 접근(holistic approach) 또한 중요하며, 최근에는 그러한 접근 방법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추세임(Mills 1959; Neugarten 1970; Riley & Riley 1994; Pollock 2007).
-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생애과정 관점(life course perspective)은 한 개인의 생애과정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변화를 사회적 맥락과 함께 접근함으로써 생애과정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로 개인이나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동세대 집단(cohort group)의 일대기를 사회적 차원에서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유용한 분석 틀을 제공함(문혜진 2010).
- 이 연구 또한 이러한 생애과정 관점에 입각하여 부산 청년의 생애 이행 경로를 총체적, 종합적 관점에서 접근해 보고자 함.

□ 청년 생애 이행 경로 분석의 중요성

-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청년 실업률의 증가 현상이 뚜렷해지는 가운데 청년들은 단순한 실업의 문제뿐만 아니라 잦은 이직으로 인한 노동과 일자리의 질 저하에 직면함(이병희 2004; 남재량 2006; 정인수 외 2006).
- 특히, 2000년대 접어들면서 급속히 진행된 우리 사회의 탈산업화 및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해 노동시장 중심의 삶과 사회적 불안정성의 강화에 따른 경쟁의 격화로 개인의 선택에 대한 무한 책임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청년 세대의 사회적 불안정도 함께 강화되는 경향이 대두됨(노법래·양경은 2020, 72).

- 청년실업의 위기가 장기간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한국에서는 취업이나 결혼과 같이 생애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선택 자체를 포기하는 이른바 ‘N포 세대’라는 말이 인구에 회자할 정도로 청년의 사회경제적 상태가 열악해지고 있음(노법래·양경은 2020, 72).
- 따라서, 한국 청년이 어떤 생애과정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취업·결혼·출산 등 생애과정의 중요한 선택을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지를 성·학력·거주지역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생애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살펴보는 것은 보다 효율적인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음.

□ 부산 청년의 생애 이행 경로 분석을 위한 경로 설정

- 이 연구는 부산 청년의 생애 이행 경로를 교육-노동시장과 가족 이행 경로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접근함.
- 생애 이행 경로를 구성하는 생애과정의 각 구성요소는 서로 독립적이지 않고 상호 연계되어 있는 본질적 속성을 지니고 있음. 예컨대 출산의 경험은 결혼이 매개 사건이 될 수 있고, 혼인은 취업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됨(노법래·양경은 2020, 79).
- 마찬가지로 취업은 교육 수준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전체적으로 청년의 생애과정은 교육(중고등-대학-대학원), 취업(정규직/비정규직, 임금-비임금 노동), 결혼, 출산으로 이어지는 시간적 흐름에 따른 경로를 따라 구성하게 되므로 교육-노동시장 이행과 가족 이행 경로를 구분하여 분석하되 최종적으로는 두 이행 경로 간 연계를 고려하여 분석함.
- 아울러 청년의 생애과정에서 교육·취업·결혼·출산 외에 학업의 중도 포기(중퇴), 재학 중 부업(아르바이트/인턴), 휴학, 입대 등도 매우 중요한 생애과정의 구성요소로 포함될 수 있는바, 특히 교육-노동시장 이행 경로를 분석함에 있어 그와 같은 세부 경로도 고려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으나 효율적인 유형화를 위해서는 복잡다단한 생애 이행 경로의 구성요소를 가능한 단순 명료화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교육·노동·결혼·출산의 네 가지 중요한 생애 이행 경로를 중심으로 교육-노동시장 이행 경로와 가족 이행 경로를 구분하여 각 이행 경로의 주요 특성을 나타내는 측정 변수들을 실증 분석에 활용하는 동시에 두 개의 구분된 경로를 연결해 우리나라 청년의 생애 이행 경로를 종합적으로 유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함.
- 교육·노동·결혼·출산의 네 가지 중요한 생애 이행 경로의 구성요소에 따른 다양한 생애 이행 경로를 유형화하고 이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활용 가능한 패널조사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용 가능한 한국청년패

널, 한국복지패널, 한국노동패널 등 세 가지 주요 패널 데이터 중 어떤 것도 교육·노동·결혼·출산의 네 가지 중요한 생애 이행 경로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일관되고 일목요연하게 제공하고 있지 못함.

- 이 연구에서는 교육-노동시장 이행 경로 분석에는 한국청년패널 데이터를, 가족 이행 경로 분석에는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각각 분석에 활용하게 될 것인바, 이는 주어진 패널 데이터가 갖고 있는 한계를 고려한 불가피한 방법론적 선택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부산 청년의 생애 이행 경로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주요 지자체와 비교해 봄으로써 생애 과정적 관점에서 부산 청년의 현주소를 제대로 파악하고자 함. 이를 위해 먼저 교육·노동·결혼·출산이라는 네 가지 청년 생애과정의 중요한 표준 경로를 설정하고 각 경로를 대표하는 중요한 특성치들을 추출함. 또한, 이를 전국 평균은 물론 서울·대구·인천·광주 등 주요 특·광역시의 평균 특성치와 비교해 봄으로써 부산 청년의 생애과정의 경로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함.
- 아울러 이 연구에서는 교육·노동·결혼·출산의 네 가지 중요한 생애 이행 경로를 교육은 고졸/대졸, 노동은 취업/미취업, 결혼은 미혼/결혼, 출산은 무자녀/유자녀 등 각각의 특성을 구분할 수 있는 이분형 변수(dichotomous variables)로 측정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연결하여 모두 12개의 세부 유형으로 구분하되(2x2x2x2 행렬을 통해 얻을 수 있는 16개 모형 중 ‘미혼-출산’과 관련된 4개 유형은 제외) 관측치가 없거나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적은 유형은 제외하는 방식으로 유형화를 시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유형의 지역별 분포 특성을 전국 및 주요 지자체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지역별 청년 생애 이행 경로의 특성 차이를 살펴보고자 함.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 제시할 12개 세부 유형은 <표 4-1>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음.
- 김영·황영미(2013), 변금선·이혜림(2023) 등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표준화된 생애 이행 경로를 따르지 않고 취업과 교육훈련을 반복하는 ‘요요 이행’을 보다 일반화된 생애 이행 경로로 채택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음.
- 따라서 교육-노동시장 이행 경로를 분석함에 있어 표준화된 경로 외에 ‘요요화된 경로’ 또한 유효한 경로로 분석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교육-노동시장 이행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경험적 데이터로 주로 활용되고 있는 한국청년패널, 한국복지패널, 한국노동패널 등 패널조사 자료와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통계 데이터로는 교육-노동시장을 반복해 오가는 요요 경로의 패턴을 분석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존재함.

<표 4-1> 교육·노동·결혼·출산의 네 가지 중요한 생애 이행 경로 유형

유형			유형별 특성
고졸	미취업	미혼	고졸의 저학력이면서 미취업 상태에서 결혼하지 않고 지내는 유형
		결혼	무자녀 고졸의 저학력이고 현재 미취업 상태임에도 결혼해 자녀는 없는 유형
			유자녀 고졸의 저학력이고 현재 미취업 상태임에도 결혼해 자녀까지 가진 유형
	취업	미혼	고졸의 저학력이지만 취업해 있으면서 결혼은 하지 않고 지내는 유형
		결혼	무자녀 고졸의 저학력이지만 취업해 있으면서 결혼해서 자녀는 없는 유형
			유자녀 고졸의 저학력이지만 취업해 있으면서 결혼해서 자녀까지 있는 유형
대졸	미취업	미혼	대졸 이상의 고학력이면서 미취업 상태에서 결혼하지 않고 지내는 유형
		결혼	무자녀 대졸 이상의 고학력이면서 현재 미취업 상태에서 결혼해 자녀는 없는 유형
			유자녀 대졸 이상의 고학력이면서 현재 미취업 상태임에도 결혼해 자녀까지 가진 유형
	취업	미혼	대졸 이상의 고학력이면서 취업해서 결혼은 하지 않고 지내는 유형
		결혼	무자녀 대졸 이상의 고학력이면서 취업하고 결혼해서 자녀는 없는 유형
			유자녀 대졸 이상의 고학력이면서 취업하고 결혼해서 자녀까지 있는 유형

□ 이 연구에서의 데이터 활용 방향

-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19~28세라는 연령의 한계가 있긴 하지만 청년층만을 표집 대상으로 삼고 있는 <한국청년패널>이 표본의 대표성이 가장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청년패널> 자료를 우선적인 분석 대상으로 설정함.¹⁾
- 하지만 <한국청년패널>의 경우 표본추출 및 조사에 활용된 변수의 제약성 등 몇 가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단점이 존재함. 첫째, 19~28세라는 표집상의 연령 제한으로 인해 표집 대상 대부분이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하는 경향이 강해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둘째, 가족 이행 경로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출산 및 휴가와 관련된 변수가 결혼 여부나 자녀 유무

1) 한국청년패널은 한국고용정보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고 통계청의 공식 승인을 받아 실시하고 있는 조사(통계청 승인번호 327005)임. 매년 일정한 절차와 교육을 거쳐 선발된 조사원이 노트북 컴퓨터에 내장된 전자 설문지를 사용하는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함. 이 연구에서 활용하는 청년패널2021(YP2021)은 2019년 인구센서스 전수 조사를 모집단으로 하여 2021년 기준 20대 청년층(만19~28세)을 대상으로 신규 표본 1만 2천 명 규모로 설계되었음. 청년패널2021의 표본설계는 층화 요인에 17개 시도와 동부/읍면부 특성, 보통/아파트 조사구 특성을 고려한 층화 2단계 집락추출법을 적용한 확률 표집을 활용함.

등으로 매우 한정적이어서 가족 이행 경로의 특성 차이를 다양하게 분석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패널조사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의 한계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노동시장 이행 경로는 한국청년패널 데이터를 중심으로 분석하되 가족 이행 경로에 대한 분석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노동패널과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보조적으로 활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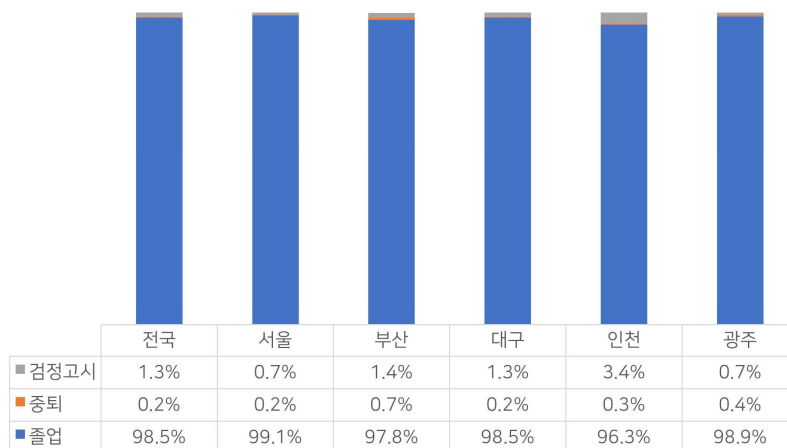
2. 교육-노동시장 이행 경로

1) 청년의 교육 특성 비교

□ 고등학교 졸업 여부

- 전국 및 5개 특·광역시의 고등학교 교육력을 비교해 보면 <그림 4-1>과 같은데 전국 기준 고교졸업자 비중은 98.5%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검정고시로 고교를 졸업한 비중은 1.3%, 고교 중퇴로 중졸 이하 학력 소지자는 0.2%에 불과함.
- 비교 대상인 5개 특·광역시 중 서울(99.1%), 광주(98.9%), 대구(98.5%)로 고졸자 비중이 전국 평균을 상회한데 반해 부산(97.8%), 인천(96.3%)은 전국 평균을 하회함.

<그림 4-1> 고교 졸업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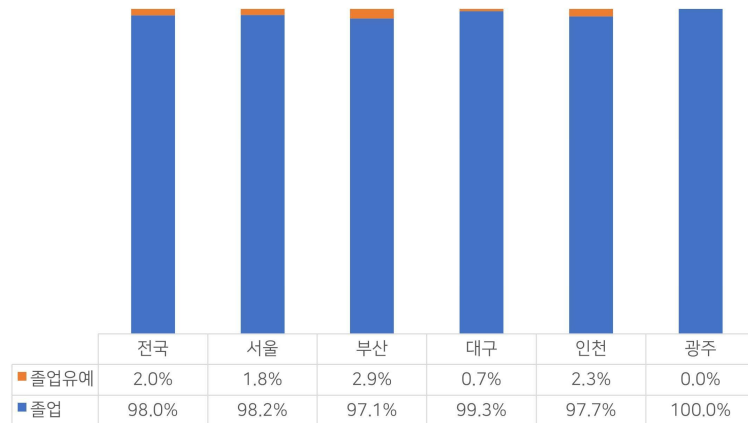
*출처: <2021 한국청년패널>

□ 대학 졸업 유예 경험

- 전국적으로 전체 졸업자 중 졸업을 유예한 경험이 있는 졸업자의 비율은 2.0%로 나타남.

- 5개 특·광역시 중 부산이 졸업 유예 경험자의 비율 2.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인천 2.3%. 서울 1.8%, 대구 0.7%, 광주 0.0%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2> 대학 졸업유예 여부



*출처: <2021 한국청년패널>

□ 대학 재학 중 휴학 경험

- 한국 20대 청년은 대학 전체 8개 학기 중 평균적으로 3.78 학기째 휴학하고 1인당 약 1.1회 휴학하고 대학 재학 중 총 휴학 기간은 약 22.5개월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평균 휴학 횟수가 1.1회인데 비해 휴학 기간이 22.5개월로 많은 이유는 군입대 휴학이 주를 이루기 때문임.
- 휴학 시기를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서울이 4.03학기로 부산(3.74학기), 인천(3.73학기), 대구(3.65학기), 광주(3.36학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음.
- 휴학 기간의 경우, 부산은 22.55개월로 전국 평균(22.45개월) 및 서울(22.57개월)과 유사하지만, 대구(23.78개월)보다는 약간 길고, 인천(21.72개월), 광주(21.70개월) 보다는 짧게 나타남.
- 학생 1인당 총 휴학 횟수는 부산이 1.09회로 전국 평균(1.1회) 및 서울(1.09회)과 비슷하지만 광주(1.19회), 인천(1.14회), 대구(1.13회)보다는 많지 않음.

□ 대학 졸업 유예한 학기 수

- 전국 평균 졸업 유예한 총 학기 수는 1.96학기로 나타남.
- 5개 특·광역시 중 서울 거주 대학 졸업자의 졸업 유예 총 학기 수가 2.17학기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고 부산 1.67학기, 인천 1.48학기, 대구 1.0학기 순으로 나타남.

□ 군복무 경험

- 고등학교 졸업 후 입대까지 소요 기간은 전국 평균이 21.49개월인데 반해 서울은

25.28개월로 훨씬 많이 소요되고 있고 부산(20.27개월), 인천(20.72개월), 대구(21.14개월)는 전국 평균보다 덜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2> 휴학·졸업 유예·군복무 소요 기간

세부 경로	측정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휴학	휴학 시기(N)	2,300,941	425,124	176,235	93,349	121,415	65,527
	휴학 시기(학기)	3.78	4.03	3.74	3.65	3.73	3.36
	총 휴학 기간(N)	2,295,639	424,365	175,308	92,817	120,510	65,826
	총 휴학 기간(개월)	22.45	22.57	22.55	23.78	21.72	21.70
	총 휴학 횟수(N)	2,302,823	425,124	176,235	93,349	121,415	66,089
	총 휴학 횟수(회)	1.10	1.09	1.09	1.13	1.14	1.19
졸업 유예	졸업 유예 총학기(N)	48,604	9,720	4,250	761	3,153	—
	졸업 유예 총 학기(학기)	1.96	2.17	1.67	1	1.48	—
군복무	고교 졸업 후 입대까지 기간(N)	2,490,157	455,479	160,743	115,084	139,571	78,858
	고교 졸업 후 입대까지 기간(개월)	21.49	25.28	20.27	21.14	20.72	18.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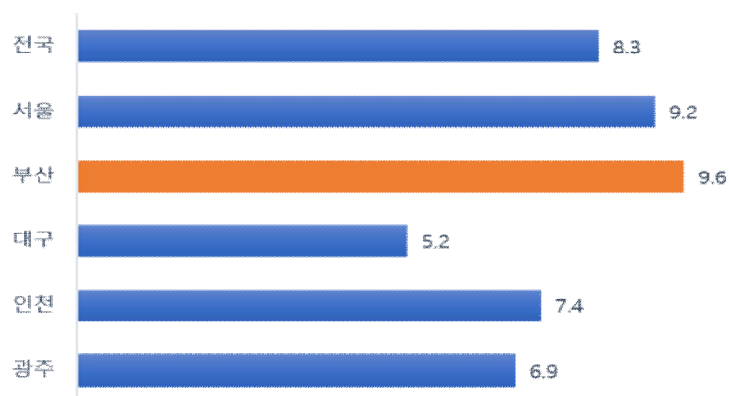
*출처: <2021 한국청년패널>

2) 청년의 노동시장 특성 비교

□ 구직 기간

- 구직기간의 전국 평균은 8.3개월로 나타남.
- 5개 특·광역시 중 부산은 9.6개월로 구직기간이 가장 길고, 서울 9.2개월, 인천 7.4개월, 광주 6.9개월 대구 5.2개월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3> 구직기간(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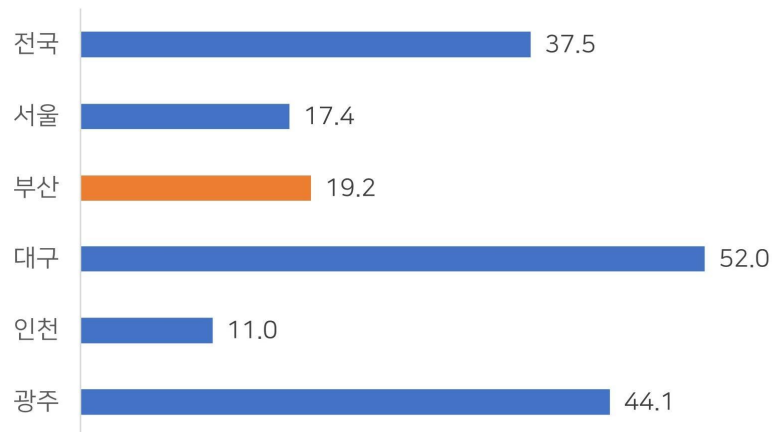


*출처: <2021 한국청년패널>

□ 고등학교 졸업 후 첫 직장 근무까지 소요 기간

- 고등학교 졸업 후 첫 직장 근무까지 소요 기간은 전국 평균 37.5개월로 나타남.
- 5개 특·광역시 중 대구가 52.0개월로 소요 기간이 가장 길었고, 광주 44.1개월, 부산 19.2개월, 서울 17.4개월, 인천 11.0개월로 나타남.

<그림 4-4> 고교 졸업 후 첫 직장 근무까지 소요 기간(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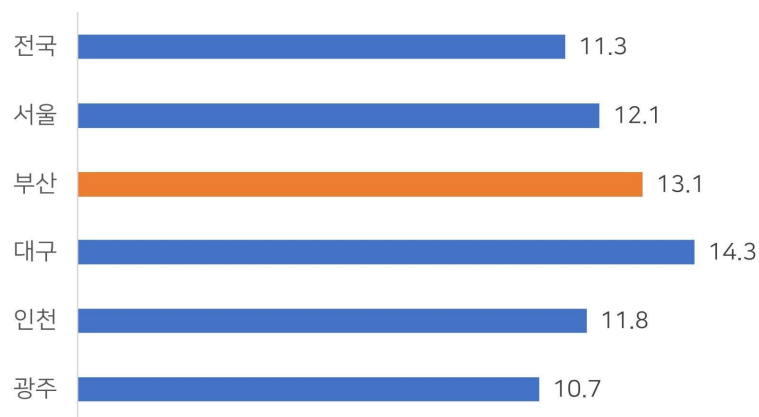


*출처: <2021 한국청년패널>

□ 대학 졸업 후 첫 직장 근무까지 소요 기간

- 대학 졸업 후 첫 직장 근무까지 소요 기간은 전국 평균 11.3개월로 나타남.
- 5개 특·광역시 중 대구가 14.3개월로 가장 길었고, 부산 13.1개월, 서울 12.1개월, 인천 11.8개월, 광주 10.7개월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5> 대학 졸업 후 첫 직장 근무까지 소요 기간(개월)



*출처: <2021 한국청년패널>

□ 구직횟수

- 구직을 시도한 평균 횟수는 전국 평균이 3.5회로 나타남.

○ 5개 특·광역시를 비교해 보면, 인천이 4.7회로 가장 많았고, 서울 4.1회, 부산 3.1회, 광주 2.5회, 대구 1.6회 순으로 나타남.

□ 구직을 위한 유보임금

○ 취업을 결심하기 위한 최소 임금 수준을 의미하는 유보임금은 전국 평균이 3,110만원으로 나타남.

○ 5개 특·광역시를 비교해 보면, 서울의 유보임금이 3,35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2,962만원, 부산 2,960만원, 광주 2,864만원, 대구 2,805만원 순으로 나타남.

<표 4-3> 구직 관련 경험

세부경로	측정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구직	구직 기간(N)	506,642	111,148	42,179	17,859	36,297	11,249
	구직 기간(개월)	8.3	9.2	9.6	5.2	7.4	6.9
	총 구직 횟수(N)	506,642	111,148	42,179	17,859	36,297	11,249
	총 구직 횟수(회)	3.5	4.1	3.1	1.6	4.7	2.5
	유보 임금(N)	500,908	110,650	42,179	17,859	35,290	11,249
	유보 임금(만원)	3,110	3,355	2,960	2,805	2,962	2,8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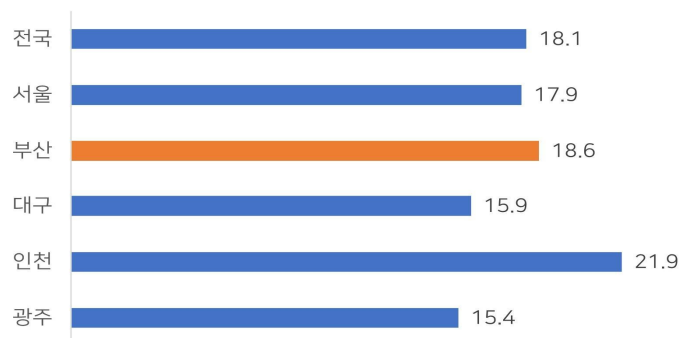
*출처: <2021 한국청년패널>

□ 첫 직장 재직 기간

○ 첫 직장 재직기간은 전국 평균 18.1개월로 나타남.

○ 5개 특·광역시 중 인천이 21.9개월로 가장 길었고, 부산 18.6개월, 서울 17.9개월, 대구 15.9개월, 광주 15.4개월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6> 첫 직장 재직기간(개월)



*출처: <2021 한국청년패널>

3) 부산 청년의 교육-노동시장 이행 경로 지형

□ 고교 교육력

- 고등학교 교육력과 관련하여 부산은 고졸자 비중이 전국 평균을 하회하고 중퇴자 비중이 전국 및 다른 특·광역시에 비해 매우 높은 특성을 보임.

□ 대학 교육력

- 부산은 전국 및 타 광역시(특히 서울과 인천)에 비해 지역 소재 대학 출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부산 지역 대학생은 서울 지역 대학생과 비교해 휴학 시기는 물론 군복무를 위한 입대도 더 빠른 편인데 반해 졸업유예 비율은 더 높게 나타남.
- 부산 지역 고교 졸업생은 주로 부산 지역 내 대학에 진학하는 경향이 강함. 대학에 진학한 이후에는 전국 및 타 광역시에 비해 일찍 휴학해서 군복무를 마치는 경향이 강하며 취업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졸업 유예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음을 시사함.

□ 구직 관련 경험

- 부산 청년의 평균 구직 기간은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할 뿐만 아니라 비교 대상인 다른 특·광역시와 비교해 가장 길었고 특히 대구 청년의 구직 기간과 비교하면 약 1.9배 긴 것으로 나타남.
- 부산 청년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첫 직장 근무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짧고 대구, 광주 등 인구 규모가 작은 광역시와 비교하면 약 2.3~2.7배 짧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대학 졸업 후 첫 직장 근무까지 소요 기간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첫 직장 재직 기간

- 부산 청년이 첫 직장에 재직하는 총 기간은 전국 평균과 유사하며 인천보다는 상대적으로 짧지만 서울, 대구, 광주보다는 긴 것으로 나타나 첫 직장에 대한 애착이 다른 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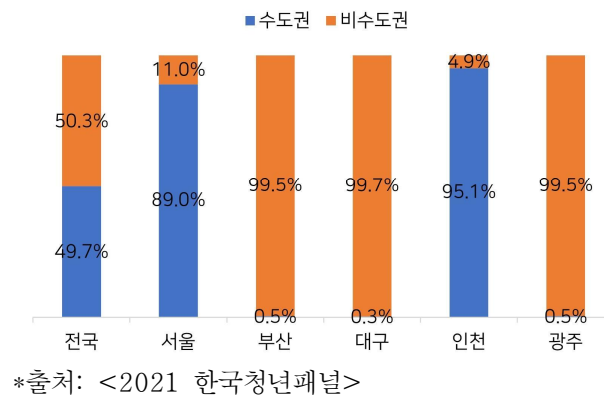
3. 가족 이행 경로

1) 청년의 가족 특성 비교

□ 14세 성장 거주지(수도권/비수도권 구분)

- 현 거주지가 수도권에 속한 서울 및 인천인 청년은 90% 이상이 성장기인 14세에 수도권에 거주지를 둔 것으로 나타남. 그 비율은 인천이 95.1%, 서울이 89.0%로 인천이 서울보다 수도권에서 성장한 청년의 비율이 더 높음.
- 현 거주지가 비수도권에 속한 부산, 대구, 광주인 청년은 정반대로 거의 100%에 가까운 절대다수가 비수도권에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한국 청년의 지역적 이동이 성장기에서 청년기에 이르는 기간에는 크게 나타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한국 청년은 전국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거주지가 확연히 구분되어 삶의 공간을 달리해 성장해 왔음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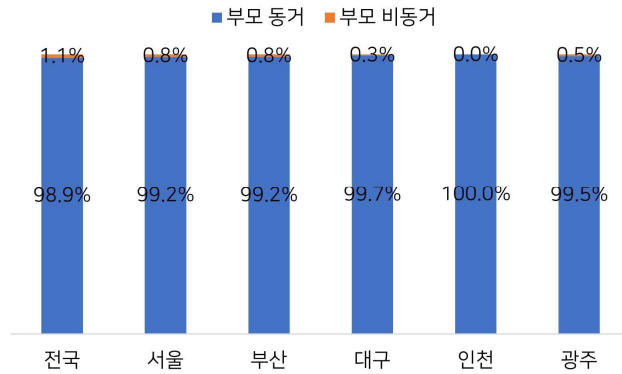
<그림 4-7> 14세 성장 거주지



□ 14세 성장기 부모 동거 여부

- 현재 거주지에 관계 없이 14세 성장기에 한국 청년은 거의 100%에 가까운 절대다수가 부모와 동거하며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부모와의 동거에 따른 안정적 성장환경은 대부분 잘 갖추어져 있음.
- 5개 특·광역시 모두 부모 동거 비율이 전국 평균 98.0%를 상회하는 가운데 인천시 거주 청년의 14세 성장기 부모 동거 비율이 100%로 가장 높고, 서울과 부산 거주 청년의 부모 동거 비율이 각각 99.2%로 가장 낮았으며, 다음으로 광주 99.5%, 대구 99.7% 순으로 나타남.

<그림 4-8> 14세 성장 시 부모 동거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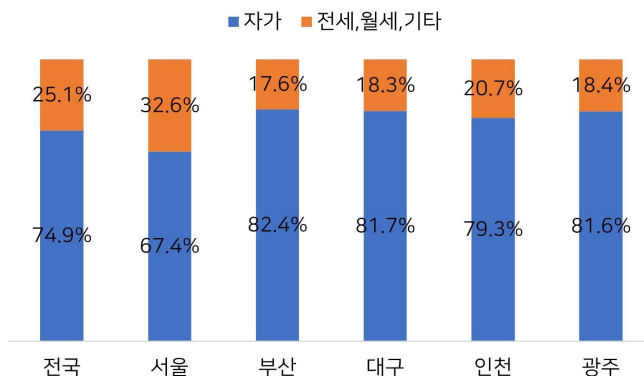


*출처: <2021 한국청년패널>

□ 14세 성장기 주거 형태

- 14세 성장기 주거 형태를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74.9%의 청년이 자가에 거주하고 나머지 25.1%는 전·월세 및 기타 주거 형태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남.
- 5개 특·광역시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자가 거주 비율이 67.4%로 전국 평균을 하회하고 있고 나머지 4개 광역시는 모두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가운데, 자가 거주 비율은 부산이 82.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대구 81.7%, 광주 81.6%, 인천 79.3%의 순으로 나타남.
- 부산의 경우 전국 평균을 상회할 뿐만 아니라 비교 대상인 5개 특·광역시 중 자가 거주 비율이 가장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주거 환경의 측면에서 성장환경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그림 4-9> 14세 성장 시 주거 형태



*출처: <2021 한국청년패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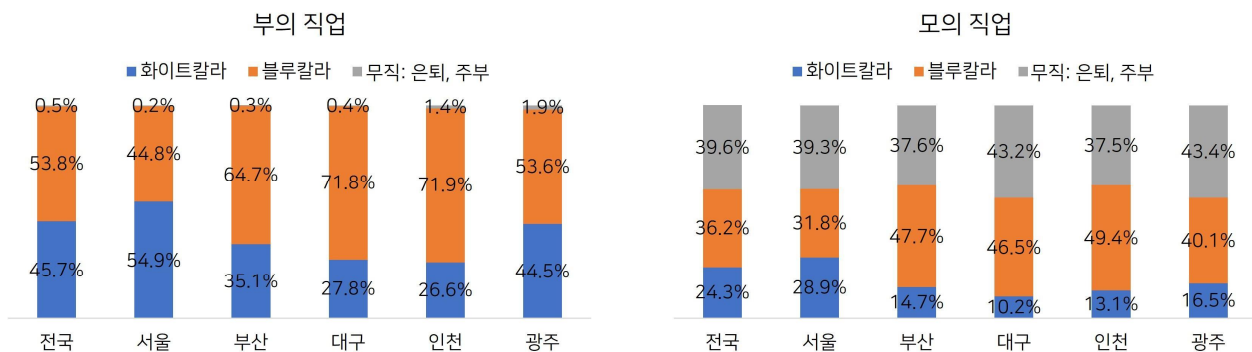
□ 14세 성장기 부모의 직업

- 14세 성장기 부모 직업의 전국 평균을 살펴보면, 부의 직업은 블루칼라층이 53.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화이트칼라 45.7%, 무직(은퇴/주부 포함) 0.5%의 순으로 나타난

데 반해 모의 직업은 무직(은퇴/주부 포함)이 39.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블루칼라 36.2%, 화이트칼라 24.3%의 순으로 나타남.

- 5개 특·광역시별로 살펴보면, 먼저 부 직업의 경우, 블루칼라층은 인천이 71.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대구 71.8%, 부산 64.7%, 광주 53.6%, 서울 44.8%로 나타나 서울과 광주를 제외한 인천, 대구, 부산의 블루칼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모 직업의 경우, 블루칼라 비율은 인천이 49.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부산 47.7%, 대구 46.5%, 광주 40.1%, 서울 31.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무직(은퇴/주부 포함) 비율은 광주(43.4%)와 서울(39.3%)이 블루칼라 비율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부산, 대구, 인천은 블루칼라 비율이 무직 비율보다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4-10> 14세 성장 시 부모의 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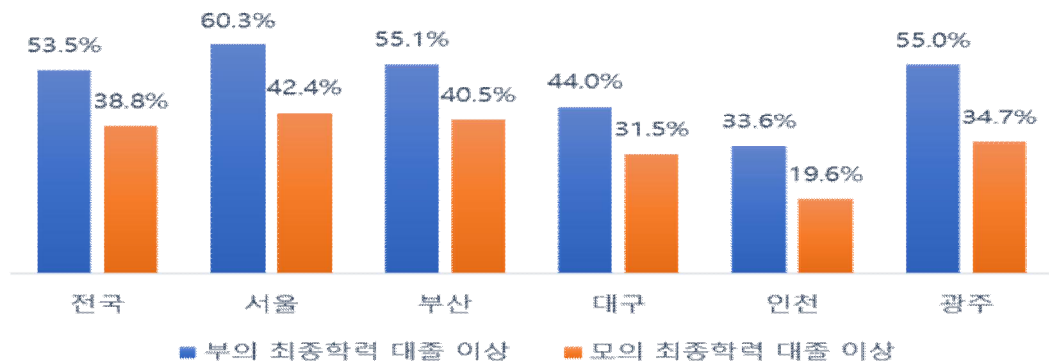
*출처: <2021 한국청년패널>

**주: 화이트칼라는 경영·사무·금융·보험직(관리직, 행정사무직 포함), 연구직 및 공학기술직(인문사회·자연생명과학 연구직, 공학·정보통신 연구개발·공학기술직),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종교직, 교도직 포함), 보건·의료직,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레크리에이션직 포함) 등을 포함. 블루칼라는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예식·경호·간병·육아 등 기타 개인서비스직 포함), 영업·판매·운전·운송직, 건설·채굴직, 설치·정비·생산직(기계·금속·전기·전자·정보통신·화학에너지·식품가공·섬유·인쇄·목재 등), 농림어업직 등을 포함. 무직은 은퇴자 및 주부

□ 부모의 최종학력

- 14세 성장기의 성장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하나인 부모의 최종학력은 전국 평균의 경우, 부는 53.5%, 모의 38.8%가 대졸 이상의 고학력인 것으로 나타남.
- 5개 특·광역시 별로 살펴보면, 부의 경우 서울이 60.3%로 대졸 이상의 고학력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부산 55.1%, 광주 55.0%, 대구 44.0%, 인천 33.6%의 순으로 나타남. 모의 경우 서울이 42.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부산 40.5%, 광주 34.7%, 대구 31.5%, 인천 19.6%로 나타남.
- 부산의 경우, 부모의 최종학력 수준은 모두 전국 평균을 상회할 뿐만 아니라 5개 특·광역시 중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아, 부모의 최종학력 수준으로 본 성장환경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됨.

<그림 4-11> 부모의 최종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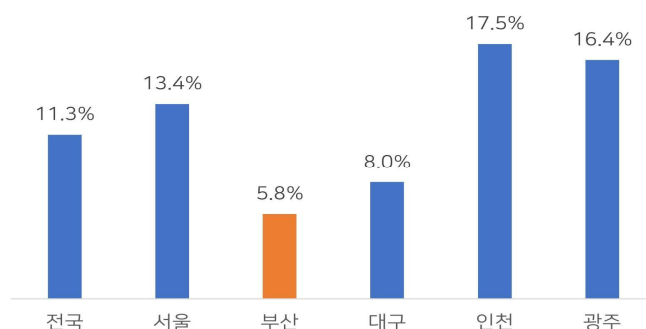
*출처: <2021 한국청년패널>

**주: 부모의 최종학력은 졸업 기준임.

□ 분가 여부

- 청년 생애 이행 경로에 있어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분가 여부를 분석한 결과 전국 평균은 11.3%로 나타남(결혼과 취업 등 경제적 독립과 관련된 이유로 부모의 거소에서 퇴거하여 독립 가구를 구성한 경우에만 분가로 인정).
- 5개 특·광역시별로 살펴보면, 인천이 17.5%로 분가한 청년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광주 16.4%, 서울 13.4%, 대구 8.0%, 부산 5.8%의 순으로 나타남.
- 서울, 인천, 광주 3개 특·광역시는 전국 평균을 상회한데 반해 부산과 대구는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남. 특히 부산의 청년 분가 비율은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분가 청년의 비율이 가장 높은 인천의 1/3에 미치지 못함.

<그림 4-12> 분가 여부



*출처: <2021 한국청년패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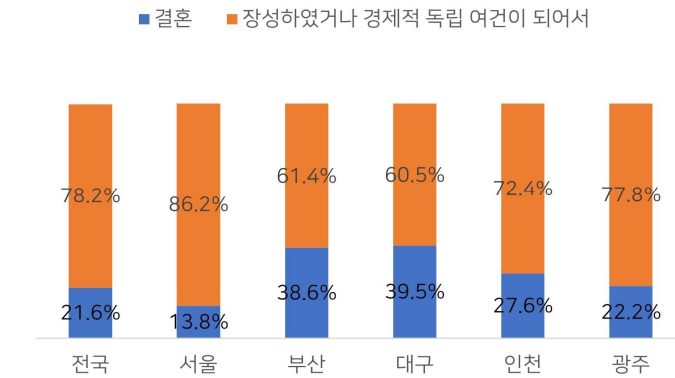
**주: 미분가는 학업, 군대 등을 포함하며, 분가는 경제적 독립상태를 의미함.

□ 분가(독립)의 이유

- 전국 기준으로 살펴보면, 분가(독립)한 청년 중 결혼에 따른 분가(독립) 비율은 21.6% 인데 반해 장성하였거나 경제적 독립 여건이 갖추어져 분가(독립)한 비율은 78.2%임.

- 5개 특·광역시별로 비교해 보면, 결혼으로 인해 분가(독립)한 비율은 대구가 39.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부산 38.6%, 인천 27.6%, 광주 22.2%, 서울 13.8%의 순으로 나타남. 경제적 독립 여건이 갖추어져 분가(독립)한 비율은 서울이 86.2%로 가장 높고, 광주 77.8%, 인천 72.4%, 부산 61.4%, 대구 60.5%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13> 분가(독립)의 이유



*출처: <2021 한국청년패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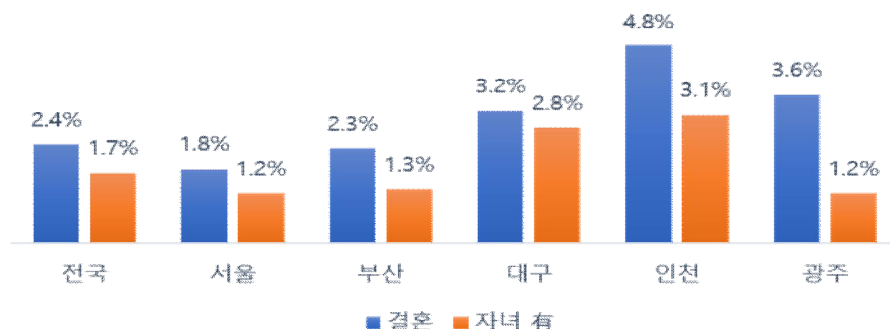
□ 결혼 여부

- 20대 청년의 결혼 비율은 전국 평균 2.5%로 나타남.
- 5개 특·광역시별로 살펴보면, 인천 청년의 결혼 비율이 4.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광주 3.6%, 대구 3.2%, 부산 2.3%, 서울 1.8%의 순으로 나타남.

□ 출산: 자녀 유무

- 자녀를 가진 20대 청년의 비율은 전국 평균 1.7%로 나타남.
- 5개 특·광역시별로 살펴보면, 인천 청년의 유자녀 비율이 3.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대구 2.8%, 부산 1.3%, 서울과 광주 각각 1.2%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14> 결혼 및 자녀 유무



*출처: <2021 한국청년패널>

2) 부산 청년의 가족 이행 경로 지형

□ 부산 청년 성장환경의 특성 분석

- 14세 성장기의 거주지 특성 분석 결과, 부산 청년은 대구, 광주 등 다른 비수도권 광역시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비수도권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등 지역 연고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남.
- 거의 대부분의 부산 청년이 다른 특·광역시 청년과 마찬가지로 부모 동거 비율이 100%에 가깝게 나타났으며, 14세 성장기 주거 형태의 경우 부산 청년은 비교 대상이 특·광역시 청년들에 비해 자가 거주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가족 환경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임.
- 다만 부산 청년의 경우 부모의 직업적 배경 상 다른 특·광역시와 비교해 화이트칼라층보다는 블루칼라층 비율이 더 높은 반면, 부모의 최종학력은 대졸 이상 고학력 부모를 가진 청년의 비율이 전국 평균을 상회할 뿐 아니라 서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 대졸 이상 고학력의 화이트칼라 층 부모를 둔 비율이 높은 서울과는 다른 성장환경의 특성을 보여 이들 부모의 소득/자산과 관련된 특성 분석이 필요해 보임.
- 한국청년패널의 경우 부모의 소득과 자산에 대한 별도의 문항을 갖고 있지 않아 부모의 소득/자산 수준을 염출할 수 있는 대체 문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그 대체 문항으로 자가/전·월세 여부로 측정된 주거형태와 관련된 문항을 활용하였음.
- 따라서 부산 청년은 일반적으로 고소득 중산층이 몰려 있는 고학력 화이트칼라층이 아닌 고학력 블루칼라라는 다소 모호한 부모의 직업/학력 배경이 소득/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판단이 어려운 상황인 바, 한국노동패널이나 한국복지패널을 통한 부모의 소득/자산 특성에 대한 보완적 분석이 필요해 보임.

□ 분가 관련 경험

- 청년 생애 경로의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 있는 분가(독립)와 관련한 특성 분석에서 부산 청년의 분가(독립) 비율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5개 특·광역시 중에서도 가장 낮고 분가 청년 비율이 가장 높은 인천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할 만큼 큰 차이를 보임.
- 분가(독립)의 이유 또한 부산의 경우에는 전국 평균이나 다른 특·광역시와 비교해 경제적 결혼에 따른 분가 선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즉 분가 청년 비율도 매우 낮고 분가 선택의 이유도 결혼이라는 사실상 비자발적 이유가 지배적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청년층의 경제적 독립을 추구하는 분가 유형과는 거리가 있음.

- 따라서 이 모든 점을 고려할 때 부산 청년은 타 광역시 청년들과 비교해 경제적 독립을 기반으로 한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추구하는 생애 경로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거나 분가를 실행할 여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임.

□ 결혼 및 출산(자녀 유무) 관련 경험

- 결혼과 출산은 청년의 생애 이행 경로, 특히 가족 이행 경로에 매우 중요한 생애과정의 사건이어서 가족 이행 경로를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결혼 및 출산과 관련된 다양한 변수에 바탕을 둔 분석이 필수적임.
- 하지만 이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한국청년패널의 경우 19세~28세라는 조사 대상 연령대의 제약(한국 청년의 평균 결혼 연령이 33.4세임을 고려할 때)과 패널조사에 활용된 문항에 결혼 및 출산 관련한 가족이행 경로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적절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유로 의미 있는 분석을 수행하기 어려움.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청년패널이 제공하는 결혼 및 출산(자녀) 유무와 관련된 분포의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만을 제공하고 있는데 부산은 결혼과 출산(자녀) 유무와 관련한 비율이 전국 평균을 하회하고 서울을 제외한 다른 특·광역시에 비해 낮은 것이 특징임.

4. 부산 청년의 생애 이행 경로

1) 교육-취업-결혼-출산 여부에 따른 생애 이행 경로 차이

□ 생애 이행 경로 유형에 대한 개요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연구에서는 먼저 교육·취업·결혼·출산이라는 생애과정의 중요한 4개 이행 경로를 중심으로 각 이행 경로에 있어 청년의 이행 경로 선택을 이분화(dichotomization)하여 모두 12개의 산출 가능한 이행 경로를 유형화함.
- 이론적인 관점에서는 4개의 생애 경로가 각각의 이분형 변수로 구분되기 때문에 모두 16개 유형의 모형 도출이 가능하겠으나 미혼자의 자녀 유무는 사실상 미혼모 등의 사례가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적어 미혼자의 자녀 유무와 관련하여 산출 가능한 4개의 하위 유형은 제외함.
- 각 유형의 전국적 혹은 분석 대상 특·광역시별 해당 청년의 비율을 가중치를 고려하여 산술적으로 계산하여 각 유형에 해당하는 비율을 표의 형태로 제시함.

□ 전국 및 특·광역시별 유형의 비율 분포

- 전국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대졸-취업-미혼’ 유형이 60.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고졸-취업-미혼’ 유형 26.7%, ‘대졸-미취업-미혼’ 6.7%, ‘고졸-미취업-미혼’ 2.5%, ‘대졸-취업-유자녀’ 1.7%, ‘고졸-취업-결혼-무자녀’, ‘고졸-취업-결혼-유자녀’ 각 0.8%, ‘대졸-취업-결혼-무자녀’ 0.4%, ‘고졸-미취업-결혼-무자녀’ 0.1%의 순으로 나타남.
- 5개 특·광역시별로 살펴보면, 서울, 부산, 인천의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전국 평균과 마찬가지로 ‘대졸-취업-미혼’ 유형의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고졸-취업-미혼’, ‘대졸-미취업-미혼’, ‘고졸-미취업-미혼’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반해, 대구는 ‘고졸-미취업-미혼’ 유형에 비해 ‘고졸-취업-결혼-무자녀’ 유형과 ‘대졸-취업-결혼-유자녀’ 유형의 비율이 더 높고, 광주에 ‘고졸-미취업-미혼’ 유형보다 ‘고졸-취업-결혼-유자녀’ 유형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등 도시의 인구 규모에 따른 특성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

<표 4-4> 전국 및 특·광역시별 청년의 생애 이행 경로 유형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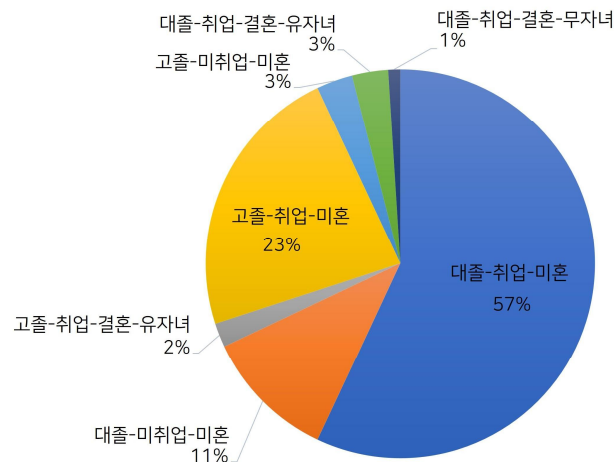
유형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고졸	미취업	미혼	2.5%	1.6%	3.5%	1.4%	3.8%	3.3%
		결혼	무자녀	0.1%	0.0%	0.0%	0.0%	0.0%
			유자녀	0.0%	0.0%	0.0%	0.0%	0.0%
	취업	미혼	26.7%	27.2%	23.3%	29.1%	29.8%	24.3%
		결혼	무자녀	0.8%	0.4%	0.0%	1.7%	1.0%
			유자녀	0.8%	0.5%	1.6%	0.4%	3.5%
대졸	미취업	미혼	6.7%	6.1%	10.9%	6.8%	10.0%	9.1%
		결혼	무자녀	0.0%	0.0%	0.0%	0.0%	0.0%
			유자녀	0.0%	0.0%	0.0%	0.0%	0.0%
	취업	미혼	60.1%	62.6%	56.7%	58.9%	51.2%	55.5%
		결혼	무자녀	0.4%	0.3%	1.4%	0.0%	0.9%
			유자녀	1.7%	1.3%	2.6%	1.7%	3.3%

*출처: <2021 한국청년패널>

- 부산의 청년 생애 이행 경로 유형을 별도로 살펴보면 <그림 4-15>와 같은데 부산도 전국 및 비교 대상인 4개 특·광역시와 마찬가지로 ‘대졸-취업-미혼’ 유형이 5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국 평균(60.1%), 서울(62.6%), 대구(58.9%)보다는 적은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고졸-취업-미혼’ 유형 비율이 23.3%로 높게 나타났으나 이 또한 전국 평균(26.7%) 및 4개 특·광역시(서울 27.2%), 대구 29.1%, 인천 29.8%, 광주 24.3%)보다 낮게 나타남. 하지만 부산의 경우 ‘대졸-미취업-미혼’

유형의 비율은 10.9%로 전국 평균(6.7%)를 크게 상회할 뿐만 아니라 다른 4개 특·광역시(서울 6.1%, 대구 6.8%, 인천 10.0%, 광주 9.1%)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4-15> 부산 청년 생애 이행 경로 유형



*출처: <2021 한국청년패널>

**주: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 값임.

□ 부산 청년의 젠더별 비교

- 부산의 청년을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해서 12개 생애 유형의 분포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비교 분석해 볼 수 있음. 다음 <표 4-5>와 <그림 4-16>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부산 청년의 젠더별 생애유형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2개 생애 유형 중 ‘고졸-미취업-결혼-무자녀’, ‘고졸-미취업-결혼-유자녀’, ‘고졸-취업-결혼-무자녀’, ‘대졸-미취업-결혼-무자녀’, ‘대졸-미취업-결혼-유자녀’ 등 5개 특정 유형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이는 부산의 경우에만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은 아니며 타 광역시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확인되는 현상임. 이는 20대로 한정된 한국청년패널 조사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해석됨.
- 부산 청년의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대졸-취업-미혼’이 남성 44%, 여성 68.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고졸-취업-미혼’이 남성 31.4%, 여성 15.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기 때문에 최종 학교를 졸업해서 취업해서 미혼인 상태가 청년 그룹의 지배적인 생애 유형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다만 청년 여성의 경우 청년 남성에 비해 ‘대졸-취업-미혼’ 유형의 비율이 24.3%p 높는데 반해 ‘고졸-취업-미혼’ 유형의 비율은 오히려 15.5%p 낮은 것으로 나타나 학력에 따라 생애 이행 경로가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아울러 부산 청년 여성의 경우, 청년 남성과 비교해 최종학교 졸업 후 미취업 상태에서 미혼으로 지내는 비율이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어 취업 여부와 혼인 관계의 상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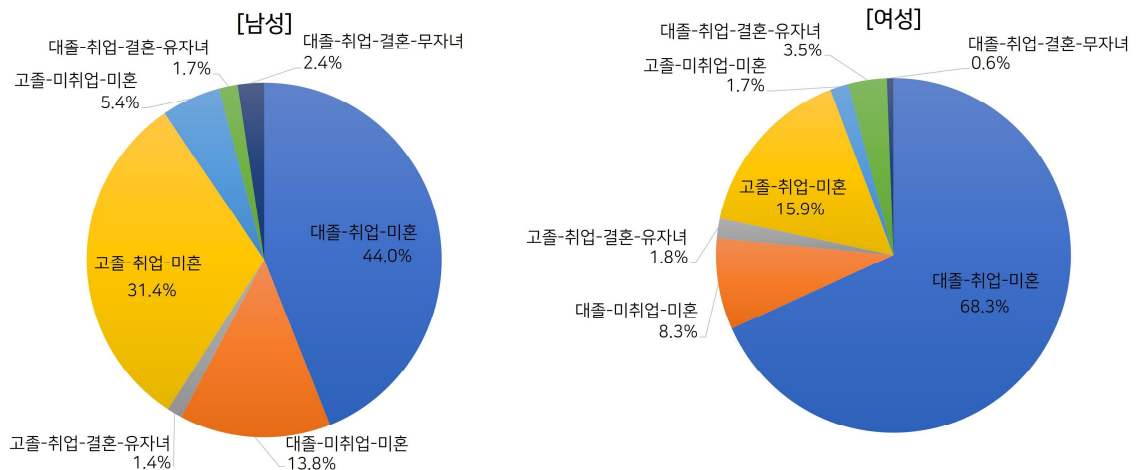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표 4-5> 부산 청년의 젠더별 생애 이행 경로 유형별 현황

유형				부산	남성	여성
고졸	미취업	미혼		3.5%	5.4%	1.7%
		결혼	무자녀	—	—	—
			유자녀	—	—	—
	취업	미혼		23.3%	31.4%	15.9%
		결혼	무자녀	—	—	—
			유자녀	1.6%	1.4%	1.8%
대졸	미취업	미혼		10.9%	13.8%	8.3%
		결혼	무자녀	—	—	—
			유자녀	—	—	—
	취업	미혼		56.7%	44.0%	68.3%
		결혼	무자녀	1.4%	2.4%	0.6%
			유자녀	2.6%	1.7%	3.5%

*출처: <2021 한국청년패널>

<그림 4-16> 부산 청년의 젠더별 생애 이행 경로 유형



*출처: <2021 한국청년패널>

2) 이행 경로별 소요 기간에 따른 청년 생애 이행 경로 분석

□ 이행 경로의 소요 기간 분석 개요

- 결국 청년의 생애 이행 경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청년이 생애과정을 살아가면서 일반적으로 이행을 요구받게 되는 구체적인 이행 경로(진학, 입대, 졸업, 취업, 분가, 결혼, 출산 등)를 자신의 경로로 선택하게 되는가 하는 점과 각각의 이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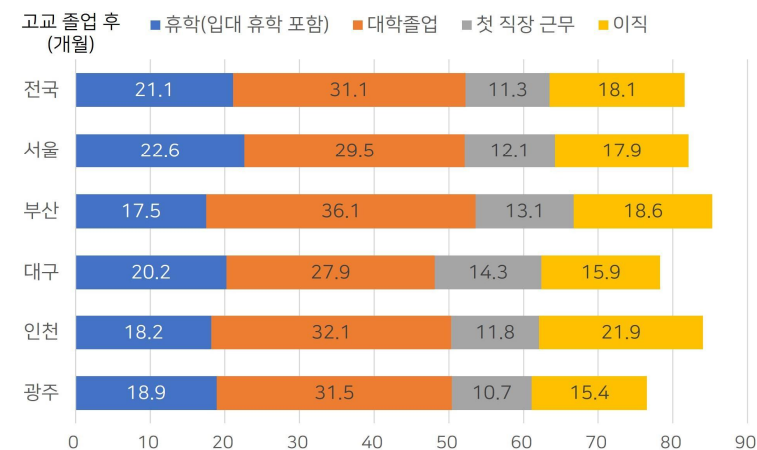
경로에 도달하는 시간을 얼마나 소요하게 되는가 하는 점임. 각각의 이행 경로에 대한 청년의 선택과 그 선택에 소요되는 기간이야말로 젠더별, 교육수준별, 소득/자산 수준, 거주지역 등에 따라 다양한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요 생애 이행 경로의 선택 여부에 따른 이행 경로 유형화를 시도한 데 이어 고교졸업을 시작 시점으로 해서 휴학(입대 휴학 포함), 대학졸업, 첫 직장 근무, 이직에 이르는 교육-노동시장 이행 경로의 지역별, 젠더별 차이를 소요 기간(개월)을 중심으로 분석함.

□ 소요 기간에 따른 이행 경로 비교 분석

- <그림 4-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교 졸업 후 최초 직장에서 다음 직장으로 이직하기 까지 각 경로별로 소요되는 기간을 개월 단위로 계산하여 이를 지역적으로 비교해 본 결과, 전국 청년이 고교졸업 후 최초 휴학에 이르는 기간은 21.1개월, 이후 다시 대학 졸업에 이르는 기간은 31.1개월, 대학 졸업 후 첫 직장 근무에 이르는 기간은 11.3개월, 이후 첫 직장을 이직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18.1개월로 나타남.
- 부산 청년은 휴학(입대 휴학 포함)에 이르는 기간은 17.5개월로 전국 평균은 물론 나머지 특·광역시 보다 상대적으로 짧았던 반면, 휴학 후 대학 졸업에 이르는 기간과 대학 졸업부터 첫 직장 근무에 이르는 기간은 대체로 전국 및 다른 특·광역시에 비해 긴 것으로 나타남(첫 직장 근무에 이르는 기간의 경우 대구만 예외).

<그림 4-17> 고교 졸업 후 이직까지 기간



*출처: <2021 한국청년패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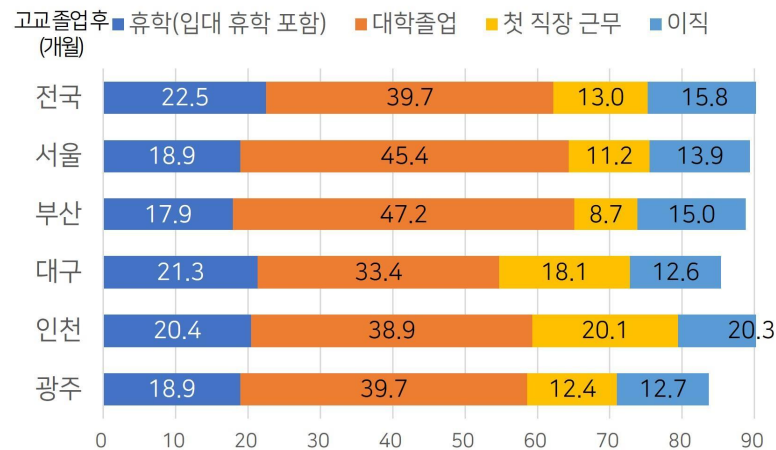
□ 젠더별 차이에 따른 이행 경로별 소요 기간 비교 분석

- 청년 세대의 경우 남성과 여성은 군복무, 결혼, 출산 등 생애 이행 경로 선택에 소요되는 기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있음. 예컨대 청년 남성의 경우 군복무를 위한 입대 목적의 휴학은 대체로 대학생의 경우 2~3학년 시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청년 여성의 경우에는 취업을 앞둔 3~4학년 시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청년 여성의 경우 결혼과 출산에 따른 직장 선택이 달라지는 경우가 일반적임.

- 따라서 젠더별 차이에 따른 생애 이행 경로에 소요되는 기간의 차이를 분석해보는 것은 청년의 생애과정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바, 이 연구에서는 청년 남성과 여성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휴학, 대학졸업, 첫 직장 근무, 이직에 이르는 기간을 개월 단위로 계산하여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함.
- 먼저 <그림 4-18>과 <그림 4-20>에서 청년 남성과 여성이 고교 졸업 후 이직까지에 이르는 소요 기간을 전국 평균을 기준으로 이행 경로별로 그 차이를 분석해보면, 전체적으로 청년 여성이 각 경로에 이르는 소요 기간이 첫 직장 근무부터 이직에 소요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남성에 비해 대체로 짧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부산의 청년 남성의 경우, 전체적으로 서울의 청년 남성과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 특히 고교 졸업 후 휴학에 이르는 기간과 대학 졸업 후 첫 직장 근무에 이르는 기간의 경우 전국 평균은 물론 비교 대상이 다른 특광역시와 비교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남. 그에 반해 휴학 후 대학 졸업에 이르는 기간은 전국 평균은 물론 다른 특광역시와 비교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남.

<그림 4-18> 고교 졸업 후 이직까지 기간(남성)



*출처: <2021 한국청년패널>

- 서울과 부산의 청년 남성의 차이는 <그림 4-19>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그렇다면 이와 같은 차이를 통계적 시각에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연구에서는 서울과 부산 청년 남성의 생애 이행 경로 소요 기간의 차이를 집단 간 평균 비교(t-test)를 통해 살펴보고 그 결과를 분석함. 그 결과, 서울과 부산 청년 남성이 각 생애 이행 경로에 이르는 평균 소요 기간이 표면적으로는 매우 유사해 보이는 패턴을 보이고 있지만 그 통계적 유의성을 정확히 분석해보면 보이는 것과 달리 각 이행 경로에 이르는 평균 소요 기간의 표준편차가 매우 크고 그에 따라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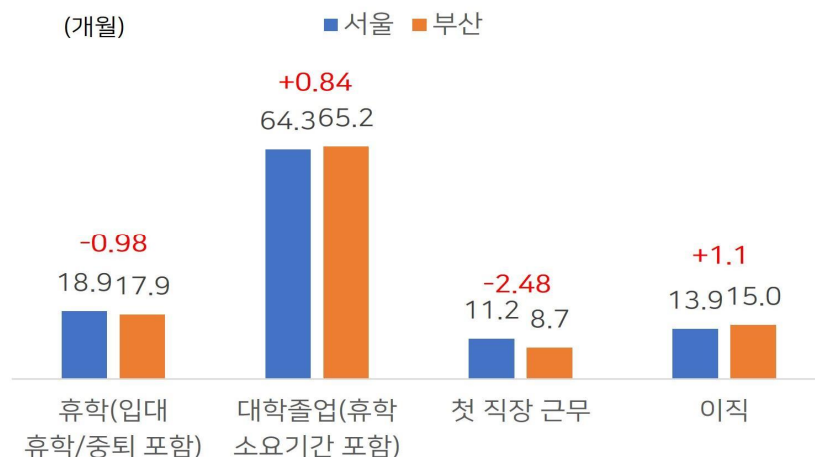
청년 남성과 부산 청년 남성 간 평균 차이가 유의수준 0.001 이하에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것으로 확인됨.

<표 4-6> 서울-부산 청년 남성 생애 이행 경로별 소요기간 비교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서울	부산	서울	부산		
휴학 소요기간 (입대 휴학/중퇴 포함)	18.90	17.92	23.460	14.190	4.454	0.000
대학 졸업 소요기간 (휴학 소요기간 포함)	64.31	65.15	17.425	20.081	-9.172	0.000
대학 졸업 후 첫 직장 근무까지 소요기간	11.19	8.71	13.885	10.809	16.101	0.000
첫 직장 재직기간(이직)	13.93	15.03	14.158	14.076	-12.230	0.000

*출처: <2021 한국청년패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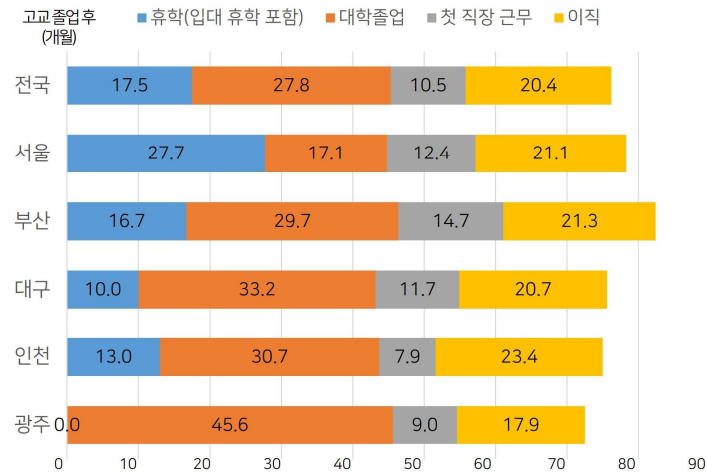
<그림 4-19> 서울-부산 청년 남성의 고교 졸업 후 이직까지 기간



*출처: <2021 한국청년패널>

- 부산의 청년 여성의 경우에는 대학 졸업 후 첫 직장 근무에 이르는 기간이 전국 평균 및 다른 특·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것을 제외하고는 전국 평균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서울과 유사한 패턴을 보였던 청년 남성과는 달리 서울의 청년 여성이 보이는 생애 경로 패턴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그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요구되는 특이 사항으로 보임.
- 또한 부산의 청년 여성의 경우, <그림 4-20>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고교 졸업 후 대학 졸업까지 소요 기간이 46.4개월, 고교졸업 후 첫 직장 근무에 이르는 기간이 61.1개월, 고교 졸업 후 첫 이직까지의 소요 기간이 82.4개월로 모두 전국 평균 및 비교대상인 다른 특·광역시에 비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부산에 거주하는 청년 남성과는 다른 특징을 나타냄.

<그림 4-20> 고교 졸업 후 이직까지 기간(여성)



*출처: <2021 한국청년패널>

**주: 광주 여성(202명)의 휴학에 대한 값 부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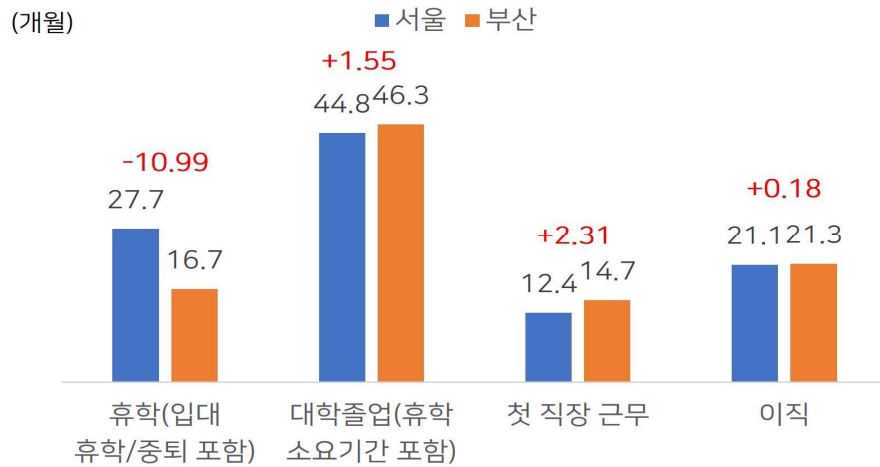
- 부산 청년 여성의 생애 이행 경로 소요 기간을 기준으로 서울 청년 여성과 비교해보면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유사한 패턴을 보였던 청년 남성과는 달리 표면적으로도 매우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4-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산 청년 여성의 경우 고교 졸업 후 최초 휴학에 이르는 기간은 16.7개월로 27.7개월인 서울 청년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짧았던 반면 휴학 후 대학 졸업에 소요되는 기간은 29.7개월로 17.1개월인 서울 청년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김. 전체적으로 부산 청년 여성은 최초 휴학에 이르는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생애 이행 경로에 있어서는 서울 청년 여성에 비해 모두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음.
- 서울과 부산 청년 여성의 생애 이행 경로 소요 기간의 차이를 마찬가지로 집단 간 평균 비교(t-test)를 통해 살펴본 결과, <표 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과 부산 청년 여성이 각 생애 이행 경로에 이르는 평균 소요 기간은 표면적으로 매우 상이해 보이는 패턴을 보일 뿐만 아니라 부산 청년 여성과 서울 청년 여성은 모든 생애 이행 경로에 소요되는 기간의 평균이 모두 0.001 이상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유의한 특성을 보이고 있어 그 차이가 분명함을 확인할 수 있음.

<표 4-7> 서울-부산 청년 여성 생애 이행 경로별 소요기간 비교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서울	부산	서울	부산		
휴학 소요기간(중퇴 포함)	27.66	16.67	19.687	9.558	50.705	0.000
대학 졸업 소요기간 (휴학 소요기간 포함)	44.77	46.32	12.521	13.701	-30.764	0.000
대학 졸업 후 첫 직장 근무까지 소요기간	12.42	14.73	14.713	13.793	-20.330	0.000
첫 직장 재직기간(이직)	21.07	21.25	17.956	22.960	-1.452	0.000

*출처: <2021 한국청년패널>

<그림 4-21> 서울-부산 청년 여성의 고교 졸업 후 이직까지 기간



*출처: <2021 한국청년패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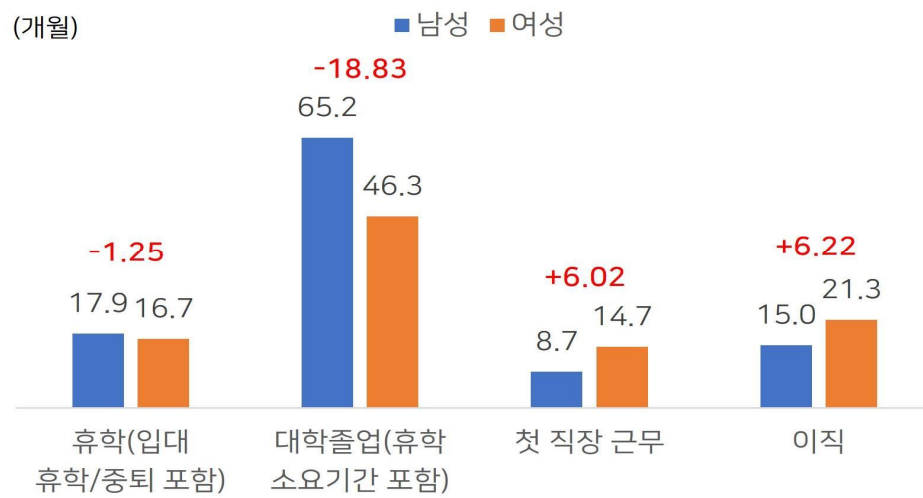
- 부산광역시 청년 남성과 여성의 생애 이행 경로별 소요 기간의 차이를 별도로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아래 <표 4-8>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부산의 경우 청년 남성과 여성의 생애 이행 경로별 평균 소요 기간과 표준편차를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있음. 이러한 차이는 평균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할 수 있는 t-test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모든 생애 이행 경로별 평균 차이에 대한 t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statistically significant) 차이를 보여줄 정도로 충분히 큰 것으로 확인됨. 이는 <그림 4-22>의 부산 청년 남녀의 고교졸업 후 이직까지의 생애 이행 평균 소요 기간을 살펴봐도 시각적으로 쉽게 확인되고 있음.
- 따라서 부산의 청년 남성과 여성은 적어도 생애 이행 경로 소요 기간의 측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결론 도출이 가능해 보이며, 향후 별도의 연구를 통해 부산의 청년 남성과 여성이 왜 그와 같은 생애 이행 경로 소요 기간의 명확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보다 심층적인 설문조사나 심층면접조사 등을 통해 밝혀 볼 필요가 있음.

<표 4-8> 부산 청년 남성과 여성의 생애 이행 경로별 소요기간 비교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남성	여성	남성	여성		
휴학 소요기간(중퇴 포함)	17.92	16.67	14.190	9.558	5.996	0.000
대학 졸업 소요기간 (휴학 소요기간 포함)	65.15	46.32	20.081	13.701	197.285	0.000
대학 졸업 후 첫 직장 근무까지 소요기간	8.71	14.73	10.809	13.793	-38.870	0.000
첫 직장 재직기간(이직)	15.03	21.25	14.076	22.960	-45.398	0.000

*출처: <2021 한국청년패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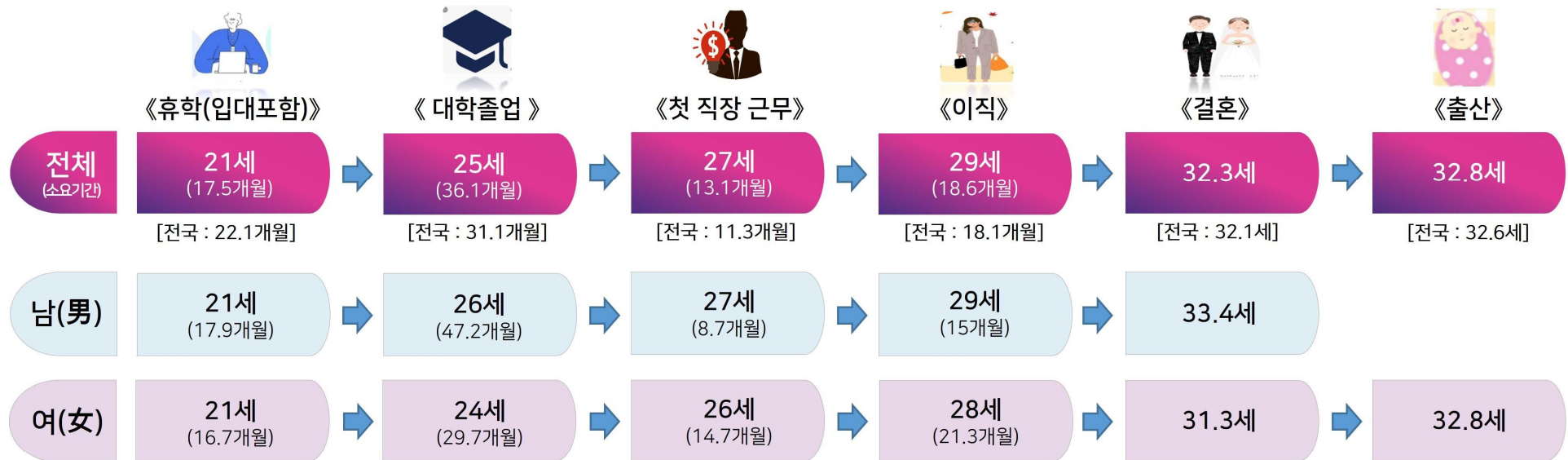
<그림 4-22> 부산 청년의 고교 졸업 후 이직까지 기간 비교(남성·여성)



*출처: <2021 한국청년패널>

<그림 4-23> 부산 청년의 생애 이행 경로 분석에 따른 청년정책 추진방향

부산 청년의 생애 이행 경로 분석에 따른 청년정책 추진방향



*출처: 휴학, 대학졸업, 첫 직장 근무, 이직 경로는 <2021 한국청년패널조사>, 결혼과 출산은 <2021 국가통계포털>

정책 방향

- 전입 청년의 안정적 정착 유도
- 교육과 일자리의 촘촘한 연결
- 부산 청년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 청년의 다양성을 반영한 정책개발

- 청년과 기업간 일자리 인식 간격 해소
- 청년 친화적 일자리 환경 개선
-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강화
- 사회진출과 재진입 프로그램 마련

- 생애주기에 맞는 체계적 주거지원
- 주거환경 개선과 충분한 주거정보 제공
-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 확대
- 청년세대간 갈등해소 방안 마련

주요 정책

- RISE, RIS 등 자선학본격추진
- 부산디지털혁신아카데미 등 실무능력강화
- 월드클래스육성, 마음건강사업확대
- 위원회 청년참여와 커뮤니티 지원 확대

- 청광기업발굴, 우수중소기업발굴단운영
- 청춘기쁨카 지원사업, 청년고용우수기업선정
- 부산청년일하는기쁨카드 지원
- 청년창업주거복합공간, 창업촉진지구 조성

- 청년자산형성, 안심임대주택사업 확대
- 주거복지센터, 주거정보종합서비스 지원
- 만원문화패스, 신진예술인특화지원사업
- 성공청년과사회진입청년과의멘토-멘티사업

V. 주요 지자체 및 해외의 청년정책 동향

1. 주요 지자체²⁾

- 서울 및 인천, 대구, 광주의 청년정책은 환경 변화 및 청년기 이질성을 주목, 청년 생애주기를 고려한 청년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경향을 보임.

1) 서울

- 2022년 3월 서울은 2025 서울청년종합계획 ‘2025 서울청년 행복 프로젝트’를 수립함.
 - 2025 서울청년종합계획은 5년간 6조 2,810억원, 50여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임.
 - 주거정책 예산 비중이 가장 높음. 구체적으로 청년 월세지원, 전세보증보험료 지원, 1인가구 이사비 지원 등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확대 추진할 예정임.

<그림 5-1> 서울 2023 서울청년 종합계획



*출처: 변금선(2023)

- 2023년 기준 총 5개 분야 54개 사업 시행, 약 8,900억원(본예산 기준)이 투입됨.
 - 주거 분야는 주택공급, 주거비 및 주거지원 등 총 8개 사업, 5,314억원이 투입됨.
 - 교육·문화 분야는 장학금, 인생설계, 교육훈련, 예술지원 등 총 9개 사업, 148억원이 투입됨.

2) 이 연구는 타 지자체 청년정책 특성 파악을 목적으로 청년정책 전문가 세미나 “지역 청년정책을 말한다: 현황과 과제” (23.8.10)를 개최한 바 있음. 이 부분은 세미나 발표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함.

- 복지·생활은 금융자산 형성, 금융지원, 건강지원 등 12개 사업, 1,733억원이 투입됨.
- 참여·공간은 청년참여, 청년공간 대관 등 총10개 사업, 115억원이 투입됨.
- 일자리는 취업, 창업, 근로환경지원 등 총 15개 사업, 1,626억이 투입됨.

<그림 5-2> 서울 청년정책 현황



*출처: 변금선(2023)

- 서울은 청년기 이질성 대응과 이행기 불평등 완화를 목표로 청년 생애과정에 따른 정책 대상 및 방향을 설정함.
- 이행기 청년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 추진.
- 이행 격차 완화를 위한 우선지원 대상 표적화.
- 청년 개인의 이행과정(경로)에 맞는 끊임 없는 ‘정책 연결’.

<그림 5-3> 서울 청년정책 추진방향



*출처: 변금선(2023)

2) 인천

- 인천은 현재 제1차 기본계획단계(2020~2024)에 있으며, 비전 “청년의 도전을 응원하는 청년 행복 1위 도시, 인천”을 중심으로 4대 추진전략과 20대 중점 전략과제를 설정함.
- 2023년 기준 80개 단위사업 중 취·창업 분야 27개 사업(52,449백만원), 주거·생활 분야 20개 사업(78,598백만원), 문화·참여 분야 15개 사업(10,997백만원), 교육·체험 분야 18개 사업(15,385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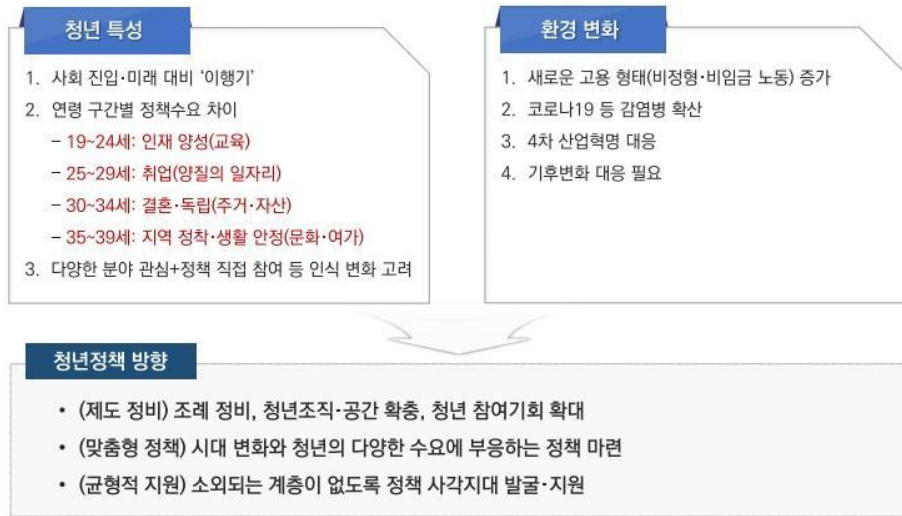
<그림 5-4> 인천 청년정책 추진전략 및 중점 전략과제

4대 추진전략		20대 중점 전략과제	
전략별 중점 과제	취·창업 지원 양질의 일자리 창출	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 확대 ②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 지원 확대 ③ 청년 창업 육성(소셜벤처, 청년농업인 등) 신규 ④ 창업 벤처파크 조성 신규 ⑤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지원 신규	
	주거·생활 지원 지역사회 안착	⑥ 청년 월세 지원 확대 ⑦ 산업단지 근로자 주거 지원 신규 ⑧ 청년 대상 전·월세 임대 확대 ⑨ 산업단지 근로자 교통비 지원 신규 ⑩ 청년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확대	
	문화·참여 지원 일과 휴식의 균형	⑪ 청년 문화예술특화거리 조성 신규 ⑫ 청년 직장인을 위한 퇴근길 콘서트 신규 ⑬ 청년정책 통합 플랫폼 구축 신규 ⑭ 청년센터 구축 신규 ⑮ 청년공간 유유기지 확대 구축 확대	
	4차 산업 인력 양성 청년인프라 구축	⑯ 직업계고 학생 MRO 교육 지원 신규 ⑰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육성 신규 ⑱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 확대 ⑲ AI 전문기술인력 양성 확대 ⑳ 탄소중립 등 환경 관련 청년 참여 지원 신규	

*출처: 최영화(2023)

- 인천의 청년정책 방향은 제도 정비, 맞춤형 정책 실시, 균형 지원임. 이는 청년 특성 및 환경 변화를 고려한 것임.
- [청년 특성] 청년이 사회 진입·미래 대비 ‘이행기’에 위치해 있다는 점, 연령 구간별 정책수요의 차이가 있다는 점, 다양한 분야의 관심 및 정책 직접 참여 등 인식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함.
- [환경 변화] 새로운 고용 형태(비정형·비임금 노동)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 4차 산업혁명 및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함.

<그림 5-5> 인천 청년정책 방향



*출처: 최영화(2023)

□ 핵심적 청년정책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음.

-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목표와 추진전략 명료화 및 정책영역 설정.
- 청년층 요구도가 높은 분야를 우선적으로 사업화.
- 4차 미래산업, 바이오, 항공 등 전략산업과 연계한 청년창업 지원.
- 산업단지·항만 대개조 사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배가.
-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복지 정책 대폭 확대 및 중점 추진.
- 청년 문화여가 분야 정책개발 확대.
-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 등 지역정착 연계 청년정책 개발.
- 청년센터, 청년공간 등 활동 인프라 구축.
- 청년 네트워크, 청년조직 등 청년협의체 확대 육성.

3) 대구

- 대구는 현재 제2차 기본계획단계(2021~2025)에 있으며, “청년의 미래와 함께하는 대구”를 비전으로 4대 전략, 72개 세부추진과제를 선정함.
- 추진방향으로 i)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변화 극복 및 미래설계 지원 강화, ii) 주거비 부담 완화, 청년생활안정 등 정주환경 개선, iii) 청년유출 감소와 지역유입을 위한 정책 본격 추진을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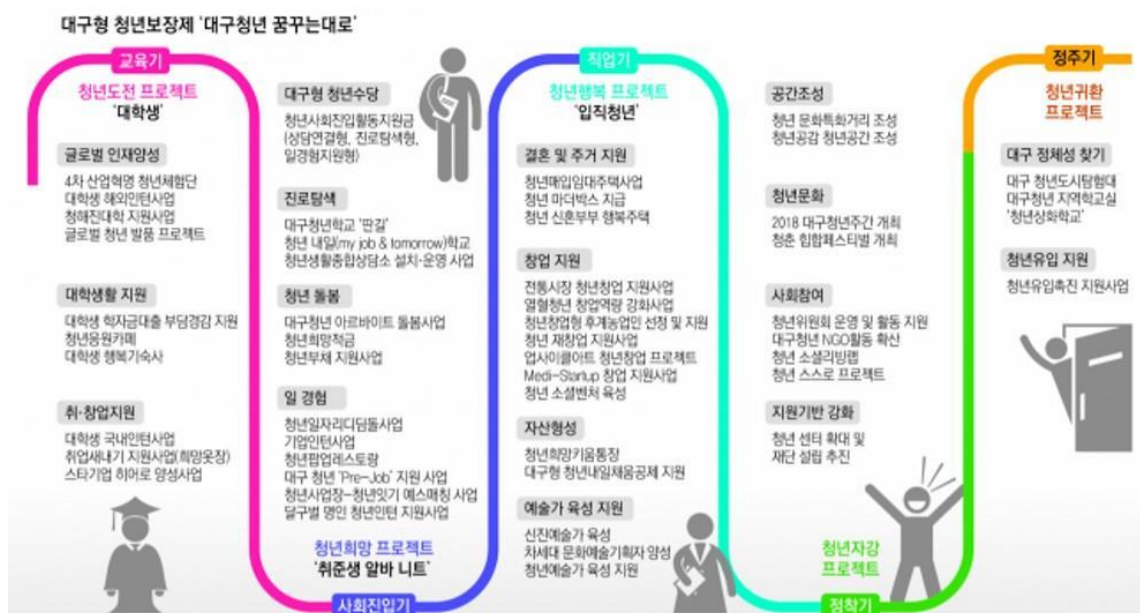
<그림 5-6> 대구 제2차 청년정책기본계획(2021~2025)



*출처: 2022년 대구청년정책시행계획(2022)

- 대구는 청년 계층별-생애주기별 맞춤형 자립지원을 하는 청년보장제 ‘대구청년 꿈꾸는대로’를 실시하고 있음. 예컨대, 대학생에게는 국내외 교류활동을 지원하는 글로벌 발품프로젝트, 청년응원카페사업 등을, 취업준비생에게는 대구형 청년수당, 단기 아르바이트청년을 위한 청년희망적금 사업을 추진함. 창업청년에게는 결혼 및 주거지원 정책과 지역정책을 유도함. 출향청년들에게는 대구청년의 정체성을 찾고 귀환을 권하는 사업을 실시함.

<그림 5-7> 대구 청년보장제 ‘대구청년 꿈꾸는대로’



*출처: 대구광역시 청년정책 (<https://www.daegu.go.kr/YouthPolicy/index.do>)

4) 광주³⁾

□ 광주는 2022년 제2기 청년정책 기본계획(2022~2026)을 수립함.

○ 광주광역시 ‘청년도시’ 조성을 목표로 ‘청년의 활력과 행복이 있는 청년시민도시 광주’를 비전으로 설정함.

– 청년도시는 청년이 시민적 주체로서 자유와 권리를 공평하게 누리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정책이 활발히 운영되는 도시정부를 의미함.

○ 제2기는 ‘청년도시’의 의미를 확장해 청년의 기본적 권리 보장과 안전한 삶터 조성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는 도시에 중점을 둠.

○ 제2기 광주청년정책 기본계획 비전 체계는 다음과 같음(<그림 5-8> 참조).

– 주요 방향과 가치로 자립, 안전, 즐거움, 참여, 연대를 제시함.

- 자립은 자립의 힘을 갖추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임.
- 안전은 어떠한 위기적 상황에서도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안전망임.
- 즐거움은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교류함으로써 활력과 행복을 주는 일상임,
- 참여는 청년의 자신감과 역량 증진을 위한 자기 주도의 사회참여 활동을 확대하는 것임,
- 연대는 청년이 다른 세대와 적극적인 관계를 형성해 청년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것임.

– 세부 분야별 핵심 추진전략의 경우 일자리는 지역 정착 지원, 주거는 편안한 휴식 보장, 교육은 청년시민의 역량 증진, 복지문화는 안전하고 즐거운 일상, 참여권리는 참여와 연대의 청년도시를 목표로 함.

<그림 5-8> 제2기 광주청년정책 기본계획 비전 체계

비전	청년의 활력과 행복이 있는 청년시민 도시 광주				
주요 목표	청년시민의 정당한 권리 보장 + 청년광주의 미래 활력 증진				
가치	자립, 안전, 즐거움, 참여, 연대				
핵심분야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세부목표	지역 정착 지원	편안한 휴식 보장	청년시민의 역량 증진	안전하고 즐거운 일상	참여와 연대의 청년도시
분야별 추진 전략	지역에서 잘 살아 가는 데 힘이 되는 일자리 보장	집 걱정을 덜고 편안한 휴식이 가능한 주거 공간 조성	활력 넘치는 사회 활동을 위한 청년 시민의 역량 강화	위기에도 건다는 안전한 삶과 즐거운 일상 실현	참여와 연대로 지속가능한 청년 도시 조성
주요과제	1. 청년 일자리 이행 통합 프로그램	1. 청년주거 공급 확대	1.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 지원 확대	1. 지역연대형 청년 금융복지 체계 구축	1. 5개 자·구 청년터 설립 운영
	2. 청년 공공공간 확대	2. 주거비용 부담 완화	2. 고졸 청년 취업지원 및 역량 강화	2. 청년 마을건강 서비스 체계 강화	2. 광주시민참여 예산 위원회 청년과 신설
	3. 지역 정착 위한 신산업 채용 지원 <신규>	3. 주거정보 및 법률 서비스 확충	3. 청년 자립능력 강화	3. 청년 취업지원 확대	3. 온라인 매체 활용 청년참여 장구 다원화
	4. 광주청년 일·생활·드림 확장	4. 주거 안전 환경 개선	4. 지역대학 간 인재 양성 협력 기반 구축	4. 청년 1인 가구 생활 지원	4. 청년 혁신 프로젝트 활성화
	5. 코로-19 대응 단기 일자리 및 고용서비스 체계 개선		5. 지역대학 외국인 유학생 지원	5. 지속가능한 청년 문화 생태환경 조성	5. 세대 간 연대 프로젝트 활성화
				6. 청년활동 공유 문화공간 확대	
				7. 문화정책 기반의 청년참여 확대	

*출처: 광주광역시(2022, 67)

3) 광주광역시(2022). “청년도시 광주 실현을 위한 5개년 청년정책 기본계획” 보고서를 참조함.

2. 해외 국가

- 주요 선진국인 OECD 국가들 중에서 미국, 일본, EU 회원국 등의 청년의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과 관련된 정책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제2기 부산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추진전략 및 세부사업 방안을 제시함.
- 일본, 미국, EU 등 OECD 회원국들도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 수도권 집중현상 등과 같은 최근 한국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유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음.
 - 2021년 OECD 보고서 “The Updated OECD Youth Action Plan” (OECD 2021)은 OECD 국가들의 청년들이 비슷한 정치/경제/사회적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청년정책의 필요성을 제언하고 있음.
 - 보고서는 OECD 회원국들의 18~29세 사이의 청년들의 약 85%가 중등교육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평균 실업률이 14%에 이르며 정부정책에서 청년이 소외되었다고 느끼는 비중이 40%를 넘는다고 평가함.
 - OECD는 이 보고서에서 청년이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정책, 직업훈련 및 고용정책, 주거정책 등 적극적인 청년정책의 필요성을 제언함.
- 미국 및 일본 등 기존 선진국의 경우 각 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정책을 구상하여 실시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세계화, 기후변화 등과 같이 청년세대가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이슈 등에 청년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음.

1) 일자리/창업 사례

- 일본 고베 ‘스타트업 에코시스템’(Startup Ecosystem)
 - 국내기업 뿐만 아니라 해외기업의 취업에도 관심이 높은 청년세대의 니즈와 세계화, 글로벌화라는 시대적 조류에 맞춰 해외기업의 유치를 통한 청년세대의 일자리 창출의 사례로 일본 고베시의 ‘스타트업 에코시스템’(Startup Ecosystem)이 있음.
 - 고베시의 ‘스타트업 에코시스템’은 해외 참신한 스타트업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으로 일본의 중앙정부, 고베시, 일반기업, 시민사회 등이 협조하여 해외 스타트업 기업들이 손쉽게 고베시에 모여들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함.

<그림 5-9> 일본 고베시의 ‘스타트업 에코시스템’(Startup Ecosystem)



*출처: 일본 고베시의 스타트업 에코시스템 홈페이지 (<https://kobestartup.com/>)

- 성공이 불확실한 스타트업 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법인등기 전, 등기완료 후 등 스테이지별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
 - 법인등기 이전에 스타트업 기업이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임시 사무실 제공, 시장조사비용 지원, 기업등록절차 간소화, 무료경영컨설팅을 제공함.
 - 등기완료 후에는 사무실 임대비용 지원 및 세제혜택 등을 제공함. 특히 지역 주민을 11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 1인당 약 300만원 보조금을 지급하여 지역 고용창출에 기여
 - 스타트업 기업이 선택하는 오피스 형태(단독오피스, 공동오피스, 시에서 제공하는 공공 오피스)에 따라 맞춤형 보조금을 제공함.
- 고베시 ‘스타트업 에코시스템’은 잠재력 있는 해외기업을 유치하는 동시에 해외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지역 청년들이 지역 사회 내에서도 이러한 기회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 핀란드 오희야모(Ohjaamo) ‘원스톱서비스센터’

- 유럽연합은 2008년 미국 발 세계금융위기로 인해 초국가적 문제로 대두된 청년실업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회원국들의 청년보장제 시행을 권고, 이에 따라 핀란드는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청년정책을 추진함.
- 핀란드는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공공고용서비스 기관인 고용경제개발처(The Office of Employment and Economic Development)와 연계하여 지자체 차원에서 2015년 수도 헬싱키에 오희야모 원스톱서비스센터를 설립함.
 - 원스톱서비스센터는 취업, 창업, 복지, 교육 및 다양한 영역에 걸쳐 청년들에게 필요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15~29세 사이의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예약없이 방문 및 상담을 제공함.

- 이 기관의 용이한 접근성은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존의 청년 고용 제도와 비교하여 차별성을 가짐.
- 설립 이후 18개월 동안 6,000명 이상의 청년들이 센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였고, 이에 따라 센터는 핀란드 전국으로 확산됨.
- 2019년 기준 오희야모 원스톱서비스센터는 60여 지방정부에 의해 채택되어 전국에 50개 이상의 센터를 두고 있으며, 총 이용자 수는 4만 3257명, 총 방문 횟수는 약 15만 6천 회로서, 핀란드의 대표적인 청년정책 성공사례로 평가됨.

□ 싱가포르 ‘스킬스퓨처’(SkillsFuture)

-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싱가포르는 2013년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국민 우선 고용정책을 실시하였고, 이로 인한 인력 공백을 자국민으로 대체하고자 자국민의 직무역량 향상 정책을 추진함.
- 싱가포르는 2016년 자국민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스킬스퓨처’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였고, 이 정부 차원의 고용정책은 청년정책을 포함함.
- 인력부, 교육부, 그리고 인력개발청이 연계 및 협력하여 자국민의 학교 교육, 직무 교육, 그리고 경력 개발을 하나로 통합한 평생교육시스템을 도입함.
- 구체적이고 전문화된 서비스를 위해 인력부와 교육부 산하에 새로운 기관을 설립함.
 - 교육부 산하기관 SkillsFuture Singapore(SSG)는 산업 수요에 맞춘 인력의 기술 향상에 집중함.
 - 인력부 산하기관 Workforce Singapore(WSG)는 산업 수요에 맞춘 고용지원과 기업과의 소통을 통한 인력 배치에 집중함.
- 구직자, 근로자들을 학생, 사회초년생, 그리고 경력자로 분류하여 범주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
 - 직업학교와 전문학교 학생의 경우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인턴쉽 기회를 제공함.
 - 졸업한 학생의 경우 전공 관련 기업에서 12~18개월간의 직업훈련을 제공함.
 - 정부에서 인증된 기관에서 자격증 및 프로그램 이수한 학생의 경우 지원금을 제공함.
- 싱가포르의 ‘스킬스퓨처’ 정책은 하나의 통합시스템으로서 여러 부처 간의 연계를 통한 정책 수행의 전문화와 효율성을 동시에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짐.

<그림 5-10> 싱가포르 ‘스킬스퓨처’ 프로그램 구성도



*출처: APEC Human Resource Development Working Group (2018)

2) 주거/생활안정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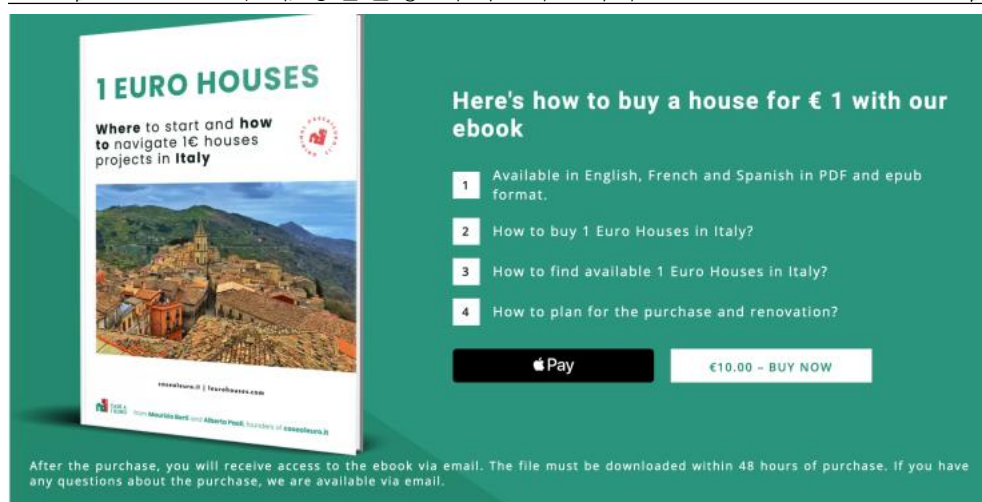
□ 이탈리아 ‘Casa a Euro’ 정책

- 주요 OECD 국가들에서 도입되고 있는 빈집공급정책에서 청년 주거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음.
 - 이탈리아, 포르투갈, 일본 등 다수의 OECD 국가들은 낮은 출산율에 따른 출산율 감소, 청년세대의 대도시로의 유출, 도시의 확장과 새로운 주택거설에 따른 주거중심의 이동 등에 따라 도시의 원도심이나 농촌지역에서 인구감소와 노후화된 빈집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유럽연합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유럽연합 회원 국가들의 전체 공급주택 중에 약 17%가 빈집이며 그리스, 포르투갈 등과 같은 국가들은 전체 공급주택 중 25%가 빈집으로 남아있다고 함(Hansenes & Ciesla 2022).⁴⁾
- 유럽의 도시들은 노후화된 도심의 주택을 매입하여 낮은 가격에 공급하고 재건축 및 개축비용에 대한 저리대출, 세제혜택 등을 제공하여 실수요자들에게 낮은 가격에 높은 접근성과 질 좋은 주거환경을 구축 할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이탈리아 로마는 ‘Casa a Euro’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노후화된 빈집을 실거주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⁵⁾

4) Pascal Hansenes and Wojciech Ciesla, 2022.12.14. Investigate Europe. “The Empty House: A window into Europe’s Vacant Property Problem.” <https://www.investigate-europe.eu/en/2022/the-empty-house-a-window-into-europes-vacant-property-problem/> (최종확인: 2023.3.7.).

- 2020년부터 로마시 당국은 원도심의 노후화되고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소형 주택들을 매입하여 실거주자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들에게 1유로에 매각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시는 개인들이 매입 후 집을 개보수하고 실거주한다는 약정을 하는 경우 1유로에 집을 판매하고 있으며 개보수 비용 등에 대해서도 저리대출, 세금혜택 등의 혜택을 제공함.
 - 실수요자가 구매 가능한 집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온라인 빈집 포털 등과 같은 플랫폼(<https://1eurohouses.com/>) 등도 제공되고 있음.
 - 로마시의 'Casa a Euro' 정책은 도시의 인구 유출을 막고 원도심의 노후화와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원도심의 도시환경 개선 및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시행됨.
- 대규모 도시재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원도심에 공실로 남겨진 주택을 매입하여 실수요가 있는 청년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원도심 재생 효과가 있음. 또한, 높은 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낮은 집값과 질 높은 주거환경, 그리고 원도심과 높은 접근성 등은 청년세대의 필요성에도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그림 5-11> 주거/생활안정 사례: 이탈리아 'Casa a Euro' 프로그램



*출처: 이탈리아 온라인 빈집 포털 1 Euro Houses 홈페이지 (<https://1eurohouses.com/>)

□ 일본 '빈집은행'(Akiya Bank)

- 일본의 빈집 중개 사업인 '빈집은행'은 주택구매의 실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청년 세대에게 구매가능한 집에 대한 공인된 정보를 제공하는 모델로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음.
- 이탈리아의 Casa a Euro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인구감소와 신축주택의 과공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빈집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례임.
- 일본 총무성 발표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일본의 6천만 호 중에서 약 7.5%에

5) Lucy Thackray. 2022.3.2. Independent. "Italy's one euro houses: who can buy one and how does it work?" <https://www.independent.co.uk/travel/europe/italy/italy-one-euro-homes-buy-house-b2274302.html> (최종확인: 2023.3.7.)

해당하는 8백만 호가 빈집(akiya)에 해당한다고 하며, 2030년까지 일본 전역의 약 12.5%의 집이 빈집으로 방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인구감소와 인구유출로 인해 중소도시 중심으로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는 빈집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실수요자와 빈집을 연결시켜 주는 Akiya Bank라는 포털을 개설하여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 Akiya Bank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일반 사기업도 중첩적으로 구축하여 다양한 층위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사기업이 구축한 Akiya Bank의 경우에는 일본어뿐만 아니라 영어로도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내 실수요뿐만 아니라 국외 투자자의 투자수요도 흡수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Akiya Bank 포털에는 집에 대한 개괄적인 정보와 더불어 사진, 평면도, 판매가격, 구매절차 등 실수요자가 실제로 구매 시에 필요한 일체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함.
- 또한, 일본정부는 2018년 「Act on Special measures for Revitalization and Reuse of Vacant Houses」를 제정함. 그리고 이를 근거로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인구유출에 따른 공동화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실거주자 중심으로 농촌의 폐가를 낮은 가격에 공급하고 개축비용 지원, 세금혜택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Batarags & Teh. 2021)⁶⁾.
- 한국과 비슷한 주택 과공급과 인구감소, 인구의 수도권집중화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에서 빈집이 심각한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지역의 빈집을 싼 가격에 공급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높은 집값을 감당할 수 없는 청년세대에게 현실적인 가격으로 자가 마련의 기회를 제공함. 이는 다양한 세제혜택 및 자금지원을 통해 질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사례라고 할 수 있음.

<그림 5-12> 일본 'Akiya Bank' 홈페이지



*출처: 일본 'Akiya Bank' 홈페이지 (<https://www.akiyabanks.com/>)

6) Lina Batarags and Cheryl Teh. 2021.6.26. Insider. "Japan is trying to lure people into rural areas by selling \$500 homes, but it's not enough to fix the country's 'ghost town' problem" <https://www.insider.com/japan-ghost-towns-population-vacancy-rates-akiya-banks-2021-6> (최종확인: 2023.03.08.)

□ 영국 ‘유니폴’(Unipol) 플랫폼

- 대학생의 주택탐색비용, 주거비 절감, 주택상태 정보를 포함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주도로 대응책을 추진함.
- 1975년 영국 북동부에 위치한 대학교들은 리즈대학교, 리즈베켓대학교, 브라드포드대학교를 주축으로 대학생들의 주거문제를 돕기 위한 주거 서비스 플랫폼인 ‘유니폴’을 비영리기관으로 설립함.
 - ‘유니폴’의 이사회는 대학교와 학생회 대표가 모두 참여하여 양측의 입장을 모두 반영함.
- ‘유니폴’은 대학생들에게 중개서비스, 컨설팅, 주택 임대를 위한 정보를 무료로 제공함.
 - 현재 ‘유니폴’은 온라인 플랫폼으로 운영되어 대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함.
 - 서비스는 도시 선택, 검색 조건, 주택 선택 및 집 구경, 그리고 계약까지 총 4단계로 구성되어 탐색부터 계약까지 한 번에 가능함.
 - 대학교 기숙사와 민간소유 주택을 모두 중개함.
 - 대학교 기숙사의 경우 학생 지정권은 대학교가 가지며, 유니폴은 기숙사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함.
 - 민간소유 주택의 경우 임대인에게 일정 수수료를 받아 서비스를 제공함.
 -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함.
 - 임대인 평가 시스템 및 임대인과 갈등을 겪는 대학생들에게 컨설팅을 제공함.
 - 임대인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함.
- ‘유니폴’은 주거 문제를 가진 그 지역 대학생뿐만 아니라 사회초년생들이 가장 쉽고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서비스로 발전함.
 - 대학교, 학생, 그리고 지역 사회 간의 연계를 통한 윈-윈(win-win) 구조를 확립함.
- 영국의 ‘유니폴’은 최근 들어 전세 사기 등 주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한국 사회에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이 될 수 있음.

□ 스웨덴의 청년 주거 정책

- 스웨덴의 청년에게 주거문제는 고용문제 보다 더 큰 문제이며, 실제로 2016년 기준 전년 대비 청년실업률은 감소한 반면 주택 가격은 상승하는 추세를 보임.
- 점점 더 열악해지는 주거문제로 인한 청년인구의 이웃 국가로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청년의 주거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추진.
- 스웨덴 정부는 주택보조금, 공공주택 보급 및 청년층의 소득 증가를 위한 복합적인 정책을 실시
 - 주택보조금의 경우 29세 미만의 청년들에게 적용되며, 이는 개인의 소득과 임대료에 따라 결정
 - 공공주택의 경우 2020년까지 250,000세대의 공공주택을 보급할 예정이며, 컨테이너를

- 개조하여 만든 이동식 주택(mobile home)을 제공
- 청년층 주거문제의 근본적 이유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식하여, 청년들의 고용을 위한 고용 교육 정책을 병행

3) 문화 사례

□ 미국 캔자스시티의 ‘아트 인 더 루프’(Art in the Loop)

- 미국 캔자스시티(Kansas City)의 ‘아트 인 더 루프’(Art in the Loop)는 캔자스시티 도심의 버스정류장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아트페어 행사로 지역의 젊은 예술가들의 창작활동 및 작품 활동을 지원하고 원도심 지역을 재생시키려는 목적에서 시행되는 대표적인 아트페어 행사임.
- ‘아트 인 더 루프’는 2014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도심의 주요 버스 정류장에 예술작품을 설치하거나 행위예술, 공연 등을 진행함.
- ‘아트 인 더 루프’는 젊은 예술 창작자들에게는 지속적이고 다양한 작품 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효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부수효과도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됨.
 - 시민들의 관점에서 버스정류장이라는 일상 공간이 작품 활동의 대상이 되면서 일상에서 손쉽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낙후된 원도심 등 도시의 주요한 지역을 관통하는 버스정류장에 예술작품이 설치되면서 도시경관의 향상 및 낙후된 원도심 지역의 재생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음.

<그림 5-13> 미국 캔자스시티의 Art in the Loop 출품 작품



*출처: 미국 ‘Art in the Loop’ 홈페이지 (<https://www.artintheloop.com/>)

□ 이탈리아 ‘보너스 컬처라’(Bonus Cultura)

- 이탈리아는 청년층 지원의 목적에서 청년들의 문화에 대한 관심과 소비 증진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문화 활동 기회를 가지지 못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함.

- 2016년 마테오 렌치 정부는 청년을 위한 바우처(voucher) 형태의 공공문화서비스인 ‘보너스 컬처라’ 정책을 시행함.
 - 정부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이탈리아에 거주하는 모든 18세의 청년에게 한정하여 매년 500유로 (약 한화 70만원)을 문화바우처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함.
 - 지급된 500유로는 영화, 콘서트, 서적, 박물관, 극장 및 무용 등 다양한 문화 영역에서 사용 가능함.
- 시행 첫해인 2016년 총 60만명이 1억6,300 유로를 사용하여 양적 성과를 이룸
 - 그러나 구체적인 이용 실태 계획 없이 시행된 이 정책은 다양한 문화 영역에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전체 소비의 80%가량이 도서 구매에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짐.
 - 그럼에도 불구하고 렌치 정부의 ‘보너스 컬처라’정책은 유럽의 대표적인 청년의 문화 사례로 손꼽히고 있으며, 이웃 국가 프랑스가 ‘Pass Culture’ 정책을 실시하는 계기를 마련함.

4) 참여 사례

- 텍사스 주립대의 ‘커뮤니티연계센터’(Center for Community Engagement)
 - 지역대학 인재의 자발적인 사회참여와 대학-지역사회의 연결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사례로서 미국 텍사스 주립대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의 커뮤니티연계센터 (Center for Community Engagement)의 사례를 찾아볼 수 있음.
 - 텍사스 주립대의 커뮤니티연계센터는 대학생과 시민사회의 가교역할로서 대학생의 시민으로의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활동을 개발 및 지원함. 또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지역사회를 통한 배움 활동이나 지역사회 주도의 활동을 학생들에게 소개함으로써 대학생들이 지역사회와 교류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기여할 수 있도록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대학생 및 대학의 구성원이 시민사회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The Project’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사회정의와 지역사회 이슈에 대해 토론하고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네트워크인 ‘Community Engagement Collective’, 방중 지역사회 체험활동인 ‘Alternative Break’ 등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대학생들이 지역의 한 시민으로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대학생들이 직접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를 통한 배움 활동 등도 지원하고 있음. 대표적으로 대학에서 시청에 인턴십을 파견하여 시정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하는 ‘Austin City Hall Fellows’ 프로그램이나 지역사회 문제를 대학생들이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는 ‘Community-based Learning Symposium’ 프로그램, 강의실에서 배운 내용을 지역사회의 실제 사례에 적용하고 이를 팟캐스트 형태로 제작하는 ‘The Bridge Project’ 등이 있음.

- 이 밖에도 지역사회의 주요한 시민사회 프로그램과 이벤트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하고 있음.

- 커뮤니티연계센터는 다양한 프로그램은 대학생들에게 유용한 시민교육의 장을 제공하고 대학생의 시민으로서의 역할 인식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실질적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대응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 그리고 이는 지역사회와의 유대감도 증진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
- 지방중소도시들이 경험하고 있는 지역인재 유출 문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역의 가장 핵심적인 인재라 할 수 있는 지역대학의 대학생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이자 한 개인의 시민으로서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영역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형성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대학생-지역대학-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음.

VI. 제2기 청년정책 기본계획수립(2024~2028) 방향

1. 분야별 예산추계 및 주요사업 ▶ 6개분야 73개 사업, 5년간 총 1조 3202억원

(단위:백만원)

<표 6-1> 2기 청년정책 주요사업 및 예산추계

주요사업	예산추계					
	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총계	1,320,187	79,693	300,312	307,868	281,107	251,207
1. 일자리(13개)	45,378	9,870	9,887	9,767	7,927	7,927
우수 중소기업 발굴단 구성·운영	250	50	50	50	50	50
청끝(청년이 끝리는) 기업 발굴·매칭 지원	3,000	200	700	700	700	700
워털루형 코업 프로그램 운영	6,000	1,200	1,200	1,200	1,200	1,200
산학연계 현장실습 브릿지 사업	12,508	1,800	2,677	2,677	2,677	2,677
대학-기업-공공기관 맞춤형 인턴십 체결 확대	-	-	-	-	-	-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조성	7,600	3,800	1,900	1,900	-	-
창업촉진지구 지정 및 운영	4,000	800	800	800	800	800
다양한 분야 기술과 접목된 창업촉진 사업 추진	-	-	-	-	-	-
부산 청년친화형 기업 발굴 및 지원	-	-	-	-	-	-
청년친화형 기업 대상 근로환경 개선 사업 발굴 및 지원	-	-	-	-	-	-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8,900	1,780	1,780	1,780	1,780	1,780
부산청년 기쁨카 지원사업	3,120	240	780	660	720	720
청년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 추진	-	-	-	-	-	-
2. 교육(14개)	121,338	126,318	299,210	305,910	277,410	204,510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추진	800,000	-	200,000	200,000	200,000	200,000
지역산업맞춤형 자립대학 협력반 지역혁신사업 추진	85,400	85,400	-	-	-	-
글로벌대학 지원 사업 추진	95,000	10,000	25,000	30,000	30,000	-
부산형 에콜42:청년창의아카데미 설립	2,500	500	500	500	500	500
부산 청년 성장도약 프로젝트 추진	9,900	-	600	2,100	3,600	3,600
부산디지털혁신아카데미 운영	89,600	29,800	29,800	30,000	-	-
월드클래스 육성 사업	2,050	410	410	410	410	410
취업교육 컨트롤 타워 설립·운영	-	-	-	-	-	-
청년 맞춤형 JIT(Just in Time)컨설팅 체계 정비	-	-	-	-	-	-
청년정책 시행시 취업교육 프로그램 소개 의무화	-	-	-	-	-	-
청년정책 지원대상자 대상으로 취업교육 안내자료 배부	-	-	-	-	-	-
취업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적 모니터링 수행	-	-	-	-	-	-
정례적 청년 직업교육 프로그램 수요조사	-	-	-	-	-	-
청년의 직장 및 근로가치 파악 및 홍보	-	-	-	-	-	-
3. 주거(16개)	78,254	15,892	15,494	15,570	15,649	15,649
청년맞춤형 공적 임대주택 공급	40,320	10,080	10,080	10,080	10,080	10,080
역세권 임대주택 공급	-	-	-	-	-	-
부산형 신혼부부 럭키7하우스 지원	6,772	730	1,414	1,490	1,569	1,569
재개발 임대주택 공공매입 후 공급	-	-	-	-	-	-
산업단지 내 청년임대주택 공급	-	-	-	-	-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	-	-	-	-	-

주요사업		예산추계					
		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청년 세어하우스 공급	-	-	-	-	-	-
	청년희망월세 지원	6,022	1,222	1,200	1,200	1,200	1,200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8,000	1,600	1,600	1,600	1,600	1,600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3,000	600	600	600	600	600
	청년 이사비 지원	1,000	200	200	200	200	200
	청년 안심주거 인프라 구축	1,000	200	200	200	200	200
	청년 1인가구 안심홈 세트 지원	1,000	200	200	200	200	200
	주거복지센터 운영	560	560	-	-	-	-
	청년 주거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500	500	-	-	-	-
	주거법률 상담센터 구축	-	-	-	-	-	-
4. 복지(7개)		87,560	23,192	13,592	14,392	18,192	18,192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	74,100	20,500	10,900	11,700	15,500	15,500
	청년자산관리 사업	600	120	120	120	120	120
	청년 신용회복 지원사업	2,000	400	400	400	400	400
	청년마음이음 사업	1,500	300	300	300	300	300
	청년도전지원사업	6,860	1,372	1,372	1,372	1,372	1,372
	청년 일상회복 지원	2,500	500	500	500	500	500
	마음건강과 사회적응력 향상지원	-	-	-	-	-	-
5. 문화(7개)		11,300	2,020	2,320	2,320	2,320	2,320
	신진예술인 인큐베이팅 경력개발지원	1,000	200	200	200	200	200
	청년 그래피티 비엔날레	1,000	200	200	200	200	200
	청년만원문화패스	3,500	700	1,000	1,000	1,000	1,000
	청년문화축제 개최	2,000	400	400	400	400	400
	부산문화회관 청년회원제	-	-	-	-	-	-
	부산청년문화공간 청년작당소 운영	1,100	220	220	220	220	220
	사상인디스테이션 운영	1,500	300	300	300	300	300
6. 참여·권리(16개)		13,245	2,609	2,709	2,809	2,509	2,609
	부산광역시 각종 위원회 위촉직에 청년위원 참여 확대	-	-	-	-	-	-
	부산청년 패널조사	1,200	400	400	400	-	-
	구·군 청년책임관제 운영	45	9	9	9	9	9
	부산청년센터 운영	4,500	700	800	900	1,000	1,100
	부산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300	60	60	60	60	60
	부산청년플랫폼 고도화	500	100	100	100	100	100
	청년 리빙랩 운영	500	100	100	100	100	100
	찾아가는 청년정책 홍보	750	150	150	150	150	150
	청년활동 마일리지 제도	750	150	150	150	150	150
	다양한 청년참여 정책 추진	-	-	-	-	-	-
	동네 청년활동공간 활성화 지원	1,500	300	300	300	300	300
	청년공간 페스타	1,500	300	300	300	300	300
	청년주간 행사	1,000	200	200	200	200	200
	지역간 새로운 협력모델 발굴	-	-	-	-	-	-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700	140	140	140	140	140
	세대공감 사업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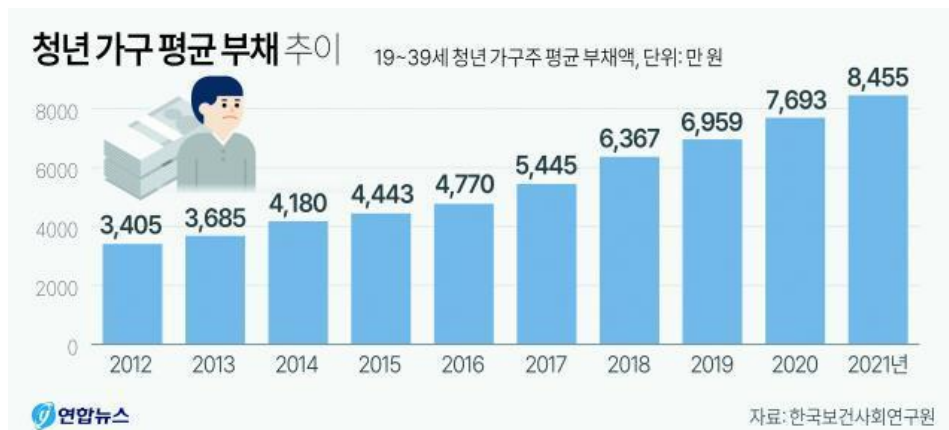
*RISE는 부산시가 교육부에 요청한 금액

2. 청년 삶, 청년정책 그리고 부산

1) 다중격차시대, 이질적 집단 ‘청년’

- 제2기 청년정책 기본계획수립에 앞서 어떠한 시각에서 지금의 청년 삶과 청년정책을 논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숙고가 필요함.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청년 삶과 청년정책 논의의 주요 쟁점들을 제시함.
- 다중격차시대로 진입한 한국사회와 청년의 삶
 - 한국사회는 단순한 빈부격차를 넘어 소득, 자산, 주거, 교육, 문화, 건강 등 다양한 부분에서 사회구성원들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다중격차는 이와 같은 불평등의 여러 차원들이 서로 중첩되면서 구조화되는 현상임(황규성 2016).
 - 청년의 삶 역시 다중격차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 청년의 소득 빈곤율은 중장년층보다 낮지만, 주거, 건강, 고용, 사회문화적 자본 등과 같은 다차원적 빈곤율은 오히려 중장년층보다 높음(김문길 외 2017).
 - 기존 청년정책은 일자리 문제가 핵심임. 청년정책은 곧 일자리 정책이나 다름 없었음. 이는 일반적으로 취업이 되면 결혼, 출산과 같은 생애주기 전환기 문제들이 해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이윤주·김기현·하형석 2017).
 - 그러나 지금의 청년은 취업 이후에도 다양한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음. 대표적으로 주거문제, 부채문제, 정신건강 문제 등을 꼽을 수 있음.
 - 특히, 부채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이 급증함.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10년 새 연소득의 3배 이상의 부채를 지고 있는 청년 가구주의 비율이 2.6배 증가했음(곽윤경 외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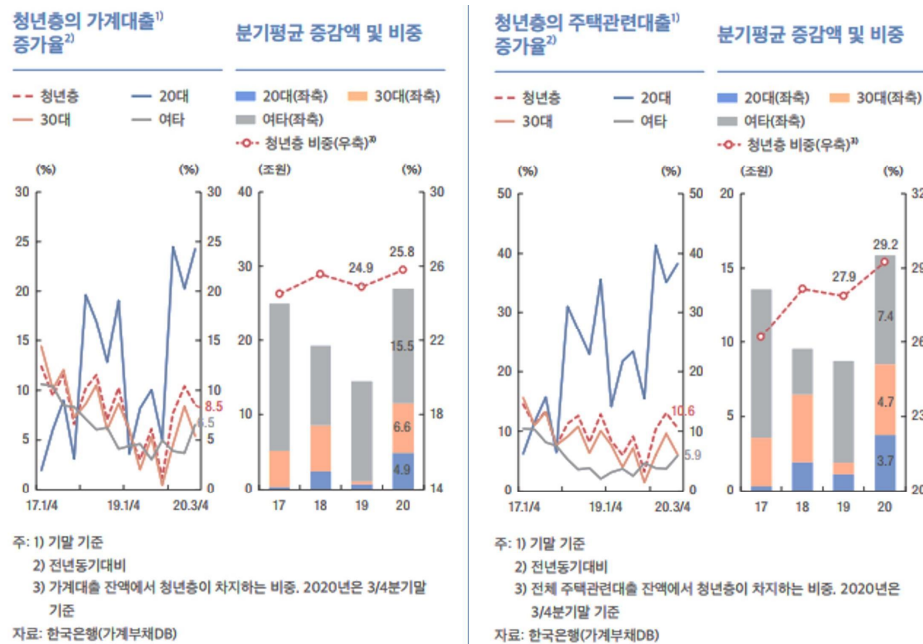
<그림 6-1> 청년가구 평균 부채 추이



*출처: 연합뉴스(2023/02/27)

- 2018~2022년 4년간 가계대출 총액이 20대는 62%, 30대는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증가율 23%를 상회함. 청년이 대출을 받는 이유는 전세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 생활비 대출 등 다양함.
- 청년(20~39세)의 가계부채 중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두드러짐. 이들 세대의 가계부채 증가율 변화를 살펴보면, 2019년 대비 가계대출 및 주택관련 대출이 모두 가파르게 증가함(<그림 6-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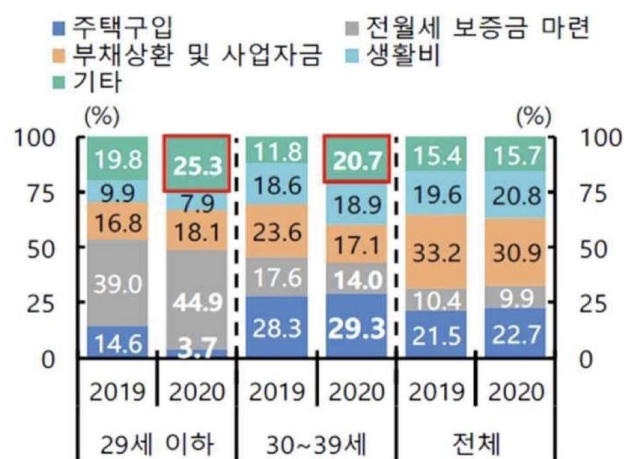
<그림 6-2> 청년 가계대출 및 주택관련대출 증가율(%)



*출처: 한국은행(2020, 22-23)

- 청년의 신용대출 목적은 20대와 30대가 상이하게 나타남. 20대는 전·월세 보증금 마련 비중이 가장 큼. 이는 2019년 39%에서 2020년 44.9%로 증가했음. 반면, 30대는 주택구입 대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2019년 28.3%에서 2020년 29.3%로 증가함.

<그림 6-3> 연령별 신용대출 목적 비교



*출처: 이민규(2021)

- 또한, '기타' 목적으로 신용대출을 받는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20대 및 30대 모두 기타 비중이 증가함. 20대의 경우 2019년 19.8%에서 2020년 25.3%로 증가함. 30대 역시 2019년 11.8%에서 2020년 20.7%로 증가함. 기타 내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최근 청년 사이에서 증가하고 있는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 열풍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이러한 영향으로 청년기에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생애 과업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늘어남.

- 국무조정실 발표(2023년 3월)에 따르면, 청년(19~34세)의 58%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3분의 2 이상이 독립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독립을 계획하지 못하는 이유는 '경제적 여건을 갖추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57%를 차지함.
- 같은 조사에 따르면, 청년의 약 82%는 미혼이었으며, 미혼 청년 중 결혼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75%였으며, 자녀 출산의향에 대해서는 63%만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특히 여성 청년 중 결혼과 자녀 출산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음.

□ 이질적 집단으로서 청년과 청년정책

○ 기존 청년정책은 청년을 하나의 동질적 집단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했음(변금선·김기현 2019). 그러나 지금의 청년은 단일 집단이라기보다 이질적인 집단을 구성함(김수아 2021). 이들은 타 세대에 비해 가족 간 사회경제적 지위 격차와 라이프 스타일의 분화가 큰 사회에서 사회화를 경험함(김영미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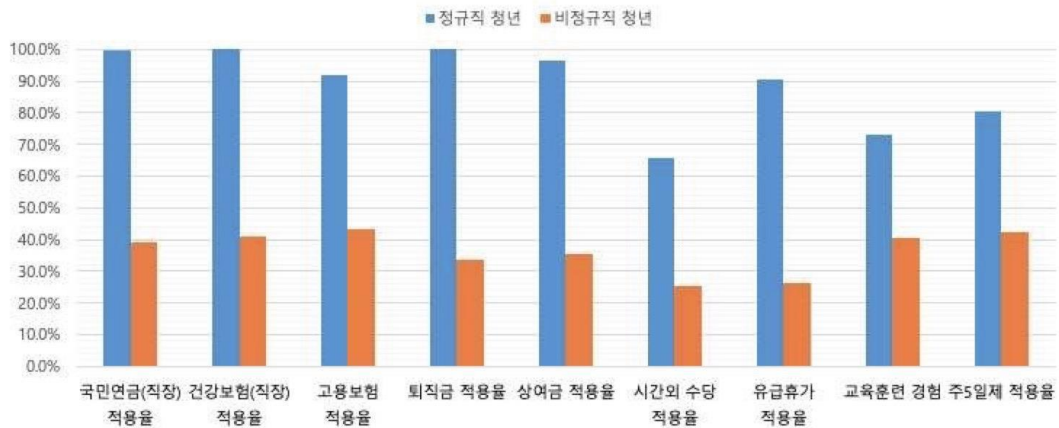
- 한국의 청년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기회구조의 영향을 많이 받음.

○ 이러한 환경에서 다른 세대에 비해 청년의 동일 세대 내 불평등 격차가 클 수 있음. 즉, 청년 내부의 격차와 이를 초래하는 사회구조적 불평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김수아 2021; 변금선·김기현 2019).

○ 청년 내에서도 소득과 자산 불평등이 확대되는 추세이며, NEET 청년 장기실업자군 등 취약계층이 증가함.

- 청년취업자 중 약 10%는 저임금 근로자에 해당하며, 고용형태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임. 비정규직의 저임금 비율은 25%로 정규직과의 격차가 점점 확대되는 추세임(이주미·김태완 2022).
-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기본 급여뿐만 아니라 사회보험가입, 퇴직금, 시간외 수당 등 소득보장 관련 급여와 유급휴가 적용, 교육훈련, 주 5일제 등 근로 환경 전반에서도 격차가 존재함(서복경 외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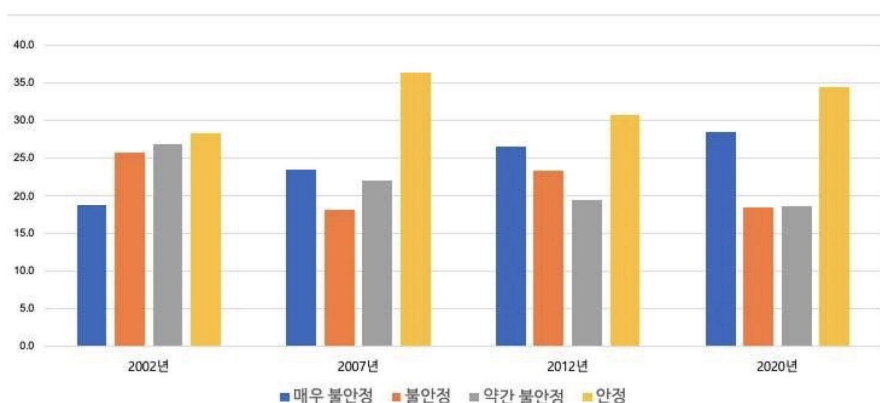
<그림 6-4> 정규직과 비정규직 청년의 격차



*출처: 김종진(2020); 신진욱(2022); 서복경 외(2022) 재인용.

- 학업도 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으며 취업훈련도 받지 않는 젊은 층을 의미하는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and Training) 규모가 크게 증가함. 실업 또는 불안정 일자리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취업은 더욱 어려워지고, 저임금 일자리를 반복하는 경향이 나타남.
- 따라서 청년정책 수립 시 청년의 이질성과 다양성이 반영되어야 함. 무엇보다 청년 내 격차 심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그간 우리 사회 청년 담론의 중심은 ‘영끌’, ‘빚투’ 등 청년 내에서도 경제적 능력을 갖춘 집단이었음. 그러나 청년의 절반을 구성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양자의 균형을 맞추려는 정책추진이 필요함.
- 2000대 이후 청년 내 계층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임(이승윤 백승훈 2021).

<그림 6-5> 청년의 양극화-고용, 소득, 사회보험의 안정성



*출처: 이승윤 백승훈(2021); 신진욱(2022); 서복경 외(2022) 재인용.

2) 삶의 질의 종합적 제고방안, ‘청년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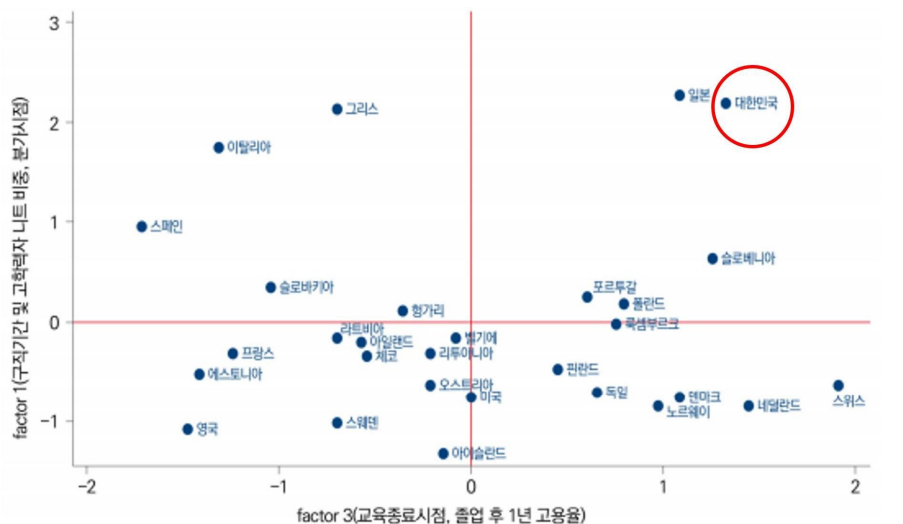
□ 생애 측면을 고려한 청년 삶의 질 제고

- 청년정책의 단기 과제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는 것. 그러나 일자리는 교육, 결혼·출산 등과 같은 청년의 생애 경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 따라서 청년정책은 장기적 도전과제로서 청년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추진되어야 함.

□ 정책과 정책의 ‘촘촘한’ 연결

- 정책추진 시 청년의 생애 경로 특성에 따른 정책과 정책의 연결이 고려되어야 함. 교육과 노동시장이 연결되어 있고, 노동시장은 결혼, 출산 등 가족 형성과 연결되어 있음.
- 한국의 정책은 제도와 제도의 관계가 느슨하고 청년 삶의 이행 시기 역시 늦음(이상직 2023).⁷⁾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한국 청년은 교육 수준은 높으나, 구직 기간이 길고 고학력 NEET 비중이 높음. 또한 분가 및 결혼, 출산 시점도 상대적으로 높음.
- 앞서 부산 청년의 생애 이행 경로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산 청년의 ‘대졸-미취업-미혼’ 유형은 10.9%로 전국 평균(6.7%)를 크게 상회할 뿐만 아니라, 다른 4개 특·광역시(서울 6.1%, 대구 6.8%, 인천 10.0%, 광주 9.1%)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와 함께 휴학 후 대학 졸업에 이르는 기간과 대학 졸업부터 첫 직장 근무에 이르는 기간이 대체로 전국 및 다른 특·광역시에 비해 긴 것으로 나타남. 이와 같은 부산 청년의 특성은 청년정책 중 일자리와 교육 분야의 촘촘한 연계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시켜 줌.

<그림 6-6> 청년의 생애 경로 지형: 교육-노동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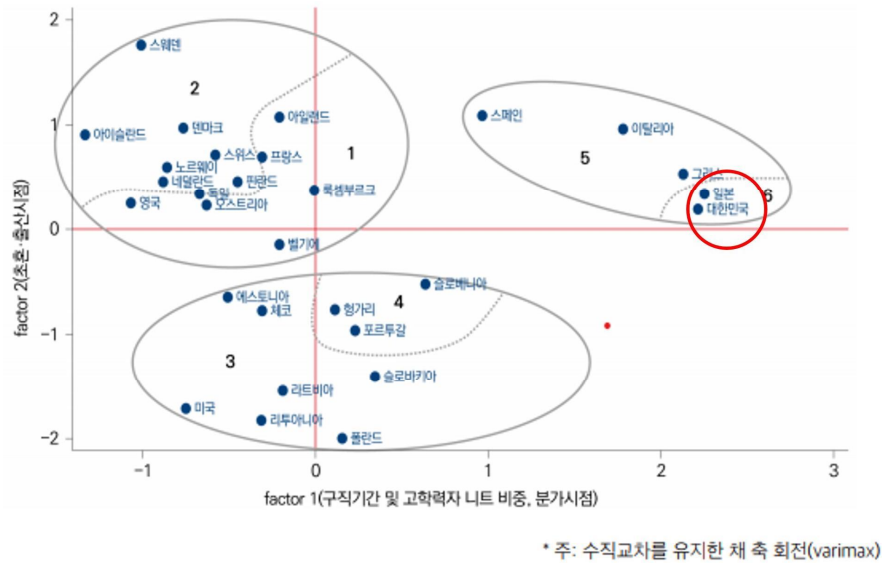


* 주: 수직교차를 유지한 채 축 회전(varimax)

*출처: 이상직(2023, 13)

7) 분석 대상 및 연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상직(2023) “한국 청년은 언제 집을 떠나는가: OECD 국가 비교” (국회미래연구원) 참조.

<그림 6-7> 청년의 생애 경로 지형: 노동시장-결혼·출산



*출처: 이상직(2023, 12)

○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교육, 일자리, 주거 등과 같은 청년 삶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촘촘한 연결이 필요함. 예컨대, 직업훈련교육이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정책. 또한 노동시장 격차를 완화하는 정책을 통해 청년이 결혼, 출산, 문화, 참여권리 활동에 장애를 느끼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

3) 지역격차시대, 기회의 경유지이자 미래의 정착지 ‘부산’

□ 청년문제는 곧 지역문제

- 청년문제는 곧 지역문제임. 최근 수도권 대 비수도권 간 지역격차가 심화되면서 지역소멸이슈가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로 부상함. 수도권 인구는 2020년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음(구정태 2021). 반면, 비수도권의 인구 비중은 2020년 49.8%까지 떨어졌으며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구정태 2021). 지역의 청년유출 증가는 지역격차 심화의 원인이자 결과로 작용함.
- 부산 역시 청년의 이탈 현상을 위기로 인식하고, 이에 따른 부산의 미래성장동력 약화를 우려함. 최근 10년간 동남권 인구 순유출 규모는 약 29만 명에 달해 전국 모든 경제권역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같은 기간 부산은 11만 5천명의 순유출이 발생함(BNK경제연구원 2022). 그 중 수도권으로 이동한 인구가 약 9만 명으로 80% 이상을 차지함.

□ 지역변화 주체의 다양화: 부산 ‘거주’ 청년에서 ‘이동’ 청년까지

- 지역격차 그리고 지역의 청년유출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함. 더 나은 기회를 위해 부산을 떠나는 것이라면 권장할 수 있는 문제임. 이렇게 볼 때 지역 인구의 자연증감과 사회증감에 대한 대응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조희정 2023).
- 무엇보다 지역변화의 주체를 다양화하는 방안이 있음. 부산에 사는 거주 청년뿐만 아니라 부산을 찾아오는 이동 청년까지 포함한 청년정책, 나아가 지역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최근 타 지자체들은 ‘생활인구’ 개념을 통해 인구 유입을 장려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함. 생활인구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을 포함함.
 - 대표적으로 경상북도의 듀얼 라이프 사업, 전라북도의 ‘함께인구’ 등을 꼽을 수 있음.

□ 기회의 경유지 ‘부산’

- 부산은 경남권내 또는 다른 광역지자체(특히 서울)와의 교류 접점이 많은 지역임. 다수의 경남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 근거리의 부산에서 더 많은 기회를 경험한 후에 상황이 나아지면 서울로 간다는 이동계획을 가지고 있음. 즉 그들은 ‘기회의 경유지’로서 제2의 도시인 부산을 거쳐가는 곳으로 인식함. 따라서 부산 거주 청년의 불만을 해소하는 정책과 더불어 근거리의 경남 중소도시 청년을 효과적으로 유입하는 정책이 필요함.
- 부산 청년의 유입 및 유출 원인은 모두 일자리와 교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특히, 유입의 경우 교육 문제로 부산으로 이주하는 청년 비중이 높는데 18~24세가 이에 해당함. 2021년 기준으로 이들 집단의 46.8%가 대학 진학을 위해 부산으로 이주했고, 그 규모는 증가 추세임(<2022 부산청년패널조사>).
 - 20대 초반 인구의 부산 순이동(순유출-순유입)은 2019년 처음으로 664명 증가를 기록함. 그 배경에는 대학 도시라는 교육 인프라,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집값과 생활비가 자리함(국제신문 2020/11/11). 실제 2020년 기준으로 부산 대학의 신입생 출신 지역을 살펴보면, 경남과 울산 등 타지 출신 비율이 최근 5년 사이 4% 증가함(국제신문 2020/11/11).

□ 미래의 정착지 ‘부산’

- 민선 8기 이후 부산은 디지털금융도시, 시민행복 15분 도시,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등 글로벌 허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음. 이러한 환경은 관계, 문화 등을 중요하게 여기는 청년에게 충분히 매력적으로 인식될 수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다양한 이유로 부산을 찾아오는 청년을 포용하는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비전 및 추진전략

1) 비전

- 부산 1기 청년정책 기본계획(2019~23) 비전은 크게 다음과 같은 발전을 거듭함.
 - 2018년 비전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부산”을 설정해 관 주도 정책에서 청년이 주체가 되는 추진체계로의 전환
 - 2019년 민선 7기 청년정책 로드맵을 통해 부산 청년자치정부 계획 수립, 청년주도의 정책 수립 및 운영이 가능한 구상 발표
 - 2020년 청년주도 사회혁신 추진계획(청년정책 3.0) 통해 청년이 사회혁신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구상 발표
 - 2022년 비전 “탄탄한 청년지대 청년G대 구축”을 설정해 청년중심, 청년 친화, 청년 맞춤을 중심으로 청년정책이 곧 도시정책이라는 추진체계로의 전환
 - 결과적으로 1기 청년정책은 정책 주체 및 정책 특성의 변화를 중심으로 정책추진의 전환기를 맞이함.
 - 정책 주체는 관 주도 정책에서 청년 주도 정책으로의 변화를 꾀함.
 - 정책 특성은 청년정책에서 도시정책으로의 변화를 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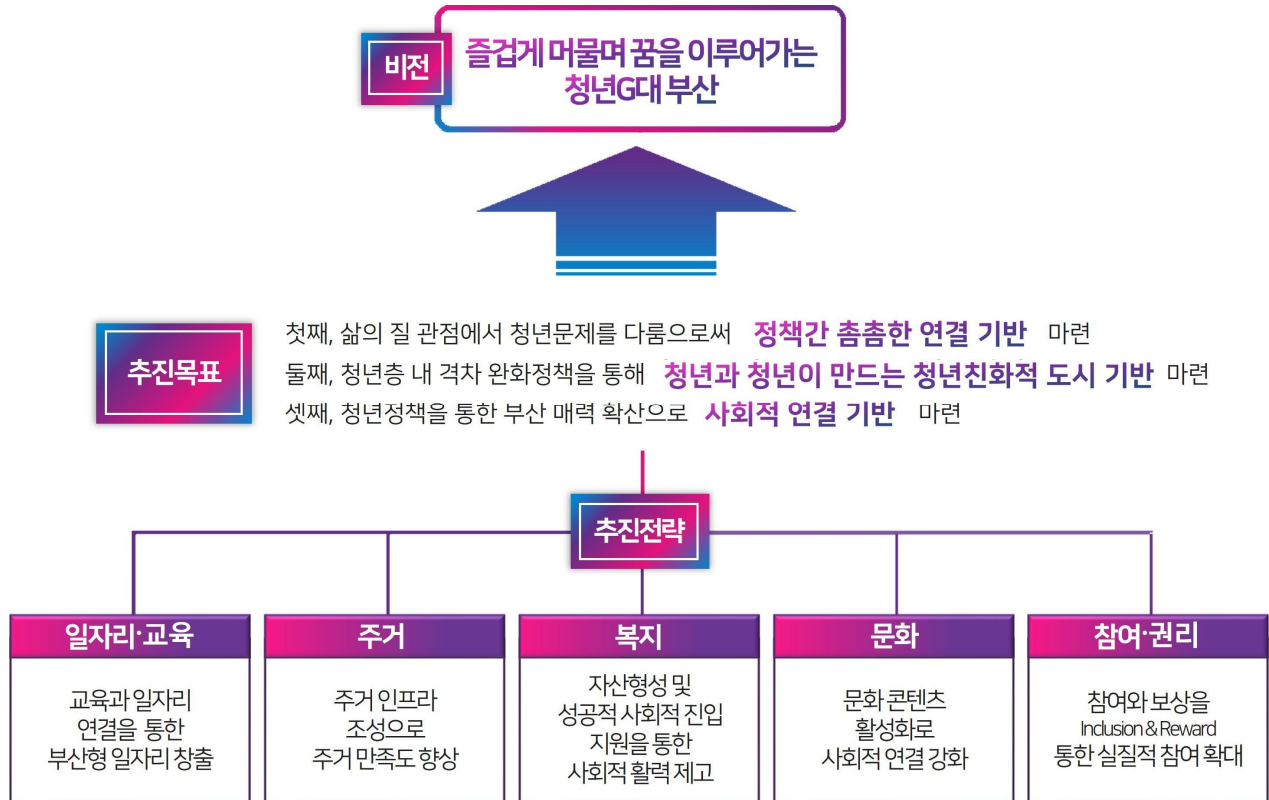
<그림 6-8> 1기 부산 청년정책 흐름



- 부산 2기 청년정책 기본계획(2019~23)의 비전은 1기의 정책적 효과가 발휘되어 “청년친화도시, 부산”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함. 이에 따라 2기 청년정책의 비전은 “즐겁게 머물며 꿈을 이루어가는 청년G대 부산”으로 설정함.
 - 첫째, 삶의 질의 관점에서 청년문제를 다룸으로써 정책 간 촘촘한 연결 기반을 마련함.
 - 둘째, 청년 내 이질성을 고려, 내부 격차 완화를 통해 청년과 청년이 함께 만들어가는 청년친화적 도시 기반을 마련함.
 - 셋째, 청년정책을 통해 부산의 매력을 확장하면서 사회적 연결을 강화함.

2) 추진전략

<그림 6-9> 2기 청년정책 기본계획(안): 비전 및 추진전략



- **일자리 교육분야** : 대학교육 혁신을 유도하는 자산학모델로 교육에서 일자리로 연결
 - RISE, RIS, 워털루형 코업프로그램 등 현장중심의 대학교육 혁신 완성.
 - 수도권과의 임금격차 해소(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사업)하는 사업 확대.
 - 권역별 창업인프라 및 창업프로그램 내실운영으로 창업을 통한 일자리 확충
- **주거 분야** : 생애주기 맞는 체계적인 주거지원
 - 전·월세(20대)지원 정책에서부터 생애 첫 내집마련(30대) 정책까지 촘촘한 지원
- **복지분야** : 청년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확대
 - 첫 직장 취업 청년을 위한 자산형성지원, 저활력 청년 마음건강 사업 확대
- **문화분야** : 수준높은 문화인프라와 프로그램 확충으로 문화향유 기회 확대
 - 공공문화시설 위주 수준높은 문화공연 개발과 청년예술가 창조활동 집중 지원
 - 저소득청년 문화프로그램 참여지원 정책 확대

- 참여·권리분야 : 다양한 계층 참여확대와 참여 청년에 대한 보상과 피드백
 - 부산시 부서내 각종위원회 구성시 청년위원 비율 확대
 - 온·오프라인 활용한 홍보방안 확대와 청년 거버넌스 확충

4. 핵심 세부사업

1) 일자리 분야

(1) 1기 정책평가

- 부산은 “기업이 원하고 청년이 좋아하는 일자리 지원”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였음.
 - 지역 소재 우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발굴·탐방 프로그램 및 인턴십을 강화하여 지역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및 취업을 유도하고 있음.
 - 임금, 직무내용, 복리후생 등 청년 선호도가 높은 청년이 끌리는 기업 발굴 및 매칭 프로젝트를 추진함.
 - 주요 사업으로는 ‘청년두드림센터 운영’,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청년 사회진입 활동비 지원’ 등 구직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추진함.
 - 그리고 ‘기술창업 인큐베이팅’, ‘글로벌 셀러 청년창업가 양성’,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등 창업지원 및 재직자 복지 향상을 도모함.
- 부산은 청년 중심의 고용서비스를 위한 전주기 원스톱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음.
 - ‘청년두드림센터 운영’을 통해 맞춤형 취업상담, 컨설팅 및 취업역량 강화,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함.
 - ‘청년두드림센터’ 운영과 함께 청년일자리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청년 일자리에 대한 전주기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취업-사후관리-재취업을 지원함.
 -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 사업을 추진했으며, 일자리와 교육 사업의 연계를 통해 진로탐색, 역량개발, 취업상담 등을 단계별로 지원함.
 - 또한 교육사업과 연계한 ‘부산권 대학 내의 취업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을 통해 취·창업협의회 운영,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및 기업-대학-컴패니언십을 개최함.
- 청년 취업역량 강화와 해외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취업 면접 정장 대여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드림옷장을 운영하고 있고, ‘청년두드림센

터 운영' 사업을 통해 지역기업-청년 희망이음 지원 및 기업탐방 등을 추진함.
○ 또한 '부산청춘드림카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취업연수생 고용사업' 및 '청년해외 취업 지원사업(박람회)'를 개최함.

□ 지역에서 주도하는 청년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있음.

-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부산 청년 파란일자리 사업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귀환·경력직 일자리 매칭을 추진함.
- 더불어 지역 기반의 청년을 대상으로 소셜벤처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사회적 기업가를 육성하였고, '부산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을 추진 중임.
- 아울러 인구감소 지역인 영도구를 중심으로 청년 대상의 창업을 육성하고 있음.

□ 부산 청년정책의 일자리 사업은 1기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2기에는 기존 사업을 유지하면서도, 전국 <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와 <2022 부산청년패널조사> 및 FGI 분석을 참고하여 기존 사업의 재편 및 새로운 사업의 발굴이 요청됨.

- 인력양성에 초점을 두는 일자리 사업은 교육 사업과 차별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기본적으로 일자리 사업은 교육 사업과 맞물릴 때 시너지 효과를 가짐.
- 2기 사업에서는 일자리와 교육 사업 간의 선순환적 구조 확립이 중요하며, 특히 연령대별로 맞춤형 일자리 및 교육 사업을 연계할 필요성이 있음.
- 1기 일자리 사업의 대부분은 예산규모가 10억 미만의 소규모 사업이었음. 사업의 효과와 지속성을 고려할 때, 2기 추진목표 및 전략에 맞추어 확대 및 통합이 필요함.
- 현재 부산 청년이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고, 중소기업 취업 의사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1기 때 추진되었던 우수 중소·중견기업의 발굴·탐방 및 인턴십 체결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일자리를 창출해야 함.
- 워라밸과 복지수요 등 소위 'MZ세대'의 수요를 반영한 질적 측면의 근로환경 개선과 다양한 근로조건을 모색하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며, 이는 특히 부산 청년이 많이 종사하는 중소기업에서 더욱 요청되는 사안임.
- FGI에서도 확인되었듯이, 부산 청년의 경우 부산에 거주하고 싶은 의사가 많고, 부산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요구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존 사업의 재편 혹은 새로운 사업의 발굴을 통해 "청년친화적인 부산형" 일자리 창출이라는 접근이 필요함.

□ 더불어 전체 일자리 사업 예산의 약 75%를 차지하고, 국비의 약 97%를 차지(2023년 부산광역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기준)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역시

일정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확인되어, 조정 및 재편을 모색해야 함.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청년일자리와 관련된 대표적 사업이고, 지역 선정은 공모 추진되고 있음. 지역혁신형(1유형), 상생기반대응형(소멸 위기지역창업, 창업성장플러스, 2유형), 지역포용형(3유형)의 3가지로 구분됨.
- 2013년을 기준으로 신규 유형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서 직접일자리 제공은 43개(1유형 및 3유형 총계 452명, 약 10,792백만 원), 창업 지원은 6개(2유형 23명, 약 379백만 원)로, 상대적으로 창업 지원이 매우 저조했음.
 - 신규 유형의 창업 지원 사업으로는 동구 청년 창업지원, 로컬크리에이터 성장 플러스 사업(시 사업), 연제구 청년 창업가 꿈이룸 사업, 해운대 H스타트업 성장모멘텀 구축 사업, 기장군 청년 드림플러스 창업지원, 사상구 청년 창업오피스 지원이 있음.
 - 계속 유형 사업 81개 중에서도 창업 지원은 12개로 확인됨.
- 한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부산 지역특성과 연계된 사업은 4개 사업(16명, 359백만 원)에 불과하다고 판단됨.
 - 관련 사업으로는 디지털 선반관리 청년인력 양성사업, 부산콘텐츠인력 GROW-UP 채용지원, 조선·해양특화밸리 전문인력양성사업, 신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청년슈잡이 있음.
- 나아가 2013년 신규 유형 사업 중 사업별 참여인원은 최소 2명에서 최대 78명이며, 이 중에서도 1개 사업을 제외한 46개 사업은 참여인력이 30명 미만임. 10명 미만이 참여하는 사업은 47개 사업 중 28개로 전체 사업의 59.6%에 해당됨.
- 이상을 종합해 볼 때, 기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일자리 소개에 초점을 두어 왔고, 부산의 지역특성을 살리는 사업 및 창업 지원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다고 수 있음. 또한 참여인원이 상당히 적고, 단기적인 일자리 제공으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일자리 제공에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이에 대응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창업을 확대하되, 창업 지원은 부산의 지역적 특성을 살리는 동시에 최근 경제산업계의 가장 큰 화두인 탄소중립 전환, 디지털 전환, 데이터 기반, 그린 모빌리티 등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성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참여인력의 최소 규모 (20명 이상 등) 설정과 사업기간의 확대와 같은 대안을 모색해야 함.

(2) 2기 추진전략

▶ 청년과 기업간 일자리 인식 간격 해소와 청년친화적 일자리 환경 개선

- 중소기업에 근무를 희망 청년 수요와 기업을 연결하는 일자리발굴단 운영
- 수도권과의 임금격차 해소(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사업)하는 사업 확대
- 권역별 창업인프라 및 창업프로그램 내실운영으로 창업을 통한 일자리 확충

- 부산 청년실태분석과 FGI를 통해 도출된 부산 청년들의 요구를 종합할 때, 2기 사업은 다음의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그림 6-10> 2기 청년정책 기본계획 추진방향: 일자리 분야



□ 추진전략 1: 부산 우수기업의 발굴 및 홍보

- 부산 청년이 부산에서 일자리를 갖기를 원하고, 실제 지역 중소기업에 많이 종사한다는 전국 <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와 <2022 부산청년패널조사> 기반으로 우수 중소·중견·강소기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이들 기업과 청년을 연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확대함.
- 우수 중소·중견·강소기업을 포함해 부산에 위치한 다양한 기업들과 청년 간의 인재양성 및 채용연계 사업을 확대 및 재편함.

□ 추진전략 2: 임금격차 해소와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지원

- 청년의 워라밸에 대한 요구가 상당하기 때문에 청년의 관점에서 수요를 파악해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다양한 행태의 근로환경과 일자리 창출이 요청됨.
- 청년이 중소기업을 선호하는 동시에 현재 많은 수가 종사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중소기업을 회피하는 주요한 이유라는 현실을 극복하는 정책적 대안이 요청됨.
- 다른 지자체의 일자리 사업이 창업에 상당한 초점을 두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부산은 창업 분야의 재정 지원이 적음. 또한 상대적으로 30대 이상의 청년이 창업교육을 원한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창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과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함.

- 또한 중소기업 등 청년친화형 기업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체제 확대, 산단근무 청년의 교통편의를 증진 등의 복지체제 정비도 요청됨.
- 이와 함께 연령별대로 취업교육에 대한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일자리와 취업이 선순환적인 구조를 정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함.

□ 사업구조

- 1기 일자리 사업에 대한 평가와 2기 기본계획의 추진방향을 고려할 때, 2기에는 다음의 6개 주요 과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① 부산의 우수 기업과 청년과의 연계 강화 프로그램 개발, ② 청년-기업-공공기관 인재양성 채용연계 트랙사업의 확대, ③ 지역 청년근로자의 임금격차해소 등 복지정책 확대 ④ 창업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강화, ⑤ 부산 청년친화형 기업 발굴 및 근로환경 개선
- 5대 주요 과제에 기초한 새로운 사업의 발굴도 필요하지만, 기존 사업의 확대 및 조정의 과정도 필요함.
 - 국비와 시비로 운영 중인 ‘청년도전지원’과 시비로 시행 중인 ‘부산지역 항공인력 인턴십 지원’, ‘취업연수생 고용’, ‘청년두드림센터 운영’, ‘청년실업해소 구군 자원봉사센터 유급실무자 인건비 지급’ 사업은 유지 및 확대할 필요성 있음.
 - 시비로 운영 중인 ‘부산창업카페 운영’, ‘기술창업 인큐베이팅’, ‘부산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글로벌 셀러 청년 창업가 양성’, 창업촉진지구 지원 사업’과 국비와 시비로 운영 중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4-H양성’, ‘청년농업인 경영 진단분석 컨설팅’,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청년 어촌 정착지원’은 유지 및 확대가 필요가 필요함.
 - 시비로 운영 중인 ‘청년취업 정장 대여 서비스 지원’, ‘청년 사회진입 활동비 지원’,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 카드’, ‘부산청춘드림카 지원’은 청년 복지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통합지원 방안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시비로 운영 중인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부산 일자리 정보망 운영’, ‘부산혁신도시 지역인재 합동 채용설명회’,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청년 해외취업 지원(해외 취업박람회)’ 사업은 그 성격상 교육사업으로 재편할 필요성이 있음. 더불어 ‘메이커 활성화 사업’ 역시 청년정책으로 분류하더라도 사업목적상 진로탐색을 위한 기초 교육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음.
 - 나아가 국비와 시비가 투입되는 ‘지역인재 공공기관 취업지원’도 멘토링과 특강 개최 등의 성격상 교육 분야에 적합하지만, 국비 투입의 한계를 고려할 경우 교육을 수강한 학생들이 실제로 공공기관에 취업한 사례를 구체적인 양적 지표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전체 일자리 사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고, 국비 지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도 6대 과제에 맞추어 조정 및 재편이 필요함. 구체적으로 부산의 지역적 특성을 살리되, 탄소중립 전환, 디지털 전환, 데이터 기반, 그린 모빌리티

등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국비를 추가 확보하도록 설계되어야 함.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상대적으로 저조한 창업지원 확대해야 함.

- 따라서 국비가 투입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일자리 매칭에 초점을 두되, 부산의 지역적 특색과 ICT 및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결합된 “부산형 창업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을 모색해야 함.

○ 특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서 중앙정부의 보충적 사업이 아닌 “부산형 창업 프로그램”의 구축은 향후 국비 사업 종료 후에도 “부산형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지속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일자리 매칭과 함께 부산의 지역적 특성과 관련된 사업, 예컨대 향만, 수산, 무역, 영화, 신발 등과 같은 산업을 중심으로 ICT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결합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성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참여인력의 규모를 최소한 20명 이상으로 유지하고, 사업기간도 2년 이상으로 설정해야 할 것임.

- 국비 사업 종료 이후 사업의 지속성과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시 차원에서 후속지원 프로그램 및 사업 모니터링을 수행하도록 함.

○ 이와 함께 6대 주요 과제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되, 국비와 시비 간의 일정한 역할 분담이 요청됨. 즉 국비는 현금성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시비는 교육훈련과 같은 인력양성과 일자리 연계에 초점을 두는 것임.

- 2023년 시행된 26개 사업의 사업비 총액은 44,116백만 원이고, 이중 국비는 42.5%, 광역은 53.9%, 기초는 3.6%임.

- 최근 고용노동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은 청년에게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지급 방식의 사업이 늘어나고 있음. 2024년 사업에서도 빈 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에 대한 지원금이 신설되기도 함. 또한 중소기업 구인난 해결에 보조금이 주요 정책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음.

- 국비와 시비가 동시에 투입되는 사업(‘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청년도전 지원’, ‘지역인재 공공기관 취업지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4H 양성’,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청년 어촌 정착지원’)의 예산은 인건비·인센티브 및 교육비 지급, 임대료 지원과 같은 직접적 지원과 컨설팅과 교육훈련에 사용됨. 이 경우 국비는 현금성 지원에, 그리고 시비는 창업 훈련과 현장실습 등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발굴 및 개발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시비로 운영되는 사업 중 현금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경우, 투입된 재정 지원에 비해 일자리 창출의 효과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현금보다는 청년이 다양한 서비스를 누리게 하는 방향도 모색해야 함.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경우 부산시에서 신규 일자리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국비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중앙정부의 보충적 사업이 아닌 “부산형

창업 프로그램”의 구축은 향후 국비 사업 종료 후에도 “부산형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지속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그림 6-11> 2기 청년정책 주요 과제 및 사업: 일자리 분야



(3) 주요 과제 및 세부 사업내용

주요 과제1. 부산의 우수 기업과 청년의 연계 강화 프로그램 개발

□ 배경 및 목적

- 2022 부산청년패널조사에 의하면, 부산 청년은 대부분 지역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있으며, 부산 청년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부산에는 우수한 지역 중소기업이 많이 입지해 있으나, 부산 청년은 지역에 어떤 중소기업이 있는지, 그리고 해당 중소기업의 발전 잠재력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부산 청년과 우수 중소·강소·중견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함.
- 고용노동부 역시 “어서와~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처음이지”라는 슬로건으로 중소기업으로의 청년 취업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음.

□ 필요성

- 부산의 우수한 중소·강소·중견기업을 발굴하고,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홍보를 통해 지역 청년이 부산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청년이 일하기 좋은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여 청년과 강소기업 간의 연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해야 함.

□ 타 지자체 사례

- 서울은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직원의 정규직 비중, 임금수준, 근무환경, 기업성장가능성 등 일자리 질을 꼼꼼히 따져 청년이 일하기 좋은 서울형 강소기업을 선정함.
- 지원 기업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 중 공공기관이 인증한 중소기업임.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선정되면 해당 기업에는 다음의 지원이 이루어짐.
 - 근무환경 개선금 지급: 청년 신규채용 1인당 1,000만원, 여성 청년 고용시 추가 300만원, 서울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및 청년 고용 시 추가 200만원을 지원함. 단 기업 당 최대 3명, 최대 4,500만원을 지원함.
 - 육아 휴직자 대체 청년인턴 지원: 육아휴직자 업무대체 청년인턴을 기업 당 최대 6명 이내에서 지원함. 단 2명은 전액지원이고, 그 외 인원은 기업 자부담이 50%임.
 - 청년인재 구인지원: 맞춤형 인재채용을 위한 취업박람회 개최, 기업맞춤형 커리큘럼 개설, 대학일자리센터와 협력한 인재 추천 등
 - 기업홍보지원: 서울형 강소기업 취재단의 기업방문 취재, 시가 보유한 매체와 언론을 활용한 체계적 홍보 지원, 취업포털사이트 등과 연계한 기업홍보 추진 등

<그림 6-12>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정책 현황



*출처: 서울형 강소기업 홈페이지(<http://www.seouljobnow.co.kr/>)

□ 세부 사업내용

① 우수 중소기업 발굴단 구성·운영(신규)

○ 추진배경

- 청년일자리 문제에 있어 지역 청년들이 지역에 있는 우수 강소기업을 잘 몰라서 취업을 못하고 있고, 기업 역시 우수한 청년의 구인이 어려워한다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우수한 기업과 청년을 이어주는 기업발굴단 구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신규) 2024년~ 계속
- 사업규모 : 지·산·학으로 구성된 5명 내외 발굴단 구성
- 소요예산 : 50백만원(년)
- 주요내용
 - 신청을 통해 성장 잠재력이 높고, 근로환경(정규직 비중, 합리적 노사문화, 회계 투명성, 복지 수준 등)을 기준으로 우수한 지역 기업 선정
 - 부산의 우수기업을 홍보하는 동영상 및 홍보물을 제작하여 청년들에게 집중 홍보
 - 발굴기업은 대학의 취업지원센터와 연결, 부산청년플랫폼에 등재, 시차원에서 추진 중인 사업 우대혜택 제공
 - 우수 중소기업을 소개 및 홍보하는 설명회를 매월 혹은 분기별로 정례적으로 개최

○ 추진계획

- '24. 1월 : 세부 추진계획 수립
- '24. 2~3월 : 발굴단 구성(5명 내외)
- '24. 4월~ : 사업운영 및 문제점 분석 등 향후 개선 방향 도출

② 청끝(청년이 끌리는)기업 발굴·매칭 지원(신규)

○ 추진배경

- 청년은 지역 정착 의향이 있음에도 일자리 문제*로 인해 청년 유출 발생
* ('22년 동남지방통계청) 직업(63.6%) > 교육(18.0%) > 주택(8.7%) 순
- 청년이 원하는 기업들을 적극 발굴하여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년~계속
- 지원규모 : 100개사
- 소요예산 : 200백만원(년)
- 주요내용 : 청년이 원하는 기업 발굴 및 지원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 추진계획

- '23. 12월 : 세부 추진계획 수립
- '24. 1~2월 : '24년 청끝기업 모집 및 선정

- '24. 2월 ~ : 청끝기업별 청년과의 매칭 및 기업지원사업 추진 (100개사)

<표 6-2> 청끝기업 육성 단계

【발굴단계】 기업 발굴 및 홍보	【성장단계】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	【매칭단계】 청년인재 매칭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끝기업 발굴·선정(100개사) ② 전담 '청끝매니저' 운영 ③ 청끝기업 홍보마케팅 지원 ④ 찾아가는 기업설명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업 성장촉진 네트워크 체계 구축 ② 기업 적응 '온보딩 프로그램' 운영 ③ 청년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세제 감면 혜택 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부산형 기업-청년 일자리 패키지 지원 ② 기업-대학 워털루형 코업 프로그램 운영 ③ 기업-청년 희망이음 지원사업

□ 기대효과

- 부산 청년이 지역의 우수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계기를 확대해 부산에서의 이탈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부산의 우수 중소·강소·중견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 인력을 안정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됨.

주요 과제2. 청년-기업 인재양성 채용연계 트랙사업 확대

□ 배경 및 목적

- 1기 청년정책에서도 부산은 대학 및 특성화고와 연계하여 지역산업과 연계성이 높은 인재를 양성하고, 일자리와 인재양성의 연계성을 강화해 왔음.
- 특히 지역의 교육기관과 지역기업이 연계하여 산학협력의 현장실습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고, 이를 통해 부산 청년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왔기 때문에 확대 및 재편을 통한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 필요성

- 지역의 교육기관과 지역의 기업을 연계하여 현장실습형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하여 교육기관과 지역산업의 상생구조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부산에 특화된 산업구조와 지역문제에 기반을 둔 다양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함.

□ 타 지자체 사례

- 서울은 지역실정에 기반을 둔 일자리 창출과 기업을 발굴하고 있음.
- 핵심 사업으로 미래청년일자리사업, 서울형 뉴딜일자리,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등 서울의 산업구조와 지역문제에 기반을 둔 다양한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미래청년일자리사업은 미래 변화를 주도할 유망 신산업 3대 분야(온라인콘텐츠, 제로웨이스트, 소셜벤처 분야) 기업에 청년을 매칭하여 일 경험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을 통해 경력형성의 기회를 제공함. 신청을 통해 참여자를 선발하고, 최대 6개월의 인건비를 지원
 -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은 일경험과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해 사업 참여 후 민간일자리 취업과 창업을 돕는 형태로 운영됨.
 -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는 혁신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실무중심의 인턴십 과정을 제공하여 청년 구직자의 실질적인 역량강화 및 취업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을 통해 선정자를 지원함. 28세~34세의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IT·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의 유망기업 및 스타트업, 그리고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함.

□ 세부 사업내용

① 워털루형 코업 프로그램 운영(확대 개선)

○ 추진배경

- 지산학 협력을 통한 채용 연계 워털루형 코업(Co-op)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년취업문제 감소 및 실무형 인재 양장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 코업(Co-Operative Education) : 이론학과 현장실습 학기를 교차 운영하여 실무 역량 지식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년~
- 사업비 : 1,200백만원(년)
- 지원대상
 - (대학) 코업 프로그램을 위한 교과과정·학사과정 운영 가능한 3개 대학 이상
 - (학생) 신산업분야 전공우수학생으로 3학년 위주 90명(3학년 선발⇒2년 참여)
 - (기업) 실습교육 및 채용연계 가능 지역전략산업, 신산업 분야 지역기업 60개사

○ 추진계획

- '24. 1월 : 사업계획 수립
- '24. 3월 : 운영기관(대학) 모집 및 선정
- '24. 4월~ : 코업 참여 기업 모집 및 현장실습 참여 학생과의 매칭

② 산학연계 현장실습 브릿지 사업(계속)

○ 추진배경

- 산학연계 기반 현장실습 지원(대학 교과과정 연계)을 통해 지역 대학생의 실무 직무능력 함양 및 취업 연계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년~
- 사업비 : 1,800백만원(년)
- 내용 : 기업수요기반 대학교과과정 연계 현장실습 기업발굴·매칭·지원(500명)
 - (기업) 실습지원비(월 80만원/1인, 최대 4개월), 멘토지원금(월 10만원/1인)
 - (학생) 수료 후 실습생 수료지원금 지급(15~25만원/1인)
 - (기업탐방, 취업브릿지데이 등) 지역기업 인식개선 및 취업 의지 제고
 - 지산학 통합 e-플랫폼(현장실습, 지산학 정보 제공 등) 운영

○ 추진계획

- '24. 1월 : 사업계획 수립
- '24. 3월 : 학기별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및 참여기업 지원
- '24. 4월~ : 현장실습 및 취업 매칭, 사업성과 분석 등

③ 대학-기업-공공기관 맞춤형 인턴십 체결 확대(개선)

- 지역의 우수기업 및 공공기관과 교육기관을 매칭하여 기업 현장에서 원하는 맞춤형 인재 육성을 확대
- 지역기업의 맞춤형 인턴십 프로그램은 해당 교육기관 차원 또는 개별 대학의 전공학과 차원에서 다양하게 추진하는 기반을 마련
- 지역대학, 공공기관 및 지역기업의 인턴십 프로그램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MOU 체결을 유도
- 더불어 부산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기업과 산업 분야에서 인턴십을 확대하여,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과 취업의 선순환적 생태계를 구축

□ 기대효과

- 부산에 위치한 기업들이 원하는 현장맞춤형 인재양성을 통해 우수한 인력자원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취업을 유도함.
- 부산에 특성화된 인력양성을 통해 향후 관련 분야의 기업 입지 및 창업을 촉진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확보하게 될 것임.

주요 과제3. 창업공간 확충 등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역량 강화

□ 배경 및 목적

- 그간 부산에서는 다양한 청년창업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왔지만, 부산의 산업구조와 다소 거리가 있었고, 상대적으로 창업 관련 예산은 매우 저조하였음(2023년 사업비 기준).
- 그럼에도 FGI 조사에서는 부산의 특성을 반영한 창업 및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났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추진된 ‘2020 영도구 맞춤형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창업지원 사업’이 일정한 결실을 맺어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⁸⁾ 최근 청년 창업지원에 대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됨.
- 따라서 부산의 산업구조에 기반을 둔 청년창업을 촉진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성 및 경쟁력을 확보함. 이에 부산의 지역 특성과 최근 경제산업계의 가장 큰 화두인 탄소중립 전환, 디지털 전환, 데이터 기반, 그린 모빌리티 등을 창업과 결합해 “부산형 창업 프로그램”을 개발함,

□ 필요성

- 부산의 대표적인 산업인 선박, 항만물류, 수산업, 무역, 영화, 신발 등 중심으로 한 청년창업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지역 특화형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음.
- 대기업, 공공기관, 중소기업 취업에 비해 창업의 비중이 상당히 낮은 현실을 극복하여 청년창업 활성화에 기여함.

□ 타 지자체 사례

- 전북은 창업중심대학 사업화지원과 창업기업 양성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산업과 연계성이 다소 부족한 문제가 있음.
- 창업중심대학 사업화지원은 우수한 창업 인프라 및 협업 네트워크를 갖춘 대학을 통해 지역 청년창업 확산 및 창업성장단계별 기업에 사업화 자금지원, 기본·자율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안전화 및 성장 촉진을 도모하는 사업임.
 - 전북은 시제품 제작, 지적재산권 취득, 마케팅 등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기업가 정신 촉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총 85개의 창업기업을 지원하고 있고, 이중 예비창업은 40개, 초기창업은 25개, 도약기업은 20개로 구성되어 있음.
- 그리고 전북은 기술제조, 4차 산업분야의 우수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8) 머니투데이. 2023.09.14. “탈부산 막자”...매출 5억→63억 대박 '창업 성지'로 뜨는 영도.”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91111305583228>.

기술사업화 패키지를 통해 창업성공률 제고 및 우수기업을 양성함.

-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기업 양성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음.
- 창업 1~3년 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지원금을 지원하고, 사후관리 지원을 하고 있으며, 창업기업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세부 사업내용

①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조성(신규)

○ 추진배경

- 창업·주거 복합공간 조성으로 청년의 성장과 지역 내 안정적 정착 지원
- 지역 청년 창업인에게 사무공간,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창업생태계 조성을 도모, 부산대표 일자리브랜드 사업으로 정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년~
- 사 업 비 : 1,900백만원(인프라 조성비)
- 사업내용 :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조성 및 운영
- 조성규모 : 지역내 2개소

○ 추진계획

- '24년 : 조성공사 완료
- '25년 : 창업기업 입주 및 지원프로그램 운영

② 창업촉진지구 지정 및 운영(계속)

○ 추진배경

- 창업 밀집도가 높은 6개 부산창업촉진지구를 지정하여 창업 집적 유도 및 일자리 창출 기여와 민간 창업생태계 중심 상호교류·협력 유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년~
- 사 업 비 : 800백만원(년)
- 사업내용
 - (앵커시설 운영) 액셀러레이팅, 인큐베이팅, 네트워킹 행사 개최 등
 - (맞춤형 액셀러레이팅) 촉진지구별 우수기술 보유 창업기업 발굴 및 성장 지원(투자유치, IR 고도화 등)
 - (부산유라시아플랫폼 운영) 입주기관 선정(민간 창업플랫폼 유치·지원), 입주기관 공동 행사 개최

③ 다양한 분야 기술과 접목된 창업촉진 사업 추진(개선)

- 항만물류 분야: 부산항만 내 자율주행 모빌리티, AI, 내 오염제거 및 탄소중립 분야의 인력양성 프로그램 등을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함. 이를 바탕으로 AI 기반형 항만물류운영, 항만물류의 보안 및 안전 분야 등의 창업을 촉진
- 수산업 분야: 데이터 기반형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과정, 데이터 기반형 수산물 시장수요 분석 및 예측 과정 등의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함.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형 유통과 가공, 포장재 개선, 부산물 처리, 수산물 가공 및 밀키트 분야에서 창업을 촉진
- 무역업 분야: AI 기반형 위기관리 과정의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관련 분야의 창업을 유도
- 영화 분야: CG 및 AI 기반형 소재 및 테마 발굴하는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관련 분야의 창업을 유도

□ 기대효과

- 부산의 청년창업 활성화와 함께 부산만의 특성화된 청년창업을 통해 지역 내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됨.
- 아울러 해당 분야에서 일자리를 갖기 희망하는 다양한 청년이 부산으로 이주하는 계기가 될 것임.

주요 과제4. 부산 청년친화형 기업 발굴 및 근로환경 개선

□ 배경 및 목적

-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은 과거의 근로조건과 노동환경을 갖추고 있음. 실태조사에 의하면, 지역기업의 열악한 근로환경은 고용불안정을 유발하고, 청년을 고용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음.
- 따라서 상대적으로 근로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청년친화형 근로환경을 확대하는 지원책을 강구해야 함.

□ 필요성

- 지속적으로 청년자원이 부족해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안정적으로 청년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지역 기업의 근로환경을 청년친화형으로 전환해야 함.
- 특히 부산 청년은 중소기업에 많이 종사하고, 중소기업의 취업 의향이 전국에 비해

높음. 그럼에도 열악한 노동환경과 고용불안정성이 중소기업을 회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함.

□ 타 지자체 사례

- 앞서 밝힌, 서울이 추진하고 있는 서울형 강소기업 사업도 청년친화형 기업을 발굴한다는 성격을 가짐
- 그러나 해당 사업은 청년친화형 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주로 채용된 청년에 대한 인건비와 기업 홍보비를 지원하는 성격이 강하며, 기업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사업으로 확대되지 못함.
- 청년친화형 기업이 임금 향상과 워라벨 등 청년의 요구와 현실을 반영하는 형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이 필요함.
- 대구 서구청은 지방소멸기금으로 청년친화형 기업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를 위해 업체당 최대 2천만 원(3천만 원인 경우 자부담 천만 원)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2023년 현재 총 27개사를 대상으로 추진되었음. 동 사업은 기업체 내에 휴게실과 체력단력실을 조성하고 있음.

□ 세부 사업내용

① 부산 청년친화형 기업 발굴 및 지원(개선)

-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청년친화형 기업을 발굴 및 지정
 - 임금 수준 외에도 합리적인 노사문화, 적정한 임금 및 근로시간, 복지 수준 등 근로자들의 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고려하여 선정
 - 지역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직종별, 연령별로 선호하는 근로환경을 파악
 -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부산에 위치한 중소기업과 일정한 규모를 갖춘 도소매업 지원에 가점을 부여
-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청년이 원하는 근로환경과 조건을 파악하여 청년친화형 기업의 조건을 설정하고, 이를 매뉴얼로 보급
- 부산 청년친화형 기업에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관련 제도를 홍보하고 보급

② 청년친화형 기업을 대상으로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발굴 및 지원(개선)

- 부산 청년친화형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청년 근로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
- 해당 기업의 수요에 맞추어 지원하되, 환경정비와 같은 하드웨어 사업과 청년동아리

지원과 같은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구성

- 더불어 근로자 복지시설 개선(구내식당, 휴게실, 체력단련실, 샤워실, 화장실숙직시설 등) 및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환기시설, 집진시설, 소음방지시설, 악취방지시설, 작업안전시설, 조명시설 등)
- 5인 이상의 중소기업 혹은 도소매업을 대상으로 실시
- 지속적인 근로환경의 개선으로 청년 취업자 이탈이 적고, 유입이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산재예방시설 및 장비 구입 우선지원 및 추가 인센티브 제공

□ 기대효과

- 부산의 기업 중, 특히 중소기업들이 청년친화적 근로환경을 창출하도록 유도하게 될 것임.
- 아울러 지역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청년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게 될 것이고, 이는 청년 유출의 방지와 타 지역 청년의 유입을 확대하는 계기가 됨.

주요 과제5. 청년근로자 임금격차 해소 등 통합복지 체계 정비

□ 배경 및 목적

- 일자리 사업은 소득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한 복지 지원은 청년의 일자리 만족도를 높임.
- 특히 중소기업 종사자들은 대기업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에 비해 낮은 임금에 처해 있기 때문에 복지 혜택이 더 중요함.
- 부산에 거주하며 산단으로 출퇴근하는 청년의 출퇴근 비용 부담을 경감시켜 주어 청년의 실질소득을 높이는 정책을 확대해야 함. 즉 청년이 주로 선호하는 주거지역과 달리 부산의 주요 산단은 부산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청년의 접근성 및 출퇴근 용이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현실을 극복하고, 산단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을 유도함.

□ 필요성

-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수의 복지정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여 청년근로자의 수혜 대상자 및 중소기업 종사자의 혜택 기회를 확대해야 함.
- 부산 청년정책의 복지와 일자리 사업을 연계하여 청년정책의 시너지를 창출함.

□ 타 지자체 사례

- 광주는 제2기 청년정책에서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고용장려금, 직접일자리, 창업지원 관련정책을 기획 및 실행하는 광주청년드림혁신센터를 운영할 예정임.
- 광주는 청년 일자리 이행 통합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지만, 청년 일자리와 청년 복지를 통합적으로는 추진하지는 않음.
- 광주를 비롯하여 인천, 전북 등에서 산업단지 청년근로자의 교통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전기차 공유 플랫폼 등을 활용하는 교통비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는 아직 없음.
- 광주 산단 청년근로자의 교통비 지원사업의 경우,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에게 매월 5만원씩 일괄지급⁹⁾
 - 전자 바우처 형태로 교통비를 5만원씩 지급하며, 근무하는 기업의 규모를 중소기업으로 제한하여 실시하고 있음.

□ 세부 사업내용

①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확대)

○ 추진배경

- 청년 근로자의 가장 큰 요구사항이 수도권 기업과의 임금격차 해소를 요구
- 지역청년이 취업하였을 경우, 취업초기에 안정적 정착과 장기재직 유도를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청년근로자 복지 향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년~
- 사 업 비 : 1,780백만원(년)
- 사업대상 : 부산소재 기업에 3개월이상 재직중이고, 중위기준소득 120%이하 청년근로자
- 지원내용 : 취업 청년에게 1인당 복지포인트 형식으로 100만원(전용체크카드)지원
 - * 기쁨카드를 신청할 경우,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청년근로자 정책을 통합하여 신청·수혜를 받도록 유도

○ 추진계획

- '24. 2월 : 사업계획 수립
- '24. 3월~ : 대상청년 선발 및 복지포인트 지원, 사업성과 분석

② 부산청춘 기쁨카 지원사업(신규)

9) 시민일보. 2022.02.09. “광주광역시, 산단 중소기업 청년에 교통비 5만원 지원.” <https://www.siminilbo.co.kr/news/newsview.php?ncode=1160284657538812>

○ 추진배경

- 청년 근로자의 가장 큰 요구사항이 수도권 기업과의 임금격차 해소를 요구 기존 강서구 및 기장군에 근무하는 청년의 근무환경 개선의 일환인 출퇴근용 전기차량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취업유도와 지역기업의 인력구인난 해소
- 부산은 2022년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유형 모빌리티 사업을 시행하여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와 전동킥보드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있으며¹⁰⁾, 이러한 공유전기차 플랫폼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관련정책 등을 도입하여 정책 시너지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산업단지 통근버스 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통근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의 통근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자차소유 비중이 낮은 청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년~
- 사업비 : 240백만원(년)
- 사업대상 : 강서구·기장군 소재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한 만21~39세 청년
 - 부산에 거주하며 산단지역으로 출퇴근하고 있는 청년근로자를 대상
 - 상대적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을 우선 지원
- 선정기준(안)
 - 산단지역으로 출근하는 청년근로자 (19세~39세)
 - 근무하는 사업장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 사업내용 : 도심 외곽 산단 등 교통취약지역의 중소·중견기업에 채용된(2년 이내) 청년근로자에게 출·퇴근용 차량 임차비 지원

○ 추진계획

- '24. 1월 : 세부추진계획 수립
- '24. 3월~ : 대상사업자 및 지원대상 청년근로자 확정, 사업추진, 성과평가 등

③ 청년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 추진(신규)

○ 부산 청년 교통비 지원

- 정부에서는 산업단지에 종사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음. 이를 지역 중소기업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수혜대상을 확대
- 중장기적으로 교통비 지원을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로 통합하여, 기쁨카드의 효율성을 제고

○ 부산 청년 근로소득세 감면

10) KBS. 2022.03.24. “부산시, 공유형 모빌리티 시범사업 시행.”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22997>

-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에게 근로소득세를 5년간 90% 감면(연간 200만원 한도)하고 있음. 동 제도에 대한 수혜대상을 확대
- 이와 더불어 농공단지 입주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감면 등 청년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발굴·홍보

□ 기대효과

-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통합적으로 공급하여 정책 수혜대상을 확대할 수 있음.
- 아울러 만족도가 높은 기쁨카드와 관련 제도를 통합화할 경우, 부산 청년정책의 실효성과 만족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2) 교육 분야

(1) 1기 정책평가

- 부산은 “글로벌 청년인재 양성”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교육분야 사업을 과감하고 전방위적으로 진행함.
 - 지자체, 기업, 대학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산업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 가능한 혁신인재를 양성하였음. 또한 재학단계부터 학업과 기업실습을 병행하여 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함.
 - 주요 사업으로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대학 취업 네트워크 활성화 등 안정적 학업환경 조성 및 진로탐색 등 역량 강화 지원을 추진함.
 - 그리고 산학연계 현장실습 지원, 디지털확산아카데미 운영, 빅데이터 분석가 양성, 신발·금융·항만물류·파워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등 지역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혁신인재를 양성함.
- 부산은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기업수요기반의 기업-대학 현장실습을 지원하였음.
 - 현장실습지원단 운영, 통합 e-플랫폼을 통한 현장실습 관리의 전산화, 기업-실습생 매칭 등 기업수요에 기반을 둔 인재양성을 현장실습지원으로 추진함.
 - 워컬루형 코업 프로그램, 대학생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연계 여름 계절학기 및 2학기 현장실습 지원, 산학연계 현장실습 브릿지 사업, 지역 우수기업 정보 제공 및 인식전환 등을 통해 기업 맞춤형 현장실습 연계강화를 위한 지산학 협력 및 지원을 강화함.

□ 그리고 지역 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을 추진함.

- 지자체-대학-지역혁신기관이 참여하는 부산지역혁신플랫폼 구축으로 스마트 항만 물류, 친환경 스마트 선박, 클린에너지융합부품소재 인력양성을 추진함.
- 7단계 BB21+ 사업, 지역산업 기반 연구인재 양성 지원,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비전공자 ICT 인력양성 오픈캠퍼스 등을 통해 지역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을 추진함.

□ 부산 청년정책의 교육 사업은 1기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2기에는 기존 사업을 유지하면서도, 부산 청년의 실태 조사(FGI)를 참고하여 기존 사업의 재편 및 새로운 사업의 발굴이 필요함.

- 인력양성에 초점을 두는 교육 사업은 일자리 사업과 연계될 때 시너지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2기 사업에서는 양자의 선순환적인 구조 확립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기존의 현장실습형 사업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음.
- 실질적인 취업을 위한 인력양성을 위해서는 단순한 개최비, 인건비, 운영비 지원 사업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 1기 교육 사업은 대부분 예산규모가 10억 미만의 소규모 사업으로 사업의 효과와 지속성을 고려할 때, 2기 추진목표에 맞추어 확대 및 통합이 필요함.
- 절대 다수의 청년이 부산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 출신이라는 점은 지역의 교육기관과 연계된 취업교육 프로그램의 확대를 요청함.
- 연령대별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기관과 학력 대비 업무 만족도가 상이하다는 점은 수요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취업과 교육이 맞물리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며, 직업교육에서 맞춤형 수요 조사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함의함.
- 청년이 직업교육 경험과 향후 직업교육 의사가 상당히 적었다는 점, 그리고 구직활동에 대한 정보 요구가 강했다는 점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및 접근성 강화의 필요성을 상기시키며, 더불어 특정학교 및 전공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동시에, 일반 청년이 참여하는 기회를 확장할 필요가 있음.
- 부산 청년의 경우 부산 소재의 고등학교와 대학교 출신이 절대 다수를 차지함. 더불어 FGI에서도 확인되었듯이, 부산에 거주하고 싶은 의사가 많아 부산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부산형”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교육 사업도 병행되어야 함.

(2) 2기 추진전략

▶ 2기 추진전략: 부산형 통합 취업교육 프로그램 확립

- 지역 거버넌스를 확충하여 교육과 취·창업이 연계된 부산형 인재양성
- 다층적인 청년 수요에 기초한 취업교육 프로그램 통합 및 연계성 확대

- 부산 청년실태분석과 FGI 분석을 통해 도출된 부산 청년들의 요구를 종합할 때 2기 사업은 다음의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그림 6-13> 2기 청년정책 기본계획 추진 방향: 교육 분야



- 추진전략 1: 지자체-대학-기업과 연계를 통한 부산형 취업교육 기반 확대
- 청년정책의 교육 사업은 본질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는 성격을 가지며, 특히 지역의 대학·기업·연구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한 취업교육은 실질적인 “역량강화”를 통한 취업에 기여함.
 - 부산의 지역특성이 반영된 현장실습형 취업교육의 기반을 확대함.
- 추진전략 2: 취업교육의 연계성 확보를 통한 홍보 강화 및 일자리로 연결
-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청년 교육 사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를 지정 및 운영하여, 취업교육 사업의 통합체계를 마련함.
 - 다양한 청년정책 운영 시 취업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관련 정보의 확산 및 청년정책의 수혜자를 확대함.
 - 공급적 방식에서 탈피하여 수요 지향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의 기반을 마련함.

□ 사업구조

○ 1기 교육 분야 사업에 대한 평가와 2기의 기본계획의 추진방향을 고려할 때, 2기에서는 다음의 6개 주요 과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① 지자체-대학-기업이 연계한 부산형 혁신인재 양성 프로그램 확대, ② 부산형 창의인재 양성의 기반 구축, ③ 부산형 현장실습 직업교육 프로그램 강화, ④ 취업교육 프로그램 간 통합 및 연계성 강화, ⑤ 청년정책과 취업교육 프로그램의 연계를 통한 홍보 지원 ⑥ 수요맞춤형 취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 아울러 기존 사업의 확대 및 조정의 과제도 필요함.

- 국비와 시비로 운영되는 ‘기술사관 육성사업’, ‘부산디지털혁신아카데미(BDIA) 운영’,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 ‘SW중심대학 지원 사업’은 ①과 ③에 부합하기 때문에 유지 및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시비로 운영되는 ‘NEXT10(부산청년드림학교)’, ‘프로젝트 기반의 산업별 맞춤형 인재 양성’, ‘조선해양플랜트산업 기능인력 양성’, ‘신발산업 인력양성’, ‘산학연계 현장실습 브릿지 사업’, ‘위털루형 코업 프로그램 운영’, ‘과워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기술 지원사업’, ‘청년도시재생사 양성’, ‘비전공자 ICT인력양성 오픈캠퍼스’, ‘부산패션창작 스튜디오 운영’, ‘해양금융 전문인력 양성지원’ 역시 유지 및 확대할 필요가 있음. 다만 교육훈련에 중점을 두는 사업들은 현장실습과 대학 및 산업연계의 성격을 강화해야 함.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국비 및 시비)의 경우는 시 차원에서 공모에 참여하는 대학 및 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대학 교육훈련과 취업 인프라 구축대학 내 혹은 대학 간의 진로지도 및 취·창업 지원 기능의 일원화가 필요함.
- ‘부산권 대학 취업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시비)은 현재 교육훈련의 성격을 가지지만, 대학 내에서 취업교육 프로그램의 홍보와 대학생들이 취업교육 프로그램의 수요를 조사하는 창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시비로 운영 중인 ‘청년농업인 드론영농단 육성’,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SW마이스 터고 운영’, ‘대학패션 페스티벌 개최 지원’은 보조금, 유지보수비, 개최비 지원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인력양성으로 사업목표와 운영방식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 ‘직업능력개발훈련’(시비)은 취업교육이 대학(원)생 및 특성화고 대상의 취업교육이 주를 이루는 상황에서 졸업 후 청년의 취업교육을 위해서 필요함. 특히 청년의 연령이 39세로 상향되는 상황에서 지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현재 4차 산업 분야 중심의 훈련과정을 편성하고 있으나, 부합하도록 현장실습을 강화하고, 창의적 인재양성으로 직업훈련의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복지의 성격이 강하고, 취업 성과의 제고로 직접적으로 연계되기 어렵기 때문에 복지 분야로 재편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가 장학금 등 다른 주체에 의한 학자금 지원 규모가 지속적 확대되어 지원대상자가 감소한다는 현실적 한계도 고려해야 함.

<그림 6-14> 2기 청년정책 주요 과제 및 사업: 교육 분야



(3) 주요 과제 및 세부사업 내용

주요 과제1. 지자체-대학-기업이 연계한 부산형 혁신인재 양성 프로그램 확대

□ 배경 및 목적

- 부산은 1기 청년정책에서 “글로벌 청년인재 양성”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지자체-대학-기업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산업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 가능한 혁신인재를 양성하였음.
- 이러한 성과는 지자체 주도의 대학교육 혁신을 주도하는 중앙정부의 정책(RISE, RIS, 글로벌대학 지원)과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2기에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필요성

- 특히 부산 청년이 대다수 지역 고등학교 및 지역대학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재학 단계에서부터 학업과 기업실습을 병행하여 혁신적이면서도 기업 맞춤형의 인재를 양성해야 함.
- 부산만의 특색 있는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현실적 요구를 수용하여, 부산의 특성을 살린 공급 및 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타 지자체 사례

-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도입을 위한 시범지역(2023~2024년)으로 부산은 경남, 경북, 대구, 전남, 전북, 충북과 함께 선정됨.
- 현재 충북, 강원, 대전·세종·충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울산·경남은 지역 산업에 특화된 지역혁신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자체-대학 협력기반의 지역혁신사업(RIS)을 추진 중이며, 부산은 2023년 신규 선정됨.
- 2023년 비수도권 대학 중 혁신 역량을 갖춘 대학을 지원하는 글로벌 대학 사업에서 현재 부산대·부산교대가 예비 선정됨(2023년 6월 기준).

□ 세부 사업내용

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전환의 기반 구축(신규)

○ 추진배경

- 대학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하고, 지역을 위한 대학의 적극적 역할 확대, 지역-대학간 협력을 통한 '인재양성-취·창업-정주'의 선순환 체계 구축.
- 지자체 주도로 지역발전과 연계한 대학재정 지원으로, 지역-대학 동반성장 등 차별화된 부산시 RISE체계 구축을 통한 성공모델 수립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교육부 '23년 교육개혁 선포, RISE 계획 발표('23. 1~2월)
- 사업기간 : 2023. 3월 ~ 2025. 2월 ▷ '25년부터 전 지역 전면 시행
- 사업비 : 200,000백만원('25년부터)

○ 사업내용

- 지자체 내 대학지원 전담부서 설치 추진 및 RISE센터 지정·운영.
- 지역발전계획, 대학 특성화, 산업수요 등 반영한 대학재정지원 계획 수립
- 대학 규제혁신 과제 발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청·운영

○ 추진방향

- 부산의 산업적 기반을 활용하면서도 RIS(스마트 항만물류, 친환경 스마트선박, 클린에너지 융합부품소재)와 차별화된 산업 분야, 개편되는 부산시 전략산업과 지역대학별 특성화를 연계한 인재양성 프로그램 발굴 필요.
- 지식 창출을 통한 인재양성 + 우수 강소기업·중소기업 및 청년 친화형 기업과의 현장실습(인턴십)의 기회 확대를 통해 우수 인력의 지방정착을 도모.
- 대학 차원에서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평생교육 기능을 추가하여 대학 졸업 이후에도 취·창업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 즉 지역

내 재직자 등이 대학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하여 변화하는 기술트렌드를 체득할 수 있고, 지역내 취업·재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중장년의 직업 전환 재교육을 통해 대학이 진정한 지역의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을 진화.

○ 향후계획

- '23. 12월 : 부산시 RISE 추진 계획안 제출(→교육부)
- '24. 1월 : 교육부-시·도 기본계획안 협의
- '25년 ~ : 시·도별 실행계획 수립 및 RISE 추진

② 지자체-대학 협력기반의 지역혁신사업(RIS) 추진의 기반 구축(신규)

○ 추진배경

- 국정과제-85(이제는 지방대학 시대)에 부합도록 지역혁신플랫폼을비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여 인재양성·지역발전의 선순환 체계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4월 ~ 2025. 2월(2년*) *2+3년으로 '25년부터 RISE로 통합운영
- 사 업 비 : 854억원 (국비 598, 시비 256) ※연간 427억원(국 299, 시 128)

○ 사업내용

- 지자체-대학-지역혁신기관 간 플랫폼 구축, 대학과 지역산업 간 핵심분야* 교육체계 개편, 핵심분야별 과제 추진 등
 - 3개 핵심분야 : 스마트항만물류, 친환경스마트선박, 클린에너지융합부품소재

<표 6-3> RIS 주요사업체계

구분	대학교육 혁신방안	핵심분야별 과제	지역혁신 자율과제
수행조직	대학교육혁신본부 및 지역대학	3개 사업단 (해양대, 부산대, 동아대)	총괄운영센터/선정대학
사업내용	부산공유대학(BITS) 구축운영	인재양성, 기술혁신, 기업지원	지역인재 양성
과 제 수	BITS 공유대학 융합대학원 신설·운영 등 40개	스마트물류 핵심기술 공동 연구개발 등 27개	전략산업 분야 20개

○ 추진방향

- 인재양성과 취·창업의 선순환적인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부산형 RIS체계를 구축할 필요(다양한 현장실습 교육방식 방식의 도입과 적용)
 - 기업-대학-연구기관의 협업 사업은 새로운 방식의 현장실습 방식을 도입할 때 학습을 극대화한다고 평가되고 있음.
 - 이를 위해 현장실습문화 확산 캠페인 강화, 현장실습 교과목 인증제, 트렌드형 및 기업맞춤형 현장실습 신모델 개발, 현장실습 성과의 사후관리 강화 등 현장실습 운영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방안이 강구될 필요.

- 대학 차원에서 평생교육 기능을 추가하여 대학 졸업 이후에도 취·창업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
- 장기적으로 관련 분야의 특성화 고등학교 재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 향후계획

- '24. 2월 : 대학-기업 참여 오픈이노베이션 센터 라운지 운영
- '24. 3월 : 지역혁신 자율과제 관련 지역 첨단·핵심분야 인재양성
- '24. 3월 : 융합전공 및 공동교육과정 개설 등 공유대학 운영
- '24. 6월 : 학생 생애주기별 교육 지원체계 운영(BIP)
- '25. 2월 : 2차년도 사업 완료 및 지역 주도의 인재양성체계 운영

③ 글로컬 대학 지원 사업의 기반 구축(신규)

○ 추진배경

-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한 대학교육체제의 변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되고 있으며, 부산 지역발전의 허브로서 기능하며 우수 인재들이 가고 싶어하는 경쟁력 있는 대학 육성 필요

○ 사업개요

- 지정대상 :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일반재정지원대학 또는 국립대학
- 지정규모 : '23년 10개 내외 → '26년까지 30개 내외
- 사업기간 : 2023. ~ 2027.(5년)
- 사업내용 : 지역산업 수요 반영한 인재양성 등 지역산업·사회 연계 특화분야 대학혁신
- 사 업 비 : 교당 5년간 1,000억 ※통합전제로 신청한 경우 사업비 1.5배 지원 및 통합지원금 확보 가능
※ (1차년도) 50억→(2차년도) 100억→(3차년도) 250억→(4차년도) 300억→(5차년도) 300억

○ 추진방향

- 글로컬 대학 지정이 인재양성과 취·창업의 선순환적인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산업구조를 반영한 학사구조의 개편과 함께 기업과 학생들의 수요를 조사하여 다양한 형태의 학사제도 및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
- 다양한 형태의 모듈형 교육과정 개설시 대학과 교육부의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기업과 다양한 전공 학생들의 수요조사를 병행하여 교육과정을 설계할 필요.
- 지역 우수인재가 지역에 정주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지원
- 산업계 맞춤형 교육과정 공동 개발 및 산학협력 공동연구 지원
- 글로컬대학 맞춤형 진로·취업 컨설팅, 멘토링 등 지원 및 글로컬대학 현장실습 제공-채용 연계 추진 등
- 대학 차원에서 평생교육 기능을 추가하여 대학 졸업 이후에도 취·창업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

○ 향후계획

- '24. 1~12월 : 글로벌대학 발전방안 정책 포럼 및 설명회 등 개최
지역발전 연계 전략과제 개발 및 컨설팅 지원

□ 기대효과

-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대학 경쟁력 강화 사업을 인재양성과 취·창업을 연결하는 고리로 활용하여, 대학을 매개로 한 청년친화형 도시를 창출하는 계기로 활용됨.
- 인재양성→취·창업→지역정주라는 선순환적 고리를 확보해 우수한 학생들의 수도권 이탈을 막고, 인근 지역 고등학생들의 부산 유입을 위한 계기로 활용함.

주요 과제2. 부산형 창의인재 양성 기반 구축

□ 배경 및 목적

- 프랑스는 에꼴42(3무: 교수, 교재, 교육비)를 통해 기업과 지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이 과정을 통해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있음.
-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부산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청년혁신아카데미를 설립·운영함.

□ 필요성

-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기존의 논리가 아닌 새로운 시각과 접근이 매우 중요함.
-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창의적인 인재양성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타 지자체 사례

- 서울은 에꼴42와 제휴하여 '42 Seoul'을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음.
- 2023년 기준으로 선발인원은 연 400명이고, 온라인 테스트를 통해 상시 응시함.
- '42 Seoul'은 소프트웨어 분야에 특화되어 운영되어 있고, 선발 이후 1개월의 집중교육 과정을 거친 이후 본 과정을 이수함.
- 평가방식은 개인미션, 장기 팀프로젝트 등으로 구성되며, 교육내용은 소프트웨어 개발, 혁신역량, 기술 인프라, 개인개발 및 창의성, 기업가 정신 등을 포함함.

□ 세부 사업내용

① 부산형 에끌42 청년혁신아카데미 설립(신규)

○ 추진배경

- 부산과 지역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부산형 에끌42 청년혁신아카데미를 설립 및 운영
- 지역이나 기업이 제시하는 문제를 학생들이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으로 인력양성과 취업을 유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년~
- 사업목적 : 미래산업 신기술 등 첨단산업분야에 대한 집적화 교육과 혁신역량 개발
- 사업비 : 5억원(년)

○ 사업내용

- 지역 부산은 에끌42에 참여하는 기업과 청년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참여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기술에 대한 과제수행.
- 참여기업과 기관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의 운영에 따른 실적을 배당.

○ 향후계획

- '24. 상반기 : 사업추진계획 수립
- '24. 하반기 : 공간조성, 시스템 구축, 참여기업, 기관, 청년 모집
- '25년 ~ : 혁신아카데미 본격 운영

② 부산청년 성장도약 프로젝트(신규)

○ 추진배경

- 청년 성장 욕구가 높은 청년에게 경제적 여건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미래 역량을 발굴하고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는 데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미래 리더로 성장유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년~
- 사업목적 : 청년에게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는 데 전념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사업비 : 36억원(년)

○ 사업내용

- 지역 청년 100명에게 학업, 창업지원, 해외프로그램 참가 등 역량개발비용을 2년간 최대 3천만원 지원
- 성공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밀착관리, 분야별 청년 멘토단 등 운영

○ 향후계획

- '24. 9월 : 사업추진계획 수립

- '25. 1~5월 : 시스템 구축, 멘토 모집
- '25. 6~12월 : 참여청년 모집 및 1대1 멘토링
- '26년 1월~ : 역량개발비 지원

③ 월드클래스 육성 사업(계속)

○ 추진배경

- 저성장인구감소코로나19 등의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킬 세계적 인재육성 및 4차 산업혁명 시대, 세계화와 글로벌 경쟁에서 혁신과 성장을 이끌어갈 인재의 필요성이 강조.
- 부산지역 과감하고 전방위적인 인재투자를 통한 '인재의 도시'로 브랜딩하고 핵심인재 발굴 및 집중관리를 통한 글로벌 리더로 성장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 사업목적 : 청년 핵심인재 발굴 및 집중관리를 통한 글로벌 리더로 도약·성장 지원
- 사업비 : 410백만원(년)
- 사업내용 : 청년인재 맞춤형 집중 지원·관리(역량개발비 지원 최대 1억원/3년)

○ 사업내용

- 신산업 분야(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수요를 가진 지역특화 기업과 협력을 통한 맞춤형 ICT 전문 지역인재 대규모 양성.

○ 향후계획

- '24. 1월 : 사업추진 세부실행계획 수립
- '24. 3~9월 : '24년 청년인재 모집, 심사(3차) 및 선정

□ 기대효과

- 부산형 에꼴42 청년혁신아카데미 및 부산 청년 성장도약 프로젝트 사업, 월드클래스 육성 사업을 통해 지역 내에 창의적이고 다양한 청년인재가 양성될 것이며, 사업 참여를 위해 다른 지역에서 다양한 청년이 부산으로 유입되게 될 것임.

주요 과제3. 부산형 현장실습 직업교육 프로그램 강화

□ 배경 및 목적

- 기존 청년 직업교육은 주로 이론 및 학습형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실제 교육과정 이수 후 취업으로 연결되는데 한계가 있었음.
- 따라서 부산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분야를 대상으로 현장실습형 청년직업교육 프로그램

을 확대 운영함.

- 기존의 현장실습형 교육사업을 확대하는 성격을 가짐.

□ 필요성

- 현장실습형 청년직업교육으로 교육과정 이수 후 바로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해 일자리 창출을 확대해야 함.
- 부산형 현장실습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의 차별성을 부각하는 동시에, 일자리 사업과 교육사업의 시너지를 창출할 필요성이 있음.

□ 타 지자체 사례

- 서울은 미래청년일자리사업과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를 현장실습형으로 추진하고 있음.
- 미래청년일자리사업은 미래 변화를 주도할 유망 신산업 3대 분야(온라인콘텐츠, 제로웨이스트, 소셜벤처) 기업에 청년을 매칭하고, 일 경험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여 경력형성의 기회를 제공함.
-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는 혁신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실무중심의 인턴십 과정을 제공하여 청년의 실질적인 역량강화 및 취업연계를 지원함.
- 이와 함께 우수기업 일체형 사업을 통해 청년이 기업현장에서 업무를 체험할 수 있는 단기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이를 통해 청년친화기업으로 유도하고 있음.

□ 세부 사업내용

① 부산디지털혁신 아카데미 운영(계속)

○ 추진배경

- 5년간('22.~'26.) 1만명의 고급 ICT 인력을 양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취업까지 연계하여 기업과 구직자간 미스매치 해소 및 청년 역외 유출 방지.
- 부·울·경 청년으로 교육대상 확대, 교육장 부산 전역 확대 구축, 취업연계 기업유치, 취업박람회 개최 등 부산을 ICT 인재양성 메카로 자리매김 필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2년~'26년(5년)
- 사업목표 : 미연간 2,000명 디지털 혁신인재 양성, 총 5년간 1만명 양성
- 사 업 비 : 1,507억원(5년간)

○ 사업내용

- 신산업 분야(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수요를 가진 지역특화 기업과 협력을 통한 맞춤형 ICT 전문 지역인재 대규모 양성.

○ 향후계획

- '24. 1월 : 인재양성 및 취업연계
- '24. 11월 : 취업박람회 개최, 성과 평가 등

□ 기대효과

- 현장실습형 청년직업교육의 수행으로 교육 이수 후 청년의 취업 성공률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부산의 지역특성이 반영된 청년직업교육 프로그램으로 해당 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다른 지역의 청년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것임.

주요 과제4. 취업교육 프로그램 간 통합 및 연계성 확대

□ 배경 및 목적

- 현재 부산 청년을 위한 교육훈련 기관은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 등을 비롯하여 매우 다양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음.
- 청년의 직업교육 및 각종 청년정책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의 설립·운영이 이루어져야 함.

□ 필요성

- 다양한 기관에서 분산되어 제공되는 부산의 각종 청년정책과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제공해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 취업교육 사업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역량 강화를 포함해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으로 이어지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타 지자체의 사례

-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다수의 청년 관련 기관에서 중복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부 관련 기관과 기능의 통폐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서울은 창업분야와 관련해서 32개의 대학과 연계하여 창업공간을 지원하는 서울캠퍼스타운을 조성·운영하고 있고, 디지털대장간 등을 비롯한 창업 창구를 운영하고 있음

□ 세부 사업내용

① 취업교육의 컨트롤 타워 설립·운영(신규)

- 추진배경부산 청년과 관련된 정책을 통합적으로 운영·모니터링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설립 및 운영.
 - 중장기적으로 부산청년미래재단(가칭)과 같은 방식으로 청년정책의 업무를 통합하여 별도의 재단으로 운영하고, 아울러 부산청년센터의 기능을 통합.
 - 일자리 사업과 교육 사업의 연계를 위해서는 다수 일자리 사업의 시행 주체인 부산경제진흥원이 컨트롤 타워가 되는 방향도 고려
 - 부산에서 시행하는 각종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유사중복 프로그램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고, 각 프로그램 간 연계성을 제고할 수 있음.
 - 아울러 온라인 프로그램과 오프라인 프로그램의 연계하여 각종 청년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재편

② 청년 맞춤형 JIT(just in time) 컨설팅 체계 정비(신규)

- 교육사업에서 상대적으로 직업 정보 제공 및 진로 상담과 관련한 사업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고, 직업훈련, 기능훈련, 고등교육 등을 통해 인적 자본 수준을 높이는 것에 집중되는 경향.
- 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청년의 연령대별로 맞춤형 직업 정보 및 직업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이는 기존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매칭하거나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설·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필요.
- 더불어 잠재적 청년 진입층을 대상으로도 JIT 컨설팅 체계를 마련해야 함. 예를 들어 현재 특성화고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이 존재하지만, 특정한 학교에만 편중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사업의 대상인 특성화 고등학교를 확대해야 함. 나아가 더 적극적으로는 중등학생들에게 노동시장에 대한 선택지 정보를 알리고, 노동시장에서의 역할을 예상하게 하는 체계적인 직업교육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

□ 기대효과

- 분산되어 있는 교육사업을 통합하여 청년의 취업교육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제공하게 될 것임.
- 아울러 맞춤형 취업교육 프로그램 컨설팅 체계로 청년의 취업교육 기회와 접근성이 개선될 것임.

주요 과제5. 청년정책과 취업교육 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홍보 지원

□ 배경 및 목적

- 부산에서 시행되는 각종 취업교육 프로그램은 주체 기관이 다양하여 청년이 정확한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알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청년 취업교육 프로그램 및 청년지원 정책을 운영할 때, 부산에서 시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및 소개를 확대함.

□ 필요성

- 청년이 참석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부산 청년지원 정책과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여 청년의 수혜도와 정책만족도를 제고해야 할 것임.
- 실태 조사에서 청년이 취업이나 기타 교육을 받지 못했고, 향후 교육을 받을 의사가 없다는 현실을 극복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함.

□ 타 지자체 사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정책은 직업교육 혹은 인재양성에 초점을 두고 추진되어, 다양한 청년정책을 홍보하지 못하고 있음.

□ 세부 사업내용

① 청년정책의 시행과정에서 취업교육 프로그램의 소개 의무화(신규)

- 부산에서 시행되는 청년 교육과정에서는 부산이 추진하는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소개.
- 취업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는 개별 사업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청년정책을 지원하는 기관 및 웹사이트도 함께 소개.

② 청년정책 지원대상자 대상으로 취업교육 프로그램의 안내자료 전달(신규)

- 매년 10월에 익년도의 취업교육 프로그램 일정을 기획하고, 해당 프로그램의 일정표를 청년에게 제공.
- 아울러 청년교육과정 시, 매년의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의 참여를 제고.

③ 취업교육 프로그램 전달 및 인지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수행(신규)

- 단계별 모니터링을 통해 취업교육 프로그램의 평가와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취업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청년의 인식을 점검.

- 청년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매월 청년에게 사전 제공하여 청년의 참여도를 제고.
- 아울러 프로그램 참여자의 만족도 조사와 더불어 직업교육 프로그램 성과 관리.

□ 기대효과

- 청년 취업교육 프로그램과 청년정책의 통합화로 청년의 정책수혜도와 만족도를 제고하게 될 것임.
- 아울러 청년정책 및 취업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책집행과정의 문제를 파악하여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임.

주요 과제6. 수요맞춤형 취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 배경 및 목적

- 부산은 매년 다양한 형태의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청년의 참여도는 아주 낮으며, 이는 다층적인 요구를 가진 청년의 수요를 파악하기 못한 한계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부산에서 시행하는 취업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청년의 참여도 및 만족도를 제고해야 할 것임.
- 현 시대의 청년은 단일 계층집단이 아니라 매우 다층적인 집단의 특성을 갖고 있어, 청년에 대한 이해도와 공감을 높이고, 청년이 형성하고 있는 가치를 보다 정확히 파악해 정책수립의 근거 자료 활용해야 함.

□ 필요성

- 부산 청년이 원하는 취업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취업교육과 실질적인 취업의 시너지를 창출해야 함.
- 부산에서 추진 중인 청년정책을 포함해 다양하게 추진 중인 취업교육 프로그램의 참여와 홍보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함.
- 청년이 갖고 있는 다양한(직장 및 근로가치) 가치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취업교육 프로그램이 기획·집행되어야 함.

□ 타 지자체 사례

-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청년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수요를 명확히 파악하지 않고, 공급자적 측면에서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는 한계가 있음.
- 기존 정책에서는 청년이 갖고 있는 직장 및 근로가치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관련

정책이 추진된 바가 없음.

□ 세부 사업내용

① 정례적으로 부산 취업교육 프로그램 수요조사(신규)

- 매년 부산 청년 취업교육 프로그램에 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이는 청년과 기업의 이중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 즉 청년의 수요와 기업의 수요를 확인하고, 미스매치한 부분을 중심으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함.
- 청년 취업교육 프로그램 수요조사는 청년의 연령, 직업, 학력, 주거형태 등을 고려하여 차별적으로 추진함.
- 청년 취업교육 프로그램은 주로 대학교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참여인원이 매우 제한적이었고, 이를 고등학교 혹은 산업체 등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청년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주제, 내용, 방식 등의 측면에서 다양화하고, 수요조사에 기반한 프로그램을 구성함.

② 청년의 직장 및 근로가치 파악 및 홍보(신규)

- 청년의 연령, 학력, 직종별로 청년이 갖고 있는 직장 및 근로가치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필요성이 있음.
- 그리고 청년이 갖고 있는 직장 및 근로가치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특히 다른 지역과 차별성이 무엇인가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필요성이 있음.
- 파악된 청년의 직장 및 근로가치를 지역주민 및 기업체에게 적절히 홍보해야 할 것임. 이를 통해 청년친화적인 근로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임.
- 또한 청년 사이에서도 상이한 직장 및 근로가치를 확인하여 보다 효과적인 취업교육의 방향성을 설정함.
- 청년의 가치와 현실은 다소 격차가 있고, 청년가치의 상호모순성이 발생하기도 함.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측면의 대안 마련이 요구됨. 이를 위해 매년 청년가치와 현실 격차의 극복방안을 모색하는 부산청년정책제안제를 실시함.

□ 기대효과

- 공급적 방식에서 탈피하여 수요 지향적 방식으로 청년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게 될 것임.
- 아울러 취업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성과관리로 청년정책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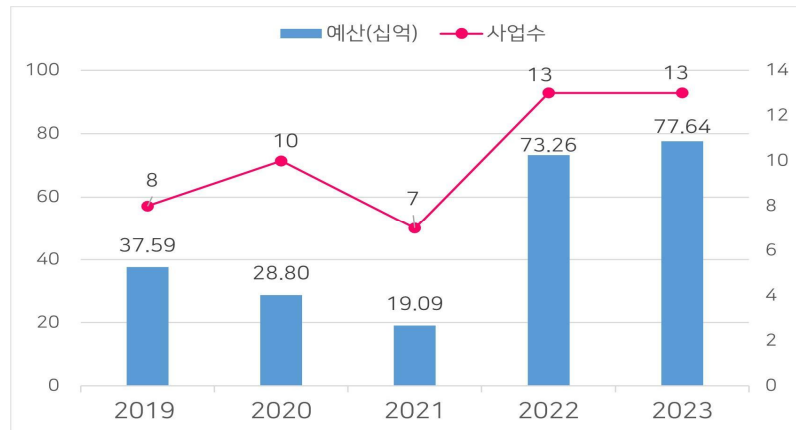
- 청년의 직장 및 근로가치를 파악하여 기업 차원에서 청년 친화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계기를 제공함.
- 청년의 가치와 현재의 가치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청년과 조화되는 지역사회 문화를 창출하게 될 것임.

3) 주거 분야

(1) 1기 정책 평가

- 1기의 주거 관련 청년정책은 주로 주택공급과 머물자리론,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청년월세지원 등과 같이 주거비용 지원 등 주로 20~30대의 경제수준에 비해 목돈이 요구되거나 과도한 비용이 지출되어야 하는 주택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이 주를 형성하고 있음.
- 1기 주거분야 정책의 수는 다른 청년정책 분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전반기(2019~2021년)에는 8개에서 10개 내외를 유지하였으나 2022년 이후에는 13개를 유지하고 있음.
 - 다른 청년정책 분야에 비해서 정책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것은 개별 정책에 필요한 예산이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산이 청년의 다양한 주거정책 수요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함.
 -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청년의 주거비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청년의 내집 마련 기회의 제공과 주택비용 경감을 위한 정책들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또한 주거비 부담과 더불어 청년이 주거환경에 대한 높은 니즈(needs)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개발도 필요함.
- 주거분야 정책을 예산규모의 측면에서 보면, 2019년 380억 수준을 보인 이후 2021년까지 계속 감소하였으나 2022년 이후에는 730억으로 전년도 대비 300% 이상 증가하는 특징이 나타남.
 - 다른 청년정책 분야에 비해 증가율이 크고, 비중도 크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요인은 청년정책에서 주거분야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함.

<그림 6-15> 주거 분야 정책 및 예산 추이



*출처: 부산 연차별 청년정책 시행계획 요약

- 주거분야에 대한 1기 정책은 주택공급정책과 주거비용 지원정책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청년의 다양성에 따른 상이한 정책수요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됨.
- 전국 <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와 <2022 부산청년패널조사>의 조사결과를 볼 때, 부산 청년은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주거정책에 대한 이질적인 수요를 가지는 것으로 보임.
- <2022 부산청년패널조사>의 분석을 보면, 부모와 동거여부에 따라서 주거형태의 비중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두 그룹의 주거정책 수요가 상이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부산 청년을 대상으로 한 FGI의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에도 학업이나 직업 등을 이유로 학교나 직장 근거리의 기숙사나 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청년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청년의 요구에 대응하는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2022 부산청년패널조사>에 따르면 1인가구의 비중이 약 20% 내외였고,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를 때 부산의 경우 청년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고, 광역지자체 중에서 서울 다음으로 청년 1인가구가 많았음. 따라서 이러한 1인가구를 위한 주택공급 및 주거비 지원, 주거지 안전 등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주택 형태에서도 부산의 경우, 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청년이 보증금이 있는 월세에 거주하는 비중이 보증금 없는 월세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높다는 점에서 보증금 지원에 대한 정책 수요가 높을 것으로 보임.
- 부산 청년을 대상으로 한 FGI의 결과, 부산 청년은 주거 정책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정책에 대한 접근성이 낮다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남.
- FGI 결과에 따르면 주거정책에 대한 정보 부족과 홍보에 대한 불만은 20대 초반에서부

터 30대 후반까지 전 청년 연령층에서 지적되는 사안이었음.

- 부산에서 청년정책포털, SNS 등을 활용하여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청년은 홍보가 부족하다는 인식이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홍보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 주거정책의 경우, 정책주체가 다양하고 주체별로 정책의 내용, 요건 등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판단 됨.
 -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행되고 있는 정책뿐만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개별 지역 주택공사 등 공기업의 지원정책,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정책 등 다양한 정책들이 존재함.
 - 정책 주체별로 청년 주거정책의 대상연령, 소득기준, 재산기준 등이 상이하고, 공고기간, 지원내용도 상이함.
- 또한 최근 법률지식의 부족과 부동산 거래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전세사기 등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의 경우 사회 초년생인 청년에게 상대적으로 더 취약하게 나타나는 점에서 법률 및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정보 제공 등이 필요함.

(2) 2기 추진 전략

▶ 2기 추진전략: 생애주기에 맞는 체계적인 주거지원

-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응 가능한 청년 주택정책 확대
-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정책개발 필요
- 효율적 정책홍보 및 추진을 위한 통합적 홍보창구 및 방안 마련

- <2022 부산청년패널조사>와 FGI 분석을 통해 도출된 부산 청년들의 요구를 종합할 때 2기 사업은 다음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질적인 청년들의 주택수요가 다양하고, 주택공급이 청년의 주거 안정에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정책이라는 점에서 주택공급 정책의 확대와 다변화가 필요함.
-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임대주택 정책을 확대하고 청년들의 다양한 주택수요를 고려하여 임대주택 공급 정책의 다변화가 필요함.
- 청년을 구성하는 연령대가 20대 초반 학생부터 30대 후반 직장인 및 신혼부부까지 다양하며 직업, 성별, 결혼유무 등에 따라 다양한 주택수요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청년 주거정책이 필요함.
- <2022 부산청년패널조사>에 따르면 부산 청년들이 현 거주지로 응답한 지역은 학교와

상업·문화 시설의 접근성이 높은 지역이었음. 따라서 주택공급 정책도 이러한 선호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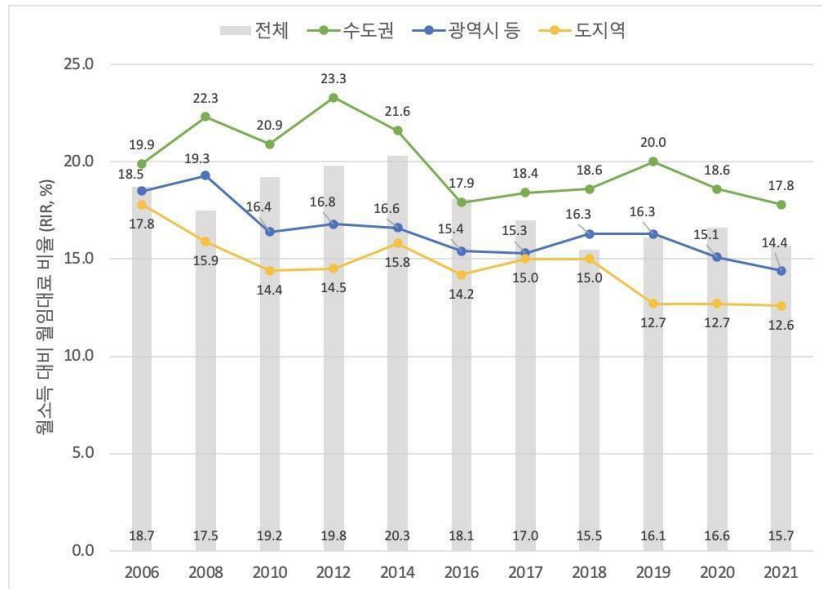
<그림 6-16> 2기 청년정책 기본계획 추진방향: 주거 분야



- 2023년 중앙정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주거분야 청년정책이 공공임대주택 등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부산 차원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학생, 미취업 청년, 사회초년생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함.
- 청년의 주거형태가 주로 전세 또는 월세라는 점에서 전세자금 대출지원이나 월세보조금 지원 등 주거안정 정책 공급이 필요함.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021년 일반가구의 주거 형태 중 자가 비율은 57.3%이지만, 청년의 자가 비율은 13.8%에 불과하고, 임차비율이 81.6%로 압도적인 수준을 차지하고 있음(국토교통부 2022).
 - 반면에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RIR: Rent Income Ratio)은 전국 및 지역별로 보았을 때 2006년 이후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광역지자체의 경우 2006년 18.5%에서 2021년 14.4%로 감소하였음. 하지만 2021년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부산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RIR: Rent Income Ratio)은 20%로 서울 다음으로 높았음.
 -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년의 경우 전·월세 관련 지원정책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실제로 <2021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주거지원은 ‘전세자금 대출지원’이 38.1%로 가장 높았음. ‘월세보조금 지원’의 경우에도 17.4%의 정책수요가 있었음.

<그림 6-17>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 추이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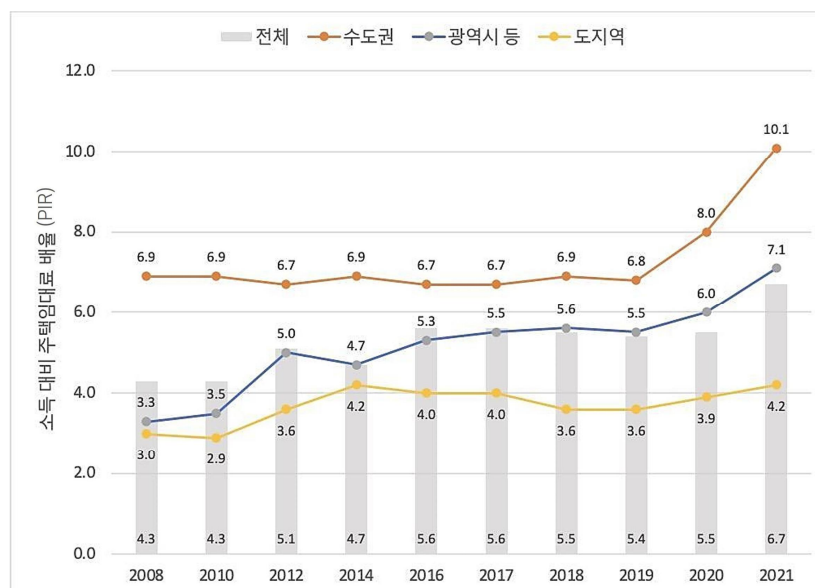
- 전세자금 대출지원이나 월세보조금 지원과 같은 직접적인 주거안정 지원뿐만 아니라 전·월세 등의 주거 형태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간접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 주거 형태에 따라서 평균거주 기간이 상이함. <2021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자가의 경우에는 평균 10.5년을 거주하는 반면, 전·월세의 임차인 경우에는 평균 3년을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국토교통부 2022).
- 대다수의 청년이 전·월세 형태의 임차인이라는 점에서 잦은 이사로 인해 상대적으로 부동산중개수수료와 이사비용의 지출이 빈번하여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 이사비용지원과 같은 정책지원도 필요함.
- 이와 더불어 법률지식이 부족하고 부동산 거래에 익숙하지 않는 청년이 전세사기에 노출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어 왔고, 잦은 이사에 따라 임대차계약 등 부동산 거래의 빈도가 높다는 점에서 청년에게 적절한 법률지원 및 부동산 거래에 대한 지식 제공 및 상담을 제공하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부산 청년이 요구하는 주거환경에 대한 기준이 향상되어 왔고, 안정적이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선호한다는 점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들의 개발이 필요함.

- 앞서 분석한 <2022 부산청년패널조사>에 따르면 부산 청년은 집을 투자보다는 가족과 함께 하는 공간이나 휴식의 공간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주변 주거환경의 안정성에 대한 기준이 높음.
- 부산 1인가구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고, 성별에 따라 청년이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고 느끼는 비율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주거환경의 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이 필요함.

□ 단기적으로 주거안정과 주거여건의 개선, 주거환경의 안전과 같은 단기적인 정책목표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내집마련을 위한 정책지원이 필요함.

- 과거에 비해 현재의 청년은 평생임차세대(generation rent)로 표현될 만큼 생애에 걸쳐 주거 형태가 월세나 전세에 살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현실화되고 있음(박미선 2021).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자가로 주거상향이동이 가능하다는 주거사다리론(housing ladder)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세대가 되었다고 함.
- 실제로 2020년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의 자가 점유율은 13.8%에 불과하며 일반가구가 57.3%인 것과 대조적인 측면이 있음(국토교통부 2022).
- 부산과 같은 광역지자체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 Price Income Ratio) 추이를 보더라도 2008년 이후 PIR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1년에는 PIR가 7.1배로 전국 평균인 6.7배보다 높아 과거에 비해 주택구입의 부담이 커지고 있음. 공간적으로 광역시라는 부산의 특징상 PIR가 8.4배로 전국 평균 및 광역지자체 평균보다 높아 주택구입 부담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6-18>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 추이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 이로 인해 비혼, 미혼, 출산 지연 및 포기가 발생하고, 높아진 주거비용을 감당하면서 삶의 질 자체가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청년이 평생임차인으로 낙오되는 것을 방지하고 장기적으로 자가와 같은 안정적인 주거환경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함.

□ 주거분야 정책에 대한 홍보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통합적인 홍보 창구 및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다양한 주거정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통합적인 관리창구의 부재, 정책홍보의 부재로 인해 “청년도 모르는 청년 주거정책만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¹¹⁾
- 주거분야 청년정책의 경우 부산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초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부산이 제공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주체가 제공하는 주거정책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부산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FGI에서 나타나듯이 부산의 홍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정보 부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청년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홍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질적 정책 수요자들에게 주거분야에 대한 정책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홍보 채널과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사업구조

- 부산 1기 청년정책 주거분야 정책평가와 2기 주거분야 정책방향을 고려할 때 2기 청년정책 주거분야의 주요과제를 ①청년 내집마련 지원, ② 청년 주거비용 지원, ③ 청년 주거환경 개선, ④ 청년 주거정보 제공 등 4대 과제로 설정.
- 주거분야 4대 주요과제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사업 중에서 확대 개편이 필요하거나 신규 추진이 필요한 세부사업으로 16개를 설정.

11) 한국경제, 2023.03.08. “청년 주거정책만 101개...”몰라서 못 쓴다“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3030862171>

<그림 6-19> 부산 2기 청년정책 주요 과제 및 사업: 주거 분야



(3) 주요과제 및 세부사업 내용

주요 과제1. 청년 내집마련 지원

□ 배경 및 목적

- 주거 분야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는 ‘집’을 마련하는 것에 있음.
- 주택 구입 및 임대를 위해 목돈이 들어가고 다양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청년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함.
-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주택공급 정책과 별개로 부산 차원에서 지역 청년에게 특화된 내집 마련을 위한 지원 정책이 필요함.
- 청년들이 세대별, 학력별, 소득별로 다양한 주거수요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이질적인 주거 수요가 존재함.
 - 청년 임대주택 공급정책의 다변화를 통해 청년의 다양한 정책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패키지를 마련.

□ 필요성

- 2022 부산청년패널조사 분석의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부산 청년은 집을 투자나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인식하기보다는 가족과 함께 하는 공간 혹은 휴식의 공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더 크다는 점에서 청년들이 안정적인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 최근 몇 년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급증하여, 청년의 내집 마련을 위한 부담이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주거 안정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청년임대주택과 주거만족도에 대한 기존의 연구(김태완&장미선 2023)는 청년의 주거 안정성이 주거 만족도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더 나아가 청년의 삶의 질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라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함.
- 단기적으로 전·월세의 마련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년들이 집을 소유할 수 있는 지원제도의 마련이 필요함.

□ 세부 사업내용

① 청년 맞춤형 공적 임대주택 공급사업(확대)

○ 추진배경

-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이유로 자가 마련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청년의 주거수요가 전세 및 임대 주택으로 집중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할 때 임대주택을 확보하여 주거안정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4년부터 계속
- 주택규모 : 85㎡ 이하 공동주택 등
- 소요예산 : 100억원(년)
- 주요내용
 - 저소득층·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LH, 부산도시공사)가 기존주택 등을 매입·임차하여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주거안정 도모

○ 추진계획

- 매년 매입임대주택 공급 희망수요 조사·공급계획 확정, 사업추진

② 역세권 임대주택 공급 (확대)

○ 추진배경

- 부산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층에게 양질의 저렴한 주거 공급방안 필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년부터 계속

- 소요예산 : 민자
- 공급대상 :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층
- 주요내용
 - 대중교통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상업지역)에 건축규제 완화를 통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10년간 공급하여 청년주거 안정에 기여
 - * (서울) 2016년부터 추진한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
- 사업방향
 - 2022년까지 역세권 지역에 민간사업자와의 공동 개발을 통해 역세권 청년주택을 서초역, 양재역, 합정역 등 청년이 선호하는 지역에 공급.
 - 토지확보 및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상업지역의 용적률 완화 및 세금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여 공급

○ 추진계획

- 2028년까지 3,000세대 공급(입주) 목표로 지속 추진

③ 부산형 신혼부부 럭키7 하우스 지원사업 (확대)

○ 추진배경

- 청년 중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에 입주시에 최대 7년까지 임대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및 임대료를 지원하는 정책.
-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따라 결혼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고, 신혼부부의 주거마련
-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출산율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신혼부부 대상의 주거마련 비용 지원 필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2033년(10년)
- 사업규모 : 행복주택 300호 공급
- 소요예산 : 119억원(10년간)
- 사업내용
 - 지역내 신혼부부에게 행복주택 등에 최대 7년간 임차보증금의 대출이자와 월임대료를 지원함으로써, 주거안정과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
 - * (서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차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대 2억을 최장 10년까지 최대 연 3.6%의 이자를 지원.
 - * (대전) 최대 1억을 최장 6년까지 최대 연 4.5%의 이자를 지원.

○ 사업추진 방향

- 신혼부부에게 적합한 임대주택의 부산 평균 보증금과 임대료를 조사하여 대출한도 및 지원금액의 산정이 필요.
- 최근 경기변동에 따라 이자율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이자율 변동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려.

- 현재 최장 7년까지 지원할 계획이지만 자녀의 수에 따라서 최대 10년까지 연장하는 등 자녀수에 따른 상이한 정책수요에 대한 대응 필요.
- 신청 대상자는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로 한정하고, 부부합산소득도 2022년 평균 맞벌이 부부의 평균소득인 8,295만원¹²⁾ 보다 높게 설정하여 대다수의 신혼부부가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다만, 임차보증금의 한도를 설정하여 고가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필요.

○ 추진계획

- '26년까지 300호 공급 후 '33년까지 지속 지원

④ 재개발 임대주택 공공 매입 후 공급(신규)

○ 추진배경

- 재개발 사업 추진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에 따라 전체 가구수의 20% 내외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하는데, 기존의 방식은 민간이 매입해서 임대 후 분양되는 방식
- 이러한 재개발 임대주택의 전체 또는 일부를 시가 매입하여 청년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하는 정책
-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이유로 자가 마련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청년의 주거수요가 전세 및 임대 주택으로 집중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할 때 임대주택을 확보하여 공급하는 정책이 필요.
- 재개발(예정)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도심과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청년이 선호하는 학교와 상업·문화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 청년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기초지방자치단체 사례로는 경기도 광명시가 2022년 광명제16R구역 재개발사업에서 공공매입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철거이주민 등에게 행복주택 유형으로 시세의 60~80%의 임대료로 공급 사례¹³⁾

○ 사업추진 방향

- 부산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의 임대주택 의무공급 물량을 인수하여 청년에게 임대주택으로 공급
- 재개발 사업 추진 및 인가 단계에서부터 재개발조합 및 사업시행자와 논의하여 부산과 부산도시공사가 안정적으로 의무임대물량을 인수할 수 있도록 사전조율 필요
- 재개발 과정에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품질차이 및 차별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다는 점¹⁴⁾에서,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재개발조합 및 사업시행자와

12) 통계청 동계개발원, “한국의 사회동향 2022” <https://sri.kostat.go.kr/menu.es?mid=a90104010100> (최종확인: 2023.08.03.)

13) 선데이광명. “광명도시공사, ‘광명제16R구역 재개발 임대주택(행복주택)’ 특별·우선공급 입주자 모집.” 2022.09.16. <http://www.sundaygm.com/news/articleView.html?idxno=5862>

사전조율을 위한 노력이 필요

- 대상자의 선정은 희망주택 공급 기준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

⑤ 산업단지 내 청년임대주택 공급(신규)

○ 추진배경

- 부산 산단 및 공단은 주로 동부산과 서부산의 시 경계 지역에 분포하고 있어 청년 근로자의 접근성이 낮음. 직주근접을 선호하는 청년의 주택 수요 대응 필요
- 이질적인 청년의 개별적인 주거정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산단 입주기업 등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산단 인근 주거지역에 임대주택 한정 공급
- 산업단지 근무 청년의 주거수요에 부흥, 실질소득 향상을 통해 산단 입주 중소기업 등에 근무하는 청년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
- 타 지자체의 유사한 정책으로 인천이 2022년부터 산단·공단 지역에서 추진 중인 공공 청년임대주택사업 시행
 - 인천은 점단2일반사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공임대주택의 일부를 청년 중 사회 초년생 및 산단 근로자에 한정해서 공급하는 유사한 주거 정책 실시

○ 사업추진방향

- 산단 배후지역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의 형식으로 산단 입주기업 청년 근로자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지원
- 신규 산업단지 개발시 산단 입주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를 위한 공공임대 물량을 확보
- 산업단지 내 청년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는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일정한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산단 입주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에게 입주 기회 부여

⑥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신규)

○ 추진배경

- 토지소유권은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는 청년이 가지도록 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주택을 분양하는 정책
- 토지소유권은 분리하여 사업시행자가 갖도록 하기 때문에 주택의 분양가격을 낮출 수 있어 상대적으로 고품질의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장점
- 2022 부산청년패널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약 73.5%의 청년이 주택소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년에게 현실적인 가격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정책 필요
- 주택분양가격의 약 50%가 토지가격이라는 점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반값에

14) 이코노미스트. “엘리베이터도 없다…여전한 ‘외판 섬’ 임대주택 차별.” 2022.12.10. <https://economist.co.kr/article/view/ecn202212300018> (최종확인: 2023.08.10.)

주택공급이 가능

- 부산 도시공사가 소유한 임대주택 중 재개발 시기가 도래한 주택단지의 재개발을 통해 사업을 시행할 경우 손쉽게 부지 마련 및 사업 시행이 가능
- 타 지자체 사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이 시행한 정책
 - 2006년부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논의, 2007년 처음 법제화된 이후 환매조항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다 2021년 환매조항을 신설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 활성화
 - 2022년 서울이 고덕강일주택지구 3단지 내 500세대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시세의 70% 이하로 공급

○ 사업추진방향

- 부산도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노후화된 임대주택 재개발시 일부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공급
- 노후화된 임대주택의 경우에 저층으로 건설된 단지가 많다는 점에서 용적률 상승으로 추가 세대의 확보가 가능함으로, 기존의 영구임대주택 공급과 더불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확보 가능
- 분양주택 건설시 1인가구, 신혼부부 등 다양한 청년세대의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평면으로 공급
- 청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대상자는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소득기준을 공급유형에 따라 다르게 설정하여 다양한 청년에게 공급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⑦ 청년 세어하우스 공급(신규)

○ 추진배경

- 청년이 함께 거주하며 주거공간과 문화공간을 서로 공유하는 세어하우스 공급정책
- 청년 1인가구의 증가와 학업 및 취업 등의 이유로 단기적인 주거지를 필요로 하는 청년의 주거 수요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주거와 질 높은 주거공간의 보급 필요
-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 주거환경이 취약하고 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에 대한 주거안정성 확보가 필요
- 부산 청년을 대상으로 한 FGI 결과 한시적으로 또래 집단과 학교나 직장 근처에서 주거하는 것에 대한 수요 높음
- 서울을 비롯하여 경기도 성남, 수원 등에서 유사한 청년 세어하우스 공급 정책 실시
 - 성남은 '1인 가구 세어하우스 "같이 살자"' 정책을 실시하여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청년에게 세어하우스 공급
 - 서울은 다양한 형태의 청년 세어하우스를 공급, '2030 역세권 청년주택 용산 베르디움 프렌즈' 공급사업의 일환으로 3인 1실의 청년 세어하우스 공급, '노장청 세어하우스(한지 봉세대공감)' 정책을 통해 대학가나 청년 세대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노인가구가

남는 방을 학생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실시

○ 사업추진 방향

- 대학가 및 청년이 주로 주거하는 지역에 셰어하우스를 공공 또는 민간과 공동 투자를 통해 셰어하우스를 공급
- 다양한 유형의 셰어하우스 공급이 필요.
 - 일반형 셰어하우스: 일반 주택에 2~3인이 개인공간과 거실, 부엌 등을 공유하는 형태. 기존 일반 주택의 매입이나 보유하고 있는 공공주택을 1인가구 청년들을 위한 셰어하우스로 전환할 수 있다는 장점
 - 타운형 셰어하우스: 20~40명 이상이 거주하며 주거공간과 문화공간이 복합된 타운형 형태. 건물의 저층부는 청년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1인 오피스, 회의공간, 문화시설 등의 공간으로 조성하고, 상층부는 개인주거공간과 공유주거공간으로 조성하여 학생 및 사회초년생들이 하나의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장점
- 서울의 셰어하우스가 지원자 미달이 났었던 경험¹⁵⁾을 교훈삼아 청년들이 공동으로 지원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
- 주거지 이동이 빈번한 학생 및 사회초년생의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높이기 위해 주거에 필요한 빌트인 시설(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책상, 옷장, 침대 등)을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
- 지원자격은 부산에 주거하는 청년세대 중에서 소득기준 별로 순위를 정하되, 완화된 소득기준을 적용하여 다양한 청년이 기회를 갖게 할 필요가 있음. 또한 남녀의 비율을 고려한 선발기준 설정 필요

□ 기대효과

- 주택 공급을 통해 청년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청년의 삶의 질의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통해 청년의 다양한 주거수요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됨.
 -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의 공급은 청년의 특성에 따라 상이한 주거수요에 부응하여 청년 유출을 억제할 것으로 예상됨.
 - 주거 문제를 청년의 또 다른 문제인 학업, 직업, 결혼 등과 연결시켜 다양한 대응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상이한 청년의 주거수요에 부응하고, 장기적으로 청년이 안정적으로 부산에 정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장기적으로 시에서 안정적이고 대안적인 주택 공급을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을 낮추고, 부산의 부동산 가격 안정 및 현실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15) 조선일보. ““셰어하우스, 꼭 모르는 사람과 살아야 하나요?”… 용산 청년주택 미달 쇼크.” 2021년 5월 7일. http://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1/05/07/VVBKPN24IRALXHBPEHTD4TRBH4/ (최종 확인: 2023.08.07.)

주요 과제2. 청년 주거비용 지원

□ 배경 및 목적

- <2022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의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부산은 서울 다음으로 높은 지역에 해당함.
- 2022년 부산 청년의 주요한 주택 형태가 전·월세이고, 부모로부터 독립한 가구 및 1인 가구로 한정할 경우 전·월세의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소득에서 주거비용이 차지하는 비율도 높음(<2022 부산청년패널조사>, <2022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 주거 형태에 따라 전체 소득에서 전·월세 주거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한 목표임.

□ 필요성

- 독립거주 및 1인가구 청년의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여 실질소득의 향상 및 더 나아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음.
- <2022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월세 주거형태의 경우 평균 주거기간이 2년 미만으로 이사가 잦음. 이에 따라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사비용 및 부동산중개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함.
- 청년 내집마련 지원정책에 비해 주거비용 지원정책의 경우 지원에 소요되는 1인당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청년의 실질소득 증가에 즉각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효과가 높으므로 다양한 정책 개발 및 도입이 필요함.
- 청년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향후에도 청년 1인가구의 수 및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

□ 세부 사업내용

① 청년희망월세 지원사업

○ 추진배경

- 2022 부산청년패널조사에 따르면, 부모로부터 독립한 청년의 주거 형태 중 월세의 비중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청년의 월세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는 지원 정책이 필요
- 주거비용 상승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지원하는 지속적인 정책이 필요
- 유사한 사업으로 중앙정부가 주관하여 모든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있지만, 2024년에 종료되는 한시 사업이므로 사업 종료 이후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주거 불안이 존재하는 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부터 계속
- 사업규모 : 3,000명 내외
- 소요예산 : 1,200백만원(년)
- 주요내용 : 월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 사업추진방향

- 현행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내용을 바탕으로 2024년 이후 부산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계속 실시.
- 지원내용과 지원자격의 세부 사항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소득 및 재산 기준 등을 참고하되 대상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실질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
 - 부산 청년을 대상으로한 FGI에서도 확인되듯이, 대다수의 주거 관련 청년정책이 소득기준 등이 엄격하고 1인가구 등에 한정적으로 지원된다는 의견들이 있다는 점에서 정책은 포괄적이되 지원내용을 달리 하는 방안이 필요.
-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세분화하여 지원금액을 10~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라도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학교나 직장 근처로 독립을 하지 못하는 청년에게도 지원될 수 있도록 직주근접성 여부 등을 포함해 소득 및 재산기준에 따라 차등된 금액을 지원.

② 청년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확대)

○ 추진배경

- 고금리 시대에 전·월세 마련을 위한 임차보증금의 대출이자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대출이자 부담에 대한 경감 정책을 통해 청년의 주거 안정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 필요.
 - 학생 및 사회초년생의 경우 임차보증금을 위한 목돈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대출에 의존하는 경향이 큼.
 - 대출금리 상승에 따라 대출이자 부담이 상승하여 주거비에서 이자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
- 부모로부터 독립한 청년의 주요한 주거 형태가 전세 또는 월세라는 점에서 청년의 정책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
- 대다수의 광역지자체가 유사한 청년 임차보증금 이차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도 유사 사업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 대표적으로 대구의 경우, 대구에 주민등록지이거나 전입예정인 19~39세 무주택 청년들에게 임차보증금 2억 이하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융자한도 5천만원까지 2% 이자비용을 최대 4년까지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광주는 광주에 주민등록이 된 19~3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2억 이하 주택의 임차보증금 90%(최대1억원) 범위 내에서 이자의 2% 이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
- 서울은 서울에 거주중인 19~39세의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에게 임차보증금의 90%(최대2억원) 범위 내에서 2% 이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년부터 계속
- 사업규모 : 1,000명 내외
- 소요예산 : 1,600백만원(년)
- 주요내용 :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사회초년생 등)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사업추진방향

- 부산은 현행 ‘머물자리론’이란 명칭으로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임차보증금 대출과 이차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부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39세 무주택 청년이면서 본인(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2억 이하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임차보증금의 90%(최대 1억원) 범위 내에서 대출이자 연 2% 이자를 지원하고 있음.
- 다양한 청년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현행 추진되고 있는 ‘머물자리론’의 대상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소득기준은 본인 및 부부합산 연소득을 4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1인가구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부의 경우에는 합산소득기준을 5~6천만원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 현행 ‘머물자리론’은 대상을 공고일 기준 부산에 주민등록된 청년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청년의 유입을 장려하고 이주하는 청년의 현실적인 정책 수요에도 대응하기 위해 전입예정자도 정책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③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확대 및 개선)

○ 추진배경

-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지원하는 정책.
- <2022 부산청년패널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부모로부터 독립한 청년 33.9%의 주거형태가 전세라는 점에서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
- 부산 청년을 대상으로 한 FGI에서도 30대 청년의 경우 전세대출과 관련된 지원책에 대한 정책수요가 높은 것이 확인.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사업은 부산, 인천, 경기, 서울, 대구 등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었으나, 2023년 7월부터 중앙정부가 주관하여 모든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년부터 계속
- 사업규모 : 1,500명 내외
- 소요예산 : 600백만원(년)
- 주요대상 : 전세보증금 3억원이하, 연소득 50백만원 이하 청년 (부부합산 70백만원)
* FGI의 결과에서도 확인되듯이, 다수의 청년이 정책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소득 및 재산기준의 완화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소득기준을 늘리는 제도 개선이 필요

○ 추진계획

- 24. 1월 ~ : 신청자 지원 및 대상자 선정, 사업추진, 사업성과 분석

④ 청년 이사비 지원(신규)

○ 추진배경

- 상대적으로 무주택자의 비율이 높은 청년의 특성과 학업 및 취업 등을 이유로 이사가 잦아 이사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현실에 대응하는 정책.
 - 2022 부산청년패널조사와 2022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 청년의 경우 1인가구 비중과 취업 및 학업 등으로 인해 주거지의 유동성이 높았음. 이는 청년이 다른 세대에 비해 소득 대비 이사비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함.
- 부산으로 유입되는 청년의 이사비 부담을 경감시켜 부산에서의 정착을 돕고, 청년유입을 활성화하는 정책이 필요.
- 타 지자체의 사례로는 서울이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서울 청년 이사비용 지원’ 사업이 있음.
 -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19~39세)이 거래금액 2억 이하 전·월세 계약을 맺는 경우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4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

<그림 6-20> 서울 이사비 지원 포스터



*출처: 서울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년부터 계속
- 사업규모 : 500명 내외
- 소요예산 : 200백만원(년)

○ 사업추진방안

- 부산 청년이 2억 이하 전·월세에 거주하는 경우 1인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
- 중복수혜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의 연차에 관계없이 생애 1회만 지원

○ 향후계획

- 24. 1월~ : 세부추진계획 수립
- 24. 3월~ : 사업대상자 청년 선정 및 이사비 지원, 사업성과 분석

□ 기대효과

- 청년의 주거비용 지원을 통해 전체적인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부산에 거주하는 청년의 실질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주거 유형에서 전·월세의 비중이 높고, 이로 인해 평균 주거기간이 일반가구에 비해 짧은 청년의 특성을 반영해 추가적인 비용을 정책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청년의 실질적인 정책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높은 정책 만족도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주거와 관련된 비용 경감을 통해 청년의 주거만족도 뿐만 아니라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주요 과제3. 청년 주거환경 개선

□ 배경 및 목적

- 주택 공급 및 주거비용의 경감과 더불어 청년 주거환경 개선 노력이 필요
- <2022 부산청년패널조사>에 따르면, 부산 청년이 집을 투자보다는 휴식과 친교의 공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크게 나타남. 이는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삶의 질과 연결된다고 점을 시사함.
- 부산 청년은 대체로 주거환경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성별에 따라 불안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고, 불안에 대한 이유로 대다수의 청년이 안전시설물, 방범창, 출입구 보완시설 등의 미비를 지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거환경의 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더 나아가 청년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거환경 안전문제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필요성

- 부산 청년의 주거 밀집도가 높은 지역의 안전시설 확충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는 청년이 없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1인가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주거지 안전문제는 계속적으로 더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책적으로 안전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음.
- 부산 청년이 집을 여가와 휴식의 공간으로 인식하는 만큼 주거 환경이 개선될 경우 청년 삶의 질도 개선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대응이 필요함.

□ 세부 사업내용

① 청년안심주거 인프라 구축(신규)

○ 추진배경

- 청년 1인 가구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주거환경 안전과 관련하여 주거지 주변의 안전시설 미비가 안전문제의 주요한 요인으로 지목된다는 점에서 청년 밀집 지역 및 범죄발생 비율이 높은 지역에 안전시설 확충이 필요.
 - <2022 부산청년패널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주거환경이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은 CCTV, 출입구 보안시설 등 주거지 및 주거지 주변의 안전시설 미비를 주요한 원인으로 들고 있음.
- 유사한 정책사례로 서울의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사업’이 있음.
 - 1인가구 밀집지역 및 범죄발생 비율이 높은 지역에 CCTV, 보안등, 비상벨 등 범죄예방시설물을 설치하고, 순찰 활동을 강화하는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서울은 시설물 확충 뿐만 아니라 “서울 안심이” 앱을 보급하여 위급상황시 스마트폰을 통해 자치구 CCTV 통합관제센터에 내 위치와 현장상황을 빠르게 전달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년부터 계속
- 사업규모 : 청년밀집지역 보안을 점검하고 예방할 수 있는 토탈 안전망 구축
- 주요사업 대상지 : 대학가, 청년밀집 원룸가, 고시원 주변 등
- 소요예산 : 200백만원(년)

○ 사업추진방안

- 현행 부산이 추진하고 있는 ‘청년 안심 주거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대학가 뿐만 아니라 청년 1인가구 비중이 높은 지역 및 범죄발생 비율이 높은 지역에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등 개선 사업을 진행.

- 주요 대학가 주변의 원룸 밀집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고, 안전시설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안전관련 앱 개발 및 보급을 통해 범죄 예방 및 신속대응 체계의 구축.

<그림 6-21> 서울 안심이앱 서비스 흐름도



*출처: 서울시16)

② 청년 1인가구 안심홈 세트 지원(신규)

○ 추진배경

-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의하면, 2015년부터 청년 1인가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고, 주요 광역시 중에서도 부산은 서울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청년 1인가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이 필요.
- 2022 부산청년패널조사에서도 청년은 주거지 불안의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로 CCTV, 주거지 출입구 보안시설, 방범창 등 안전시설의 미비를 들고 있어, 이에 대응하는 정책이 필요함.
-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1인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1인가구를 대상으로 ‘안심홈세트’를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서울의 경우에는 25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가정용CCTV, 문열림센서, 스마트 초인종, 창문장금장치 등을 제공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기초지자체의 경우, 광주 광산구, 서울 노원구 등은 여성 청년 등에 한정하여 안심홈세트를 제공하고 있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년부터 계속
- 사업규모 : 청년 500명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산인 청년 중 전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이 1.5억원 이하인 청년
- 구성물품 : 스마트초인종, 홈CCTV, 문열림센서, 휴대용비상벨, 창문잠금장치 등
 - 대상자에게 모든 물품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품목과 선택품목을 구분하

16) 서울시, “‘안심이앱’ 더 좋아진다…안심귀가택시·긴급알람 추가.” 내 손안의 서울. 2021.11.16.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3223> (최종확인: 2023.08.11.).

여 대상자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지급하는 방안 필요

- 소요예산 : 200백만원(년)

○ 향후계획

- 24. 1월~ : 세부추진계획 수립

- 24. 3월~ : 사업대상자 청년 선정 및 안심홈세트 물품 지원, 사업성과 분석

<그림 6-22> 광주 광산구 여성1인가구 안심홈세트 홍보물



*출처: 광산구청¹⁷⁾

□ 기대효과

- 청년 밀집 거주지역 및 범죄발생 비율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지 안전에 기여함으로써 주거지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주거지역의 안전 뿐만 아니라 주거지 자체에 대한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청년이 집이라는 공간에서 느끼는 주거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부산의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 전체의 주거 안전 개선에 기여하고 시민들의 주거 만족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주요 과제4. 청년 주거정보 제공

□ 배경 및 목적

- 부산의 정책 홍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FGI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부산 청년이 시의 청년정책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만 중에 하나는 주거정책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음
- 청년 주거정책의 경우는 부산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를 비롯해서 다양한 기관에서 정책을

17) 출처: 광산구청 홈페이지.

https://www.gwangsan.go.kr/bb/bbBoard.php?action=view&pageID=mayor0201000000&SEQ=48889903&movePage=1&boardID=MAYOR_NEWS

내고 있으나, 그 선정 기준도 상이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과 통로도 다르다는 문제점이 있음

- 최근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더불어 전세 사기 등으로 청년세대의 피해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사회 초년생인 청년의 경우 상대적으로 법률지식이 부족하고, 주로 전·월세의 주거 형태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 거래가 주기적이고 빈번하므로 전세사기에 더 많이 노출될 가능성이 큼.

□ 필요성

- 청년을 위한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 및 구축하여 청년에게 단일한 창구를 통해 모든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
- 청년에게 정확한 법률정보와 부동산 거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

□ 세부 사업내용

① 주거복지센터 운영(계속, 확대)

○ 추진배경

- 공공사업자와 지자체로 분산된 주거복지사업의 통합적 관리 및 수요자를 위한 상시적 상담, 정보제공 등 원스톱 창구 마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년부터 계속
- 사업규모 : 주거복지센터 2개소 운영
- 소요예산 : 600백만원(년)
- 주요내용
 - 주거복지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주거관련 조사지원
 - 주거취약지역 특화사업 추진 및 사각지대 발굴, 사례관리 등
 - 주거복지 관련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과 주거안전 전담 매니저 운영

○ 향후계획

- 주거복지센터 추가적 확대설치와 정화한 홍보로 청년주거복지 환경 조성

② 청년 주거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신규)

○ 추진배경

- 주거정책의 경우 중앙정부의 개별 부처별로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고,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 또한 서로 상이하다는 점에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이 필요.
- 또한 주거정책의 경우 주택의 위치, 입주시기, 입주여건 등이 상이하므로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청년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서울 청년은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을 통해 다양한 주체에 의해서 제공되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자신이 정책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등을 간단한 온라인 설문 플랫폼에서 확인 가능하고, 온라인 상담의 서비스 등도 제공받을 수 있음.

<그림 6-23> 서울 주거포털 홈페이지 화면



*출처: 서울주거포털 <https://housing.seoul.go.kr/>

- 서울 이외에도 경기(경기도주거복지포털 <https://housing.gg.go.kr/>), 광주(광주주거복지포털 <https://xn--v69aylw70b3vla29io83afif.kr/>) 등이 비슷한 형태의 주거정보 통합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음.
- 부산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FGI 결과에 따르면, 청년은 부산의 주거정책 홍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인식이 있었음. 따라서 이에 대응하여 효과적으로 주거정책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통합관리 플랫폼이 필요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년
- 사업규모 : 주거정보 원스톱 플랫폼 구축
- 소요예산 : 500백만원
- 주요내용
 - 청년포털과 달리 주거정보만을 통합적이고 집중도 있게 제공하는 주거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 온라인 주거상담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여 청년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직접적으로 제공하고, 효과적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 청년 자신들이 다양한 주거정책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플랫폼도 구축하여 손쉽게 지원대상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
 - 통합적이고 장기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의 UI 설계 및 기존 청년통합플랫폼인 청년G대와 효과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도 모색.

○ 향후계획

- 24년 중으로 주정보 원스톱 통합 플랫폼 구축 후 시범운영 실시

③ 주거법률 상담센터 구축(신규)

○ 추진배경

- 분산되어 있는 부동산 법률정보 및 피해예방방법, 피해자 구제에 대한 정보 및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여 단일한 창구를 통해 청년에게 전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분기별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2022년 1분기 640건에서 2023년 1분기에는 3,474건으로 지속적이고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이 중에서 70%가 청년이 거주할 가능성이 높은 3억 이하의 주택에서 발생¹⁸⁾.
- 상대적으로 청년이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법률규정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전세사기에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법률정보 및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창구를 구축할 필요
-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전세사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그 피해규모도 증가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예방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구제 노력이 필요.
- 전세사기 피해자 예방 및 구제와 관련한 기능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영중인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 정보 및 보증가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오프라인에서는 전세피해자지원센터를 주요 거점 도시에서 운영.

<그림 6-24>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포털



*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포털 <https://www.khug.or.kr/jeonse/index.jsp>

18) 동아일보. “전세사기 피해 집중 지역, 갭투자도 많아… 서울 강서구-인천 미추홀구 등 빌라 타깃” 2023.04.24.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30424/118970748/1> (최종확인: 2023.08.02.)

○ 추진방향

- 부산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기초적인 법률 상담센터를 구축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중에 하나로 부동산 거래에 관한 법률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창구를 마련.
 - 부산 내에 분산되어 있는 부동산 관련 법률정보 제공서비스 및 상담 서비스를 통합하여 단일 창구를 구축.
 - 부산이 운영 중인 주거복지센터 2개소의 기능을 확대하여 오프라인에서의 법률정보 및 법률서비스를 제공.
- 온라인 서비스는 ‘청년 주거정보 통합 플랫폼’과 통합 구축하여 청년이 단일 창구를 통해 주거와 관련된 정책정보, 부동산정보, 법률정보 및 상담을 논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구축.

□ 기대효과

- 주거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청년이 주거정책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획득할 수 있어 정책소외 문제를 사전에 예방 가능하게 함.
- 시의 입장에서 단일화된 정보제공 플랫폼은 현재 추진 중인 주거분야의 다양한 정책을 대상자들에게 홍보하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홍보 비용 절감을 비롯하여 정책효과성을 높이는데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더불어 다양한 정보 및 서비스를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함으로써 정책 중복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고, 제한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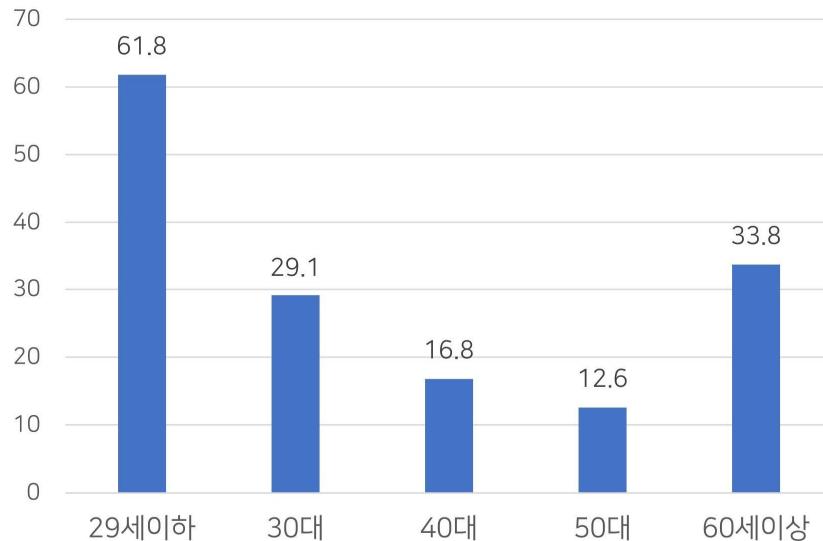
4) 복지 분야

(1) 1기 정책평가

- 1기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시행 이전에 시작된 청년의 부채 문제는 코로나 팬데믹, 저성장, 고금리 등의 영향에 따라 개선되지 않고 있음.
 - 2018년 3월 대비 2022년 6월 가계대출 총액 증가율은 29세 이하 연령층에서 61.8%로 가장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30대 청년에서도 29.1%로 상당히 높았음.
 - 청년들이 대출을 받는 이유는 전세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 생활비 대출 등 다양하게 나타남.
 - 부채증가가 삶의 위기로 이어지는 이유는 청년의 상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임. 상환 능력은 자산과 소득에 비례하는데, 청년은 두 가지 모두 취약한 실정임.
 - 가계부채의 증가는 불안정한 노동시장 상황과 맞물려 결혼, 출산, 경제적 독립 등 청년기에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생애 과업의 연기 또는 포기로 이어짐.

- 청년의 부채 문제는 2022년부터 급격하게 진행된 금리 인상으로 인해 더욱 심각해짐.
- 20·30대 ‘임계수준 초과 차주(채무자)’의 비율은 11%로 전 연령 평균(6.3%)보다 1.8배 이상 높은 상황임. 대출금을 갚기 위해 생계비를 줄여야 하는 20·30대가 많다는 것을 의미함.

<그림 6-25> 연령대별 가계대출 총액 증가율(2018~2022)



* 출처: 이정문, 진선미 의원실(2022.9.13. 한겨레신문 재인용)

-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시행 중인 ‘청년희망날개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 ‘부산청년기쁨두배통장’ 등의 성과를 이어 사업을 확대하되,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조정이 필요함.
 - 2023년 보건복지부 소관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의 예산과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 됨에 따라 부산 청년들도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확대와 함께 ‘청년희망날개통장’ 사업은 기존 가입자 대상으로 3년 만기 적립금 지원을 유지하고, 신규 참여자를 모집하지 않음.
- 현재 부채경감 정책의 경우 사후적 부채경감이나 조정제도가 주를 이루고 있음. 사후적인 정책과 함께 부채 발생 자체를 줄일 수 있는 사전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청년 마음건강지원’은 2021년 시범사업 후 2022년 본격 시행하고 있음. 최근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사업의 성과를 강조하고, 2기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2기 추진전략

▶ 2기 추진전략: 청년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확대

- 취약 청년 대상 자산형성 기회 제공
- 청년 대상 마음건강 지원사업 확대로 사회적 연결 강화

- 부산 청년실태조사와 FGI 분석을 통해 도출된 부산 청년들의 요구를 종합할 때, 2기 사업은 다음의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그림 6-26> 2기 청년정책 기본계획 추진방향: 복지 분야



- 복지 분야의 중점과제는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성공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부채 발생 자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혹은 부채 발생 초기 단계에 청년을 대상으로 금융컨설팅을 포함한 재무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 청년의 가계대출 사유를 분석하여 집단별로 차별화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청년 1인가구 증가, 정부 및 지자체의 청년가구 주거안정지원 정책 확대 등으로 주택매매, 전·월세 대출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 동시에 청년 사이에 주식 투자자금 수요도 증가함. 이에 따라 취약 계층과 비취약 계층을 구분하여 차별화된 리스크 관리 정책이 필요함.
 - 취약계층 청년들에게는 비은행권 신용대출에 대한 별도 교육이 필요하며, 비취약 청년의 경우 투기수요 차단정책과 맥을 같이 하는 금융컨설팅이 필요함.
 - 한편 청년 부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매매, 전·월세 수요와 관련한 부채의

경우는 주거안정 차원에서 접근해야 함.

- 청년들이 중앙정부 및 시에서 시행 중인 자산형성 지원과 부채경감 사업으로부터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접근성을 높여야 함. 부산 청년들이 정보 부족으로 사업 활용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해야 함.
- 청년들에게 중요한 또 하나의 자산은 ‘건강’이라 할 수 있으나, 최근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청년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마음 건강은 뚜렷이 나빠진 것으로 확인됨(질병관리본부, 각 연도 국민건강통계-국민건강영양조사).
- 부산은 생활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사회적 관계 형성 곤란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을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2기 사업에서 확대 시행할 계획임.

□ 사업구조

<그림 6-27> 2기 청년정책 주요 과제 및 사업: 복지 분야



(3) 주요과제 및 세부사업 내용

주요 과제1. 청년 자산형성 지원

□ 배경 및 목적

- 코로나 팬데믹 이후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진출을 돕고, 결혼, 독립, 취·창업 준비 등 생애과업 수행에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지난 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시행기간 동안 청년희망날개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다양한 자산형성 사업이 진행된 바 있어, 청년들에게 사업인지도가 상승하였음.
 - ‘부산청년기쁨두배통장’은 부산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으로 2022년 약 185억의 시비가 투입되어 4,000명의 부산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함.

□ 필요성

- 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최근 사업의 규모와 범위가 확대된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보건복지부 주관 자산형성사업에 부산 청년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홍보가 필요함.
 - 이와 함께 부산 자체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유지함으로써 부산에 거주하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지원함.
 - 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자산지원과 함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세부 사업내용

① 청년 자산형성지원(개선, 확대)

○ 추진배경

-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에게 저축기회 부여 및 자립기반 마련을 통한 미래를 설계하고 더 나아가 내집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촘촘히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년(계속)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부산거주 18~39세 이하 청년 4,000명
- 지원내용 : 청년 저축액 대비 1:1 시비 매칭 지원함과 아울러 청년 금융 역량 강화를 위하여 재무교육, 금융컨설팅을 함께 제공
 - 저축액 10만원, 저축기간 24개월 및 36개월
- 사업비 : 20,500백만원(년)

○ 향후계획

- '24. 1월 : 사업추진계획 수립
- '24. 2~7월 : 참가자 모집·접수
- '24. 10월 ~ : 최종대상자 선정, 통장개설, 참가자 관리, 성과분석 등

<참고> 청년13(일+삶)통장사업(광주)

-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기본조례’에 따라 광주에서 거주하며 일하는 저임금 근로 청년에게 저축지원으로 ‘소액단기 자산형성’, ‘금융역량강화지원’, ‘사후관리지원’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 월 10만원씩 10개월간 저축하면서 금융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에게 광주시가 1:1 매칭금을 추가 지원
- 금융역량 강화를 위해서 금융멘토링 교육,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약 2000명의 청년들이 참여
- 2023년 610명의 청년을 온라인 공모과정을 거쳐 선정



* 출처: (사)광주금융사회복지협회 청년금융복지센터 홈페이지(<https://www.13account.or.kr/center/page/13account>)

② 청년자산관리 사업(신규)

○ 추진배경

- 청년계층의 투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낮은 금융 이해력으로 자산 불평등 심화
- 선제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으로 올바른 투자문화 정착 및 능동적 경제 주체 성장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5년(계속)
- 지원대상 : 소득활동을 하는 부산지역 거주 청년
- 지원내용 : 청년 대상 자산 관련 정책소개 및 컨설팅(희망신용상담센터 연계)
 - 1:1 자산관리 컨설팅, 분야별 교육(저축, 투자, 절세 등)
 - 피드백 서비스 제공(1년간)
- 사업비 : 120백만원(년)

○ 향후계획

- '24. 1~4월 : 관계 기관 협의 및 유사 정책추진 기관 자료 수집
- '24. 5월 : 사업 기본계획 수립
- '24. 12월 : 사업 참가자 모집, 사업홍보, 교육 등
- '25. 1월 ~ : 사업 본격 시행

주요 과제2. 청년 부채경감 및 신용회복지원

□ 배경 및 목적

- 당분간 국내 경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 금리상승 등의 영향으로 부진한 성장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한국은행 2023~2024 경제성장률 전망).
-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이 줄어든 2022년 일시적으로 취업자 수가 대폭 증가하였으나, 2023년부터 다시 증가폭이 줄어들고 있음.
- 학자금 및 신용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게 되고, 사회진출에도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늘어나고 있음.
- 청년들에게 저금리 자금지원을 통한 신용회복과 원활한 사회진입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세부 사업내용

① 청년 신용회복 지원

○ 추진배경

- 최근 청년의 채무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청년들의 채무부담 해소 및 신용·부채상담, 재무상태 진단, 금융교육 등을 통해 청년의 경제적 자립 지원 필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년~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부산 거주 18~39세 이하 청년
- 소요예산 : 400백만원(년)
- 사업내용
 - 부산 청년층이 부채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1:1 전문 재무상담과 비용지원, 맞춤형 교육 등을 제공.
 - 일회성 부채 감면보다 청년에게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자산형성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청년층에게 체계적인 자산형성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재무상담부터 재무조정제도 안내 등 맞춤형 1:1 전문 재무상담 제공.
 - 개인 능력 범위를 초과하는 부채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상환기관 연장, 채무감면 등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부여함.
 - 현재 부산 거주 중이며 소득이 있는 청년 중, 연체 가능성이 있거나 최근 3개월 이내 연체 이력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1회 50만원씩 총 2회 긴급생계비 지원.
 - 금융기초, 신용관리, 진로탐색, 대인관계 관리법 등 청년에게 필요한 재무관련 교육을

맞춤형으로 제공.

○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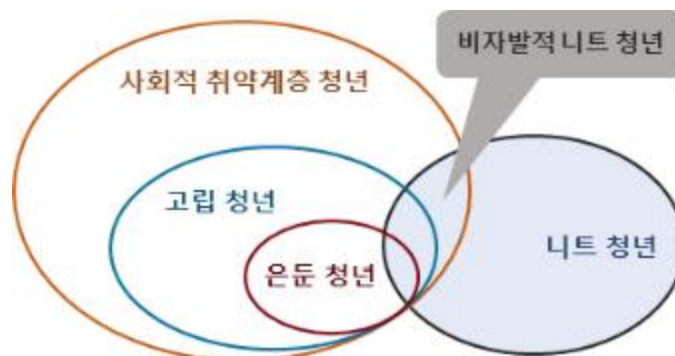
- '24. 1월~ : 대상자 모집, 사업추진, 성과관리 등

주요 과제3. 청년 마음건강 관리 지원

□ 배경 및 목적

- 고립 은둔형 청년은 물리적·정서적으로 타인과의 관계망이 단절됐거나 외로움이나 우울감, 무력감 등의 이유로 최소 6개월 이상 사회적 접촉 없이 고립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청년을 뜻함.
- 구직단념청년(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은 교육이나 경제활동, 직업훈련 등을 받고 있지 않은 상태의 청년을 말함. 이들은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거나 제한된 공간에서만 생활하는 상황 등의 고립 형태의 지표가 고려되지 않는다는 특성으로 인해 취약계층에서 제외되거나 지원 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음.
-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활동을 원하고 구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원치 않은 NEET, 즉 '비자발적 NEET청년'이 출현하고 있음. 이들 또한 고립 은둔형 청년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포함되어야 함.
- 고립 은둔형 청년 및 비자발적 NEET청년은 사회적 관계 자본이 부족하거나 결핍된 계층으로, 불안정한 노동시장과 악화되는 자립기반 등의 환경 구조 내에서 사회적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파악됨.

<그림 6-28>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취약계층 청년



□ 필요성

-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통해 구직 의욕이 저하된 구직단념청년과

자립준비청년 등을 대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고립 정도가 심한, 특히 은둔 상태가 장기간 지속된 청년들의 경우에는 지원받지 못하거나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발견되기도 함(유민상, 신동훈 2022).

- 부산 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대에 은둔을 처음 생각하게 되었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실제로 은둔을 시작한 시기의 나이 역시 20대인 것으로 나타났음(박주홍, 손지현, 서두산 2022).
- 청년은 교육을 이수하고 경제활동을 시작하며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여 사회적 독립에 이르는 시기임. 그러나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우 학업을 중단하거나 취업이 어렵고 인간관계가 쉽지 않아 발달과업을 완수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음.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시기가 지속되면 외로움으로 인한 고통, 사회 부적응, 자살, 고독사와 같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한 개인의 전 생애에서 중장기적으로 고립이 심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년기에 선제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부산에서는 사회적 취약계층 청년의 마음건강을 위한 지원과 사회적응 및 통합을 돕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 건강한 일상을 되찾기 위한 우울 및 불안 심리치료, 자기이해 능력 향상, 회복탄력성 강화 등의 마음건강 관련 교육은 물론 사회진출을 위한 힘을 키울 수 있는 대인관계 기술, 사회복귀 훈련, 취업역량 교육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함.

□ 세부 사업내용

① 청년 마음이음 사업(계속, 확대)

○ 추진배경

- 세상과 접촉을 시도하고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하기에 앞서 심리적 안정 및 정서적 건강이 필요한 청년들의 마음진단과 상담 필요.
-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일대일 전문상담과 마음 치유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년들의 사회진입을 촉진하여 사회·경제적 활력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 지원대상 : 부산시 거주 18~34세 심리상담이 필요한 청년 500여명
- 소요예산 : 300백만원(년)
- 사업내용
 - 대인관계, 사회적 관계형성, 진로문제, 가족관계 등의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제공.
 - 사전심리검사를 통해 청년들의 심리상태를 파악하여 맞춤형 심리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

- 우울, 불안, 외로움, 무기력, 스트레스 등의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여 자기 자신과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도움.

○ 추진계획

- '24. 1월~ : 사업추진 계획 수립
- '24. 2월~ : 1:1 심리상담 지원과 집단 심리프로그램 운영, 성과관리 등

② 청년 도전 지원사업(계속)

○ 추진배경

- 구직단념 청년을 발굴하고 심리회복 및 자신감 강화와 구직의욕 고취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으로 사회 재진입 유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 지원대상 : 구직단념청년 등
- 소요예산 : 1,372백만원(년)
- 사업내용
 - 구직단념청년 발굴 : 대상별 상시 소통창구 구성·운영
 - 사회참여 의욕고취 및 취업역량 강화 : '위넛(We Knit) 캠퍼스' 운영
 - 참여자 소통의 장 운영 : OT, 수료 기념식 및 사업성과 발표행사
 - 취·창업지원사업 연계 사후관리 : 위크넷 구직등록 등 취업 지원.

○ 추진계획

- '24. 1월~ : 사업추진 계획 수립
- '24. 2월~ : 참여청년 모집 및 프로그램 운영, 성과관리 등

③ 청년 일상회복 지원사업(신규)

○ 추진배경

- 사회 내 경쟁의 심화 등으로 청년의 심각한 사회적 불안 완화를 위해 사회적 연결망 형성하고 지역사회 참여와 소통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활동 필요
- 청년 전 주기동안 기존 청년 활동 지원 사업 간의 연계로 청년의 마음, 취업, 일상 활동 지원 등을 연결하여 지속적인 사회 참여 기반 마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년~
- 지원대상 : 18~39세 청년
- 소요예산 : 500백만원(년)
- 사업내용
 - 신체활동 중심의 다양한 집단활동 체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 집단활동 체험 : 부산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신체 프로그램(갈매길 투어, 서핑, 트래킹 등)
- 관계망 형성 지원 : 팀 활동 중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소셜다이닝, 음악, 그림 등)

○ 추진계획

- '24. 1~12월 : 기존 청년활동 지원사업 간 연계 운영방안 논의 및 시스템 구축
- '25. 1월~ : 세부 추진계획 수립, 사업 시행

④ 마음건강과 사회적응력 향상지원 사업(신규)

○ 사회진출을 도우는 재진입 지원 프로그램

- 사회적 불안 심화와 인간관계의 단절 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비용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의 바우처를 마련.
- 일자리와 생활안정 정책의 지원조건으로 청년 지원을 확대 제공함. 디딤돌카드 및 일하는 기쁨카드 정책과 같은 취약계층 청년의 구직활동에 드는 경제적 비용을 지원해줄 수 있는 세부 정책을 마련.
- 취업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불연속적이지 않은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지지와 응원의 개념을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

○ 온전한 사회통합의 선순환 프로그램 추진

- 사회적 불안을 완화하고 사회통합을 이룬 청년들이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의 조력자가 되어주는 선순환 시스템을 조성.
-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과 대인관계 기술을 익힐 수 있는 네트워킹을 제공.
- 청년의 성공사례가 청년의 사회진출 유인책으로 작용할 수 있는 청년 친화적 전달체계를 구축.
- '열고 잇기'의 접근 지원 방법과 홍보 역할 또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하나의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혜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

□ 기대효과

- 독립된 성인으로서의 삶을 준비하기에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선순환 프로그램을 통한 사후관리로 지역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함.
- 청년세대의 마음건강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고 청년층이 건강한 심리상태를 회복하여 장기적으로는 사회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함.

5) 문화 분야

(1) 1기 정책평가

- 1기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중앙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청년정책이 도입됨에 따라 문화 분야에서도 다양한 사업이 시행됨.
- ‘청년작당소’, ‘청년마을놀이터’, ‘사상인디스테이션’, ‘민락인디트레이닝센터’ 등 청년문화공간을 조성 및 운영하여 청년문화가 싹트고, 청년들이 교류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청년작당소’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는 청년문화 공간으로 전시행사, 소모임, 스터디 등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됨. <2022 부산청년패널조사>에 따르면, 청년정책 중 청년작당소 운영은 청년들의 이용도와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2022년 한 해 동안 15,000명 이상의 청년들이 방문 및 이용하여 애초 목표를 초과 달성함.
- 청년예술가 지원사업은 2020년 ‘청년연출가 작품제작 지원’, ‘청년예술가 창작활동 지원’, ‘생애 첫창작 활동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그 대상과 규모가 확대됨.
 - ‘청년연출가 작품제작 지원’은 부산거주 또는 부산에서 활동한 이력을 가진 청년을 대상으로 쇼케이스 및 공연작품 제작을 지원함. 2022년 5명의 연출가를 지원하여 성과목표를 달성함.
 - ‘청년예술가 창작활동지원’은 연출가 지원과 비슷한 맥락에서 부산거주 또는 활동이력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창작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022년 36개 팀이 지원하여 성과목표를 달성함.
 - 그 밖에 청년예술가를 상대로 전시공간을 무상임대하는 프로그램으로써 ‘기업협력형 창작지원 활동’이 있음. 2021년부터 매년 청년예술가 3인을 선발하여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음.
- 문화콘텐츠 제공 및 문화향유 기회확대와 관련해서도 사업내용이 다양화되고 규모가 커지기는 했으나, 부산을 대표할 만한 브랜드화된 대표 콘텐츠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음.
 - ‘청년문화축제’, ‘청년거리예술 활성화’, ‘찾아가는 청년콘서트’ 등의 성과를 이어가고,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청년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청년예술가들에 대한 간접지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다양한 청년문화행사를 기획하되, 부산의 대표적인 청년문화행사로서 브랜드화된 통합적인 문화축제를 기획할 필요가 있음.
 - FGI를 통해 문화 인프라에 대한 높은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음. 예컨대 문화시설의

질적 향상이 있다면, 굳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있을 정도로 문화시설 및 콘텐츠의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20대 후반 FGI).

- 30대 후반 청년이 참여한 FGI에서도 문화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확인됨. 특히 자녀교육을 위하여 수준 높은 문화콘텐츠 이용을 원하는 수요가 존재함.
- <2022 부산청년패널조사>에 따르면, 문화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다양한 문화콘텐츠 향유와 관련해서는 미흡한 점이 나타남.
- 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 영화의 전당, 시립미술관 등을 이용해 본 경험이 없는 청년이 80%를 차지함.
- FGI 조사에서도 문화콘텐츠 향유가 영화관람, 스포츠 관람 등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 한편 <2022 부산청년패널조사>에 따르면, 문화시설 이용과 관련한 지출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항목에 비하여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문화시설 이용에 따른 지출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2) 2기 추진전략

▶ 2기 추진전략: 문화인프라와 프로그램 확충으로 문화향유 기회확대

- 수준 높은 문화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와 장 제고
- 청년문화공간 조성을 통한 사회적 연결 강화

- 부산 청년실태조사와 FGI 분석을 통해 도출된 부산 청년들의 요구를 종합할 때, 2기 사업은 다음의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그림 6-29> 2기 청년정책 기본계획 추진방향: 문화 분야



- 문화분야에서는 부산 청년들이 수준 높은 문화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회와 장을 제공하는 것을 중점과제로 설정함. 특히 부산 청년 예술가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함.
- 청년문화공간조성 사업으로는 ‘청년작당소’ 운영, 원도심 빈집을 활용한 ‘청년마을 놀이터’ 조성 사업 등의 성과를 이어나갈 필요 있음. 청년문화공간 조성을 통해 부산 청년들에게는 다양한 문화활동의 공간적 기반을 제공하고, 특히 청년 예술가들에게는 창조활동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문화향유 기회의 확대를 통해 부산 거주 청년들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층 청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함.
- 2기 청년정책 기본계획 시행기간(2024~2028년) 동안 부산국제아트센터(2025년), 부산오페라하우스(2026년) 개관이 예정되어 있으며, 시장 공약사항으로 세계적 수준의 미술관 유치에 포함되어 있음. 이에 따라 부산의 문화 인프라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부산 청년들이 새롭게 형성될 문화 인프라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신진 예술가들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통하여 부산 거주 청년 예술가들이 지역에 정착하여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전국의 청년 예술가들이 모여드는 부산이 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함.
- 사업구조

<그림 6-30> 2기 청년정책 주요 과제 및 사업: 문화 분야



(3) 주요과제 및 세부사업 내용

주요 과제1. 청년 예술가 지원

□ 배경 및 목적

- 청년 예술가들이 부산 예술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경력개발을 지원하고, 창작활동의 기회를 제공함.
 - 청년 예술가의 경우 활동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자산이 부족하여 적극적으로 창작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음.
 - 부산을 중심으로 유망한 청년 예술가들을 발굴하고, 이들이 문화예술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이를 통해 수준 높은 문화 콘텐츠 향유를 기대하는 부산 청년들의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음.
- 공연예술, 시각예술, 문학 등 문화예술의 전 분야에 걸쳐서 청년예술가를 발굴하고, 이들이 전문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공연예술 분야에 집중된 '신진 청년예술인 인큐베이팅 및 경력개발 지원' 사업의 대상을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청년예술가를 지원함.
 -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예술가들과 신진 청년예술가들과의 교류기회를 확대하여 세대 간 문화전수와 청년예술가 지원을 동시에 꾀할 수 있음.

□ 필요성

- 청년 예술가들의 교류와 협력의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 예술가 스스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청년문화공간 조성, 청년문화향유 기회 확대 등 문화 분야의 청년 프로그램 운영이 부산 청년예술가의 창작기회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기획할 필요가 있음.
- 「청년예술가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청년문화예술가 육성 및 지원을 관리하는 체계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세부 사업내용

① 신진예술인 인큐베이팅 경력개발 지원(계속, 개선)

- 추진배경
 - 청년예술인 창작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수 아티스트를 발굴하여 제작 공연 지원
 - 단순한 경제적 지원보다는 전문 예술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활동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년~
- 지원대상 : 부산에 활동 중인 신진예술인(대학생, 직장인, 신규예술분야 창업자 등)
- 소요예산 : 200백만원(년)

○ 사업내용

- 신진예술가에서 전문예술가로 성장하기까지 단계별로 창작활동을 통합적으로 지원
- 청년 예술가의 첫 창작 활동을 지원하여 경력개발을 돕고, 전문 예술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
- 분야별(공연예술, 시각예술, 문학) 선발을 통해 다양한 예술문화 분야를 포괄할 수 있도록 기획함.
- 청년 예술청년예술가들이 지속적으로 예술활동을 통해 성장 및 발전할 수 있도록 대내외적으로 홍보 지원이 필요함.
- 공연예술분야(국악, 뮤지컬, K-pop, 무용 등) 청년 예술가를 대상으로 공모 과정을 통해 대상자를 선발하여 우수 제작진 및 중견 예술가의 멘토링 및 1:1 코칭을 제공.
- 참여한 청년 예술가를 대상으로 2차 선발을 진행하고, 선정된 청년예술가에게 쇼케이스 제작비를 지원.
- 우수 제작진과의 협업 및 대규모 공연 참여기회를 제공.

○ 추진계획

- '24. 1월~3월 : 사업 추진계획 수립
- '24. 4월~ : 참여 신진예술인 선정, 사업추진 및 성과분석 등

<참고1> 제주문화예술재단 '아트노크'

- 제주 청년예술가들의 포트폴리오 및 콘텐츠를 게시하고, 개인화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여 홍보, 마케팅, 파트너 협력 및 매개를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
- Art(예술)와 Knock(두드리다)의 합성어로 청년예술가들이 예술을 통해 세상을 두드릴 수 있는 문이 되기를 바란다는 의미

<참고2> 경기예술인지원센터 '경기예술인 이어달리기'

- 경기 예술가들이 본인을 나타내는 키워드와 대표작품 등을 소개하고, 다른 예술가들에게 자유로운 질문을 던지면서 '레이스'를 이어가는 온라인 릴레이 홍보 프로젝트
- 인스타그램을 활용하여 경기 예술가 전수조사에 참여한 예술인과 단체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2021년 예술가 활동홍보와 지역예술가들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기획



* 출처: 제주문화재단 아트노크 홈페이지(<https://artknock.kr/introduce.html>),
경기예술인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youth.seoul.go.kr/site/main/content/cp_intro)

② 청년 그래피티 비엔날레(신규)

○ 추진배경

- 청년 인디 대표 콘텐츠인 그래피티의 축제화로 청년인디문화 대중성 확보
- 전세계 최초 그래피티 비엔날레 개최로 부산을 청년서브컬처 중심으로 도약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년~
- 지원대상 : 부산에 활동 중인 신진예술인(대학생, 직장인, 신규예술분야 창업자 등)
- 소요예산 : 200백만원(년)

○ 사업내용

- 그래피티를 중심으로 인디문화(음악, 공연) 복합 전시 페스티벌 개최
- 그래피티 존 선정 : 라이브 페인팅 및 그래피티 전시
- 부대프로그램 구성 : 인디예술인 글로벌 워크숍, 네트워킹 파티 등
※ 행사 장소는 구군 협의를 통해 선정.

○ 추진계획

- '24. 1~2월 : 국내외 그래피티 프로젝트 및 작가 리서치
- '24. 3~8월 : 관계자 네트워크 구성, 국비 공모 추진
- '25. 1월 :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주요 과제2. 문화 향유 기회 확대

□ 배경 및 목적

- 2022 부산청년패널조사에 따르면, 영화관람을 제외할 경우 청년들의 문화생활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부산문화회관, 시립미술관 부산에서 운영하는 공연 및 관람시설을 이용해 본 경험이 없는 청년이 80%에 달함.
- 한편 같은 조사에서, 청년들이 예술문화 관람과 관련한 지출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저소득층의 경우 문화예술 관람활동이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함.
- 부산의 청년들이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편으로 지역 청년 예술가의 창작활동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

□ 필요성

- 부산의 모든 청년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 접근기회를 보장함. 특히

저소득층 청년들의 문화관람에 따른 지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함.

○ 부산 청년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기획할 필요가 있음.

□ 세부 사업내용

① 청년만원문화패스 사업(신규)

○ 추진배경

- 청년이 원하는 양질의 공연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함으로써 지역 청년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청년문화 축제의 달”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년~
- 지원대상 : 부산거주 청년(18~39세) 청년 5,000명
- 소요예산 : 700백만원(년)

○ 사업내용

- 지역내 양질의 문화 공연을 1만원에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

○ 추진계획

- '24. 1월 : 사업설명회 개최, 사업추진계획 수립
- '24. 2월~ : 공연장 등 모집 개시, 사업본격 추진

<참고> 서울 ‘청년문화패스’



- 서울 거주 19~22세 청년에게 연극, 뮤지컬, 클래식, 무용, 국악 등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이용권을 제공하는 사업
- 소득요건: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접수, 카드발급 즉시 포인트로 20만 포인트(20만원에 해당)가 충전
- 사용방법: 서울청년문화패스 홈페이지를 통해 추천된 공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예매 건당 최대 7만원까지 사용 가능

* 출처: 서울특별시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https://youth.seoul.go.kr/site/main/content/cp_intro)

② 청년문화축제 개최 사업(계속)

○ 추진배경

- 청년이 문화·예술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활동기회를 마련하여 청년 예술가들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과 시민들에게는 즐길거리 제공을 통하여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청년문화 육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년~
- 소요예산 : 400백만원(년)

○ 사업내용

- 부산의 청년 예술가들에게는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과 시민들에게는 즐길 거리를 제공
 - 청년문화 킬러 콘텐츠 마련 및 청년문화 거리 활성화
 - 공개 댄스 오디션 개최, 상시 댄스배틀 공연 및 부대 행사 개최.
-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는 청년콘서트 개최
 - 청년문화 예술 단체가 사회복지 시설 등을 방문하여 콘서트(음악, 무용, 연극, 마술)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
 -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한편 청년 문화 예술 단체의 활동 영역을 확장

○ 추진계획

- '24. 1월 : 사업추진계획 수립
- '24. 2월~ : 사업자 선정 및 본격적인 사업추진, 성과분석 등

③ 부산문화회관 청년회원제 시행 (신규)

○ 추진배경

- 2022 부산청년패널조사에 따르면, 청년 80%가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시립미술관 등 공공 문화시설 이용 경험이 없는 것으로 파악.
- 이러한 낮은 이용률에도 불구하고, 청년 FGI에서는 20대 초반부터 30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대의 청년들이 수준 높은 문화콘텐츠에 대한 수요를 나타냄.
- 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향유의 기회와 접근성이 보장된다면, 청년이 적극적인 문화 수요층으로 흡수시킬수 있는 정책 필요.
- 세계적 수준의 교향악단들은 대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회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추진방법

- 부산의 청년들이 다양한 지출에 대한 큰 부담 없이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
- 세계적인 수준의 예술단의 경우 대체로 학생 정기회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학 비진학 청년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학생 회원보다는 청년 회원제도로 운영
- 대학생 나이에 해당하는 19~24세 청년에게 부산이 운영하는 공공 문화시설 (부산문화회

관, 시민회관, 시립미술관, 현대미술관)을 파격적인 비용에 이용할 수 있는 정기회원 제도 시행 추진

- 향후 개관을 앞두고 있는 부산오페라하우스, 부산국제아트센터에도 청년정기회원 제도를 확대 시행
- 청년정기회원 중 문화공연 기획에 높은 관심과 전문성을 지닌 청년을 앰버서더(young ambassador)로 선발하여 국제교류 기회 등을 부여

<참고> 미국 Cleveland Orchestra “Student frequent fan card”

- 미국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는 세계적 수준의 관현악단 중 하나로 평가됨.
- 높은 수준의 연주와 그에 따른 인기에도 불구하고 클래식 공연 관람객이 고령화되고 있으며, 청년의 관심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됨.
- 청년의 관심이 낮은 이유 중에는 높은 관람료가 포함됨.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학생들을 위한 정기회원 제도를 운영함.
- 연회비 \$50(약6만원)를 내고 정기 학생회원이 되면, 클리블랜드 정기공연 관람권을 \$15(약 18천원)이하에 구입할 수 있음.
- 청년 정기회원 제도를 통해 청년의 클래식 공연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장기적으로는 클래식 공연에 대한 수요층을 확대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출처: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홈페이지(<https://www.clevelandorchestra.com>)

□ 기대효과

- 부산 거주 청년들에게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여 청년들의 생활만족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내 문화정책 수요계층을 확대할 수 있음.
- 문화예술 관람을 촉진시켜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효과를 가짐.
- 저소득층 청년도 비용지출에 대한 부담 없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다양한 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함.

주요 과제3. 청년문화공간 조성 통한 사회연결망 구축

□ 배경 및 목적

- 청년들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청년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청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청년 문화 허브 공간이 필요함.
- 문화 허브 공간을 기반으로 다양한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부산지역 청년들 사이에 사회연결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함.

- 독립적인 문화단체 등 청년들로 구성된 단체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창의적인 문화공간으로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함.
- 부산 청년문화공간으로서 ‘청년작당소’는 지역 청년들이 다양한 문화체험을 경험한 활발한 교류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음.

□ 필요성

- 청년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유도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사회연결망 구축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청년실태조사에 따르면 다양한 청년사업 중 청년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사업 중의 하나로 평가됨.

□ 세부 사업내용

① 청년작당소 운영(계속)

- 추진배경
 - 청년들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문화·예술체험 및 커뮤니티 활성화 공간 운영
 - 청년예술인(단체) 네트워킹 형성 및 정보 교류 공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년~
 - 소요예산 : 220백만원(년)
- 사업내용
 - 다양한 문화, 예술 체험프로그램을 청년주도로 발굴하고 기획 후 볼거리 제공
 - 청년문화체험 프로그램, 전시, 홍보, 시설 대관
- 추진계획
 - '24. 1월 : 사업추진계획 수립
 - '24. 2월~ : 예술 청년과의 소통 워크숍, 모니터링, 성과분석 등

② 사상인디스테이션 운영(계속)

- 추진배경
 - 청년문화 네트워크 및 지역 인디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한 청년문화 허브 공간의 역할과 기능 강화
 - 특히 청년 인디문화 콘텐츠 거점 공간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 청년예술가들이 주도하여 문화예술을 통해 교류할 수 있도록 공연사업, 공간활성화 사업, 청년브랜딩 사업 등에 필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 소요예산 : 300백만원(년)

○ 사업내용

- 청년 예술인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공 등
- 청년문화체험 프로그램, 전시, 홍보, 시설 대관

○ 추진계획

- '24. 1월 : 사업추진계획 수립
- '24. 2월~ : 청년예술인과의 교류사업 추진, 성과분석 등

□ 기대효과

- 청년을 위한 공간을 기반으로 활발한 교류를 독려하고 청년들의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음.
- 청년공간을 통해 문화콘텐츠 기획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청년예술가들에게 다양한 창작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있음.

6) 참여·권리 분야

(1) 1기 정책 평가

□ 정량평가 실적은 높으나 청년 당사자의 인지도 및 수요는 타 정책에 비해 매우 낮음.

- 부산은 타 광역지자체에 비해 청년당사자의 정책참여비율(예,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이 높음.

□ 그러나 부산 청년은 사회관계 및 참여에 대한 정책수요 우선순위가 3번째로 확인됨.

- 사회관계와 참여에 대한 수요는 <2022 부산청년패널조사>에서 수집된 ‘여가, 문화시설로서 청년공간 제공’, ‘또래 모임 지원’, ‘참여 보장 및 권리 강화’ 등 3가지 정책에 대한 수요를 합하여 측정하였음. 3008명의 참여자는 14가지 정책 카테고리 중 최대 3가지의 정책에 대해 수요를 표시할 수 있었고, 이 중 700명이 위의 관계 및 참여 분야에 해당하는 정책에 대한 수요를 나타냄.

- 측정결과에 따르면, 남성보다 여성이, 월수입이 없는 사람보다 80~209만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생활수준 만족도가 높을수록, 미래안정성 만족도가 낮을수록 관계·참여

정책에 대한 수요를 나타내고 있음.

- 수요를 나타낸 청년을 감안하면, 참여·권리 분야의 청년 정책은 여성, 평균 이하의 월소득, 생활수준 만족도가 높거나, 미래안정성 만족도가 낮은 청년의 니즈를 충족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정량적 실적이 높았던 결과와 비교하면, 1기 참여·권리 정책의 과정에 일반적인 청년대중의 참여가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기존의 제도권 내 또는 이미 제도화된 청년 조직 중심의 점진적 저변 확대 특성을 보임. 정책 결과물의 대중성 확장이 더욱 요구됨.
- 신규 사업을 추가하기보다 다른 분야의 정책과 연계하여 청년 당사자의 인지도 제고와 참여경험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1기에 추진된 청년축제 주간 등, 만족도가 높고,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사례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홍보 전략 다변화와 그 성과 비교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형식적 청년 쿼터제를 넘어 실질적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 의미 있는 참여에 대한 의미 있는 보상을 통해 참여의 질을 향상시켜야 함.

<표 6-4> 2기 참여·권리정책 환경에 대한 SWOT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es)
MZ 세대, 역대 가장 높은 교육수준과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 중앙정부 청년정책 추진 1기 참여·권리정책에 대한 만족도 (부산청년주간, 청년행복박스, 등)	수도권 집중과 사회경제적 지역 격차 수도권 대학 진학으로 인한 청소년기 인재 유출 대기업 등 좋은 일자리 편중과 상대적 박탈감
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s)
인근 지역 자치단체 협력 증가 (동남권, 남해안, 부울경, 등) 2030 월드엑스포 유치시, 신성장동력 확보 (청년유입 증가세 유지 가능)	초고령화, 출산율 하락 추세 지속 청년세대 부담 증가로 세대 간 갈등 가능성 경기 침체 등 환경요인 개인의 탈사회, 파편화 경향 35~39세 청년, 세대 내 갈등 가능성

(2) 2기 추진전략

- ▶ 2기 추진전략: 다양한 계층 참여확대와 참여청년에 대한 보상과 피드백
- 다양한 계층의 청년참여 유도
 - 다른 분야의 청년정책 연계를 통한 참여의 질 제고

- 참여(Inclusion)는 배제된 청년 없이 다양한 계층의 청년참여 유도를 의미함.
- 보상(Reward)은 좋은 아이디어나 참여활동을 한 경우 더 나은 참여기회 보장을 의미함.
○ 예를 들어, 참여보상제, 참여활동 포인트에 대한 지역화폐 등의 보상책 마련 등
- 참여는 자치와 민주주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조건이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참여의 양적 확대를 이루고, 차후 참여의 질적 제고를 도모함.
- 사회·정치적 참여가 교육경험을 비롯한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실업과 경기(景氣) 등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환경적 요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정치참여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볼 때, 참여·권리분야 정책은 다른 분야의 청년정책과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함.
- 부산 청년실태분석과 FGI 분석을 통해 도출된 부산 청년들의 요구를 종합할 때 2기 사업은 다음의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그림 6-31> 2기 청년정책 기본계획 추진방향: 참여·권리 분야



□ 사업구조

<그림 6-32> 2기 청년정책 주요 과제 및 사업: 참여·관리 분야



(3) 주요 과제 및 세부 사업내용

주요 과제1. 청년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청년 거버넌스 확충

□ 추진 배경

- 1기 정책 결과의 비판적 연계를 통한 청년 거버넌스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며,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의 청년 정책 흐름에 호응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에 의해 중앙정부의 청년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광역자치단체 중 선도적 위치를 점하고, 청년친화도시 유치를 위해 실질적인 수준의 청년 참여를 보장·제공할 필요가 있음.
- 청년 정책에 있어, ‘동·서 격차’ 등 지역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고, 시와 구·군, 구·군 간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1기에 추진된 정책 중, 참여자 만족도 등 평가가 높았던 과제는 대상과 범위 등 정책의 확대가 필요함.

□ 세부 사업내용

① 부산광역시 각종 위원회 위촉직에 청년위원 참여 확대(개선)

○ 추진배경

- 시정 전반에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 청년참여 확대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년~
- 참여대상 :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청년위원 발굴
- 소요예산 : 비예산

○ 사업내용

- 시청내 부서별 위원회 구성시 청년위원의 위촉비율 확대
 - 개별 사건을 다루거나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된 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위원회에
 - 청년 위촉 비율 10%이상
 - 특히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30% 이상 청년위원 위촉
 - 부산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수 조정을 통한 청년위촉 위원 10명 확대(20명→30명)

○ 추진계획

- '24. 1월 : 시 위원회 청년위촉 확대방안 마련
- '24. 2월~ : 위원회 청년위원 위촉비율 확대 시행

② 부산청년 패널 조사(계속)

○ 추진배경

- 부산 청년들의 삶의 현황 및 변화양상을 장기간('22.~'26.) 추적·반복 조사하여 청년정책 수립의 기초마련으로 정책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26년(5년)
- 사업비 : 400백만원(년)
- 패널구성 : 지역 청년 3,000명

○ 주요내용

- 부산 청년패널 3,000명 구축, 청년의 삶 전반조사 및 결과분석
 - (청년패널 구축) 2023년 기준 19~39세 청년패널 약 3,000명
 - (패널조사 실시) 청년패널 대상 청년의 삶 전반 조사 실시
 - (조사결과 분석) 청년의 삶 실태 및 변화양상 분석, 정책시사점 도출

○ 추진계획

- '24. 1월 : 세부계획 수립 위촉 확대방안 마련
- '24. 2월~ : 사업운영 및 문제점 분석, 향후 개선방안 도출 등

③ 구·군 청년책임관제 운영(신규)

○ 추진배경

- 중앙정부(국무조정실), 부산시(청년희망정책과), 구·군 간 청년정책 연결·공유·확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년~
- 사업비: 9백만원(년)

○ 주요내용

- 시의 정책 홍보 및 구·군 레벨의 정책 수요 발굴.
- 시의 정책 - 구·군의 정책, 구·군 간 통일성 및 연계성 확보.
 - 광주의 ‘시 및 구·군 청년센터 연석회의 + 행정협의회 + 지역기관 협력 기구 등’의 협력 체계 구축 사례가 있음.
- 부산시(청년산학국장)와 구군(청년업무담당과장)으로 구성된 청년책임관 구성
 - (청년정책 책임관 운영) 정례 및 수시회의 개최
 - * 정례협의회 개최 : 2회(상·하반기) ▶ 기관별 안건 소개·설명
 - * 수시협의회 개최 : 필요시 ▶ 워크숍, 성과발표회 등
 - (우수기관 인센티브 제공) 청년정책 발전에 기여한 기관 및 직원 포상

○ 추진계획

- ‘23. 하반기 : 청년책임관 구성 및 1차회의 개최
- ‘24. 1월~ :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청년친화도시 지정 적극대응 등

□ 기대 효과

- 참여·권리 분야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에 해당하는 ‘청년 자치’를 달성하기 위한 토대로써, 정책 당사자인 청년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책 수요를 구현하는 정책제안의 통로가 확장됨.
- 구·군 간 지역협력 및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고, 지역 내 동일한 수준의 청년정책 거버넌스를 보장하게 하여 청년정책 활성화와 청년친화도시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음.

주요 과제2. 청년센터 중심의 정책지원체계 구축

□ 추진 배경

- 2021년 개소 이래 2년 간의 성과를 볼 때, 부산청년센터의 기초는 다져졌다고 판단됨.
- 청년정책 2기에는 명실상부한 청년정책의 지원 기구, 광역 청년센터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음.
- 기존 청년센터에서 진행된 여러 사업 및 과제의 성과 분석 및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라 2기 청년정책의 수요 발굴과 정책 제안 창구, 집행 및 환류, 정보 전달과 홍보 등 종합적인 청년정책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재구성해야 함.

- 제안된 정책 대안의 처리 및 진행과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제공(follow-up)할 필요가 있음.
- 1기 정책 결과에 대한 여러 만족도 조사와 평가에서 드러난 정책 수요 중, 청년의 정보 부족과 정보 소외를 해소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소통형 정보 전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청년플랫폼의 재구성이 필요함.

□ 세부 사업내용

① 부산청년 센터 운영(계속, 개선)

○ 추진배경

- 청년센터는 청년정책 수행의 중추 기관으로서, 센터 운영, 정책 개발(부산청정넷), 정보 전달(청년G대), 홍보, 상담, 구군 협력, 청년공간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
- 청년주도의 청년정책 추진과 청년의 다양한 창의적 활동을 위한 소통·교류 공간 운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 사업비: 700백만원(년)
- 주요역할 : 청년정책 수행의 중추기관으로서 센터운영, 정책개발(부산청정넷), 정보 전달(청년G대), 홍보, 상담, 구군 협력, 청년공간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

○ 주요내용

- 청년정책 홍보 서포터즈 운영, 부산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청년 공간 매니저 역량강화 교육
- 부산청년멘토단 운영, 자원봉사 연계 등 청년활동 참여 마일리지 운영 등

○ 개선방안

- 정책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규직 인력 비율 확대
- 광역 청년센터 기능 수행을 위한 구군 담당자, 청년공간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직능연수 및 구군 청년공간 연계·협력 프로그램 확대
- 청년 공간 및 시설 이용 평가, 공간 활용방안에 대한 공모 추진
- 청년 생활권역 청년공간 확보 및 확장 추진

○ 추진계획

- '24. 1월 : 정규직 인력 비율 확대, 출연금 사업으로 전환 등 안정성 제고
- '24. 2월~ : 광역 청년센터로서의 기능강화 등 세부사업 추진

② 부산청년정책 네트워크 운영(계속, 개선)

○ 추진배경

- 정책 발굴·제안 등 청년의 시정 참여 확대 및 청년이 주체가 되는 자율적 운영으로 행정과의 유기적 협업 추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년~
- 사업비: 60백만원(년)

○ 주요내용

- 정책발굴·제안 및 설문조사, 캠페인, 공론장 등 프로젝트 활동

○ 개선방안

- 청년 참여기구로 설치와 권한 및 기능을 조례에 명시해 법적 기구화
- 청년의 정책 수요 발굴과 제안된 관심과 수요, 제안된 대안의 검토와 심의를 통한 숙의를 담당하는 기능과 숙의 결과와 입안 및 처리(수정·보완 등을 포함)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follow-up)하는 모니터링 기능으로 구분·조정.
- 부산청년센터의 제기능 중, 정책의 제안 및 기획의 기능을 수행하며, 그 설치와 권한 및 기능을 조례에 명시해 법적 기구화.
- 청정넷 이외의 현장 제안, 모바일 제안 등 여러 통로를 통해 제안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통합적인 관리를 통해 동일한 관리와 처리과정 공개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
- 온라인(모바일) 상시 제안 창구 마련 및 온라인(모바일) 청년총회를 통해 청년의회의로의 발전에 대비.
- 인천광역시시의 경우, 네트워크 참여 인원을 대폭 늘리고 있으며, 2024년까지 1,000명을 목표로 하는 계획을 추진 중

○ 추진계획

- '24. 1월 : 연간 운영계획 수립
- '24. 2~3월 : 청년네트워크 참여자 모집 및 구성
- '24. 4~12월 : 정책제안회 개최, 프로젝트 활동추진, 성과공유회 개최 등

③ 부산청년플랫폼 고도화(계속, 개선)

○ 추진배경

- 청년이 필요한 정책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청년정책 홍보강화 및 청년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정보제공으로 청년층의 이용율 및 체감도 제고
 - 청년플랫폼 운영 활성화를 통한 청년정책 체감도 제고 및 청년층 이용 활성화 유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년~
- 사업비: 100백만원(년)

○ 사업내용(고도화 방안)

- 다양한 청년 정보 생산 주체와 관리 주체에 파편화되어 있는 정보의 통합적 관리.
- 청년들의 정보 접근성 제고.
- 청년 정보 허브로서, 부산청년플랫폼 ‘청년G대’ 누리집 정보 리뉴얼.
- 청년의 정보 접근성 및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콘텐츠 개발 및 제작.
- 청년정책 시행계획 기준 분야별 콘텐츠 제작 및 업로드
- 신규 사업에 대한 신청 및 접수기능 구축 및 홍보 지원
- 정책사업 및 청년지원사업에 대한 분기별 콘텐츠 정비 실시
- 중앙 및 타 지자체 생산 정보와의 호환성 확보 노력 및 특화된 정보제공 방안 모색
 - * 정보의 통합관리 및 축적된 데이터의 관리방안 모색

○ 추진계획

- ‘24. 1월 : 청년정책 시행계획 기준 분야별 콘텐츠 제작 및 업로드
- ‘24. 2~12월 : 신규 신청사업 기능 구축 및 분기별 콘텐츠 정비

④ 청년 리빙랩 운영(계속, 개선)

○ 추진배경

- 청년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 청년의 시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청년 혁신공간(리빙랩)운영 및 프로젝트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 사업비: 100백만원(년)
- 주요내용 : 공간 운영, 리빙랩 아카데미 개최, 생활실험(리빙랩) 프로젝트 추진, 꿈꾸는 실험실 특강 실시

○ 개선방안

- 기존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청년커뮤니티 지원 사업, 청년학교, 청년 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 유사 사업을 통합하여 리빙랩의 하위 영역으로 확대.
- 기존 실험 프로젝트는 자유주제 공모형 영역으로, 이외 신성장동력형, 커뮤니티형, 정책개발형, 지역 간 협력형, 세대 간 협력형 등은 지정 영역으로 개발.
- 프로젝트 수행 공간 지원 및 각 분야별 멘토링 지원.

○ 추진계획

- ‘24. 1월 : 연간운영계획 수립
- ‘24. 2~12월 : 프로젝트 지원, 리빙랩 아카데미 등 세부사업 추진

□ 기대 효과

- 청년센터가 중간 지원조직을 넘어 청년자치를 수행할 필수 조직으로의 정체성 확립 및 정책 전달·수행·참여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음.
- 청년정책네트워크의 기능 강화로 청년의회 구성을 위한 각종 자치기구 및 위원회 조직을 성장시킬 수 있음.
- 청년의 정보 접근성 제고로 정보 부족과 정보 소외 등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음.
- 생활 밀착형 정책 실험을 통해 청년 참여의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를 도모할 수 있음.

주요 과제3. 찾아가는 홍보와 현장소통형 정보 공유

□ 추진 배경¹⁹⁾

- 1기 정책 결과에 대한 평가, 만족도 조사 등에서 홍보 부족에 대한 내용이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 실제 수행된 정책 홍보에 비해 반응이 미치지 못하는 결과로 볼 때, 기존의 홍보 전략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음.
- 청년 생활 범위 내, 생활 속 홍보를 구현할 필요가 있음.
- 정책 등 청년과 관련된 정보 전달과 홍보, 정책 제안 창구를 동시에 개설할 필요가 있음.

□ 홍보 전략1: SNS 및 뉴미디어 채널과 전통적 홍보 채널의 조화가 필요함.

- 청년들의 접근성을 고려한 SNS 일변도의 홍보 전략 탈피 필요.
- 청년이 SNS 등의 매체에서 자신들의 흥미나 관심에 적합한 정보를 최우선적으로 접촉하는 것은 맞지만, 해당 정보를 TV 등의 전통적 매체를 통해 재확인하면서 신뢰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사회와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 호/불호가 명확히 갈리는 선호체계, 관심을 가지거나 원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기꺼이 행동으로 옮기는 청년의 특성에 주목.
- SNS를 포함한 뉴미디어 채널 및 TV나 라디오뿐만 아니라,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현수막, 옥외시설물 등의 고전적 홍보 수단 등, 거의 모든 채널에서 동일한 정보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을 때, 청년들에 대한 홍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음.
- 대학 매체(대학·학과 홈페이지 게시판 및 애플리케이션, 대학언론사 등)와 에브리타임 등 대학생 커뮤니티, 청년 이용량이 높은 구인·구직 사이트 등에 대한 홍보도 동시에

19) 이 부분은 한국PR학회 자문회의(2023. 9. 15)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됨.

진행할 필요가 있음.

□ 홍보 전략2: 청년 맞춤형 콘텐츠 및 메시지 발굴이 필요함.

- 청년이 관심을 가지거나 청년 시청비율이 높은 콘텐츠 등에서 언급되는 유행어 등을 활용하거나, 상황 유형(예를 들어, ‘땀’, ‘짤’ 등)을 접목한 홍보 콘텐츠를 활용하는 등, 맞춤형 홍보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부산 사투리는 지양.
 - 최신 영화, 드라마, 개그 콘텐츠에 등장하는 유행어 활용.
- 남다른 개성을 중시하는 청년의 특성을 감안한 정책 홍보 콘텐츠를 마련해야 함.
 - 각종 사업이나 프로그램 참여 유도용, 홍보용 기념품 등을 제작·제공할 때에는 차별화된 한정적 자원이라는 이미지(예를 들어, limited edition 등)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청년정책에 대한 홍보를 실·국 담당자가 계획·개발·진행하기보다는 시 내의 홍보전문 조직인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등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 홍보 전략3: 가장 좋은 홍보는 참여의 확대와 경험의 공유임.

- 정책 프로그램이나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는 단순한 광고나 홍보 메시지보다 강력한 홍보 수단임. 참여를 통해 획득한 실질적인 경험과 평가는 최고의 홍보 콘텐츠가 될 수 있음.
- 참여자의 경험과 평가에 의한 긍정적인 추천 메시지는 타 세대에 폐쇄적이고 자기 세대 내에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청년과 또래집단에게 긍정적인 참여 의사를 유인할 수 있음.
- 참여자의 경험과 평가의 공유는 정책 프로그램이나 사업에 대한 홍보 콘텐츠와 메시지를 새롭게 제작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더 좋은 효과를 예상할 수 있음.
- 참여자의 경험과 평가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음.
 - SNS 등을 통한 일상적 공유를 촉진할 수 있는 유인(예를 들어, 해시태그 이벤트 등)의 제공.
 - 참여자의 경험과 평가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예를 들어, 특정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UCC 공모전 등)를 제공하여, 우수한 성과를 청년주간 등을 통해 발표.

□ 세부 사업내용

① 찾아가는 청년정책 홍보(신규)

- 추진배경

- 2018년 부산청년플랫폼 홈페이지 개설 및 2022. 7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공식 SNS채널 개설, 12월 부산청년플랫폼 고도화 구축을 거쳐 청년정책 홍보 기반을 완성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청년들이 청년정책을 잘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청년이 있는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소통하는 홍보 전략이 필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년~
- 사업비: 150백만원(년)
- 주요내용 : 청년 유형별·맞춤형 현장 정책설명 추진
 - 특성화고 3학년(예비 청년) 대상 취업설명회 등과 연계한 청년정책 설명회 개최
 - 대학 축제기간 홍보부스 설치, 대학 학생회 및 동아리 등과 연계 추진
 - 부산지역 기업대상 또는 관련 채용박람회 등과 연계한 정책 설명회 개최 등.

○ 추진계획

- '24. 1월 : 2024년 청년정책 홍보 및 소통 활성화 계획 수립
- '24. 2~6월 : 부산교육청, 대학, 기업대상 수요 조사 실시(상,하반기)
- '24. 3~12월 : 찾아가는 청년정책 홍보 추진(분기 1회)

□ 기대 효과

-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홍보 부족의 문제를 완전 해소하기보다는 청년과 소통하면서 홍보 부족과 정보 소외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일상화될 수 있음.
- 홍보 및 정보 전달과 정책 제안 창구의 일원화로 청년의 관심을 참여로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남.

주요 과제4. 의미 있는 보상을 통한 의미 있는 참여 확대

□ 추진 배경

- 청년이 정책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편익은 한정될 수밖에 없으며, 정책 과정에 참여했다는 심리적 효과와 제시한 대안이 정책이 되어 결과를 누릴 수 있는 편익은 매우 제한적임.
- 보다 실질적인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청년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세부 사업내용

① 청년활동 마일리지 제도 신설(신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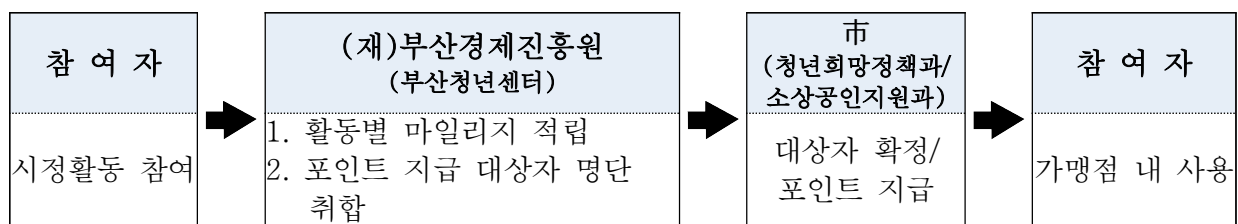
○ 추진배경

- 시정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고 청년 주도의 정책 홍보 활성화 도모
- 체계적인 실적 관리 및 효과적인 인센티브 제공으로 청년 활동 만족도 제고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10조의 2
- 사업기간 : 2024년~
- 사업비 : 150백만원 ※ 포인트 지급액 : 100백만원, 운영비 : 50백만원
- 사업내용 : 시정참여 및 시정홍보 등에 참여한 청년 대상 동백전 마일리지 지급

<표 6-5> 청년활동 마일리지 지원체계



○ 타시도 사례

- 전북 익산시의 ‘청년참여포인트 제도’ 사례 : 신규 가입(10k), 추천인(2k), 개인 SNS에 홍보물 링크/스캔본 게시(1k), 강의/교육 참여(5~10k), 지역 관광지 방문(5k), 지역내 봉사활동(10k) 등을 수행한 청년에게 포인트(년 30k 한정, 분기별 10k 이상시 지역화폐 [다이로움]로 환산 가능) 지급.
- 전라북도도는 익산시의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2024년부터 ‘청년 사회활동 포인트제’를 운영(생활비 지출/대출 상환/자산 형성 등으로 구분)

○ 추진계획

- ‘24. 1월 : 사업계획 수립
- ‘24. 2월 : 사람이음도서관 홈페이지 개편(마일리지 적립 페이지 생성)
- ‘24. 3~12월 : 사업운영(포인트운영 및 지급 등), 성과분석

② 다양한 청년참여 정책 추진(신규)

○ 정책 제안 팔로우 업(follow-up)

- 청년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안한 정책 대안들이 정책네트워크를 통해 기획·심의되는 과정과 행정부서의 수정·보완을 포함한 모든 처리 과정을 공개.
- 정책 처리 과정의 결과를 청년플랫폼 ‘청년G대’를 통해 게시 및 추적.
- 적정한 시기(반기)별 결산을 통해 우수 제안 사례에 대한 시상.

○ 홍보 참여 보상 : 해시태그 이벤트

- SNS 등, 청년들에게 익숙한 해시태그 이벤트를 실시하여 홍보의 양적·질적 확대를 도모함.
- 시의 뉴미디어 채널에 게시되는 홍보물을 청년 자신의 계정에 해시태그(예, #부산청년정책)와 함께 인용(리트윗 등)하여 게시.
- 각종 행사 및 축제 장소에 설치되는 홍보·정책제안 부스에서 SNS 게시물을 확인 후, 해당 청년에게 소정의 홍보물 등 제공.

□ 기대 효과

- 지역화폐 포인트 등 실질적이고 재정적인 보상과 결합되어 청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발할 수 있음.
- 지역화폐, 지역 기업과 행사 등과 결합할 경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홍보, 대안 제시 등의 참여에 대한 보상과 결과물에 대한 차등적 보상이 연계되면, 실질적인 홍보와 실효성있는 대안의 제시 등, 보다 상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참여의 제고는 정책 과정의 주체가 청년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실질적 청년 자치로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음.

주요 과제5. 지역 간 청년·협력 모형 개발

□ 추진 배경

- 관련 분야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사회적 자본이 정치·정책적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됨.
- 청년 참여를 양적·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청년의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것이 필요함.
-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청년친화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 정책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시역 내외 지자체 및 각종 청년 단체의 교류·협력을 선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세부 사업내용

① 동네 청년활동공간 활성화 지원(계속)

○ 추진배경

- 청년들이 편하게 드나들고 지역 기반 관계망 형성을 위한 공간 및 프로그램 필요
- 평일 저녁 및 주말 시간대 청년들이 여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 부재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19조(청년공간의 설치·운영 및 지원)
- 사업기간 : 2023년~
- 사업비 : 300백만원 ※시비 50%, 구·군비 50% 매칭
- 사업내용 : 평일 야간 및 주말 공간 운영시간 확대에 따른 운영비 지원
- 지원규모 : 청년활동공간 개소당 15백만원에서 최대 25백만원 지원
- 추진방향 : 공간 이용 만족도 평가 및 성과 분석 실시, 결과 공유를 통한 청년 니즈 충족 방안 마련

○ 추진계획

- '24. 2월 : 사업계획 수립, 구·군대상 공모신청 및 접수
- '24. 2~3월 : 사업대상지 선정
- '24. 3~12월 : 운영결과 모니터링 및 점검, 성과평가

② 청년공간 페스타(신규)

○ 추진배경

- 부산 지역 내 분포되어 있는 청년공간 활성화 및 홍보에 대한 필요성 증대
- 부산청년센터를 거점으로 구·군 및 민간 청년공간과 청년 소통, 마음치유, 교류회 등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 자긍심 고취 및 소통의 장 마련

○ 사업개요

- 행사기간 : 매년 상반기(5월중, 3일간)
- 행사장소 : 부산청년센터, 구·군 청년센터 등 지역 내 청년공간 일대
- 사업비 : 300백만원
- 사업대상 : 시, 구·군 및 민간 청년공간 관계자, 지역 청년
- 행사내용 : 청년공간 특화 축제 “청년공간 페스타” 개최
 - (메인행사) 시 청년공간 및 권역별 주요 청년공간(개막식, 교류회, 청년 간담회 행사 등)
 - (부대행사) 구·군 및 민간 청년공간(아카데미, 영상제, 심리상담 등 공간 프로그램 운영)

○ 추진계획

- '24. 1~2월 : 공공 및 민간 참여공간 모집, 권역별 주요 청년공간 선정
- '24. 3~4월 : 공간별 운영 프로그램 기획 및 행사계획 확정
- '24. 5~12월 : 행사개최, 행사결과 모니터링, 성과평가 등

③ 청년주간 행사(확대, 개선)

○ 추진배경

- 부년 관련 이슈와 정보 공유 및 청년정책 브랜드 “청년G대”를 확산하고 청년이 주인이 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

○ 사업개요

- 행사기간 :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 (청년의 날) 전후
- 행사장소 : 부산청년센터 등 부산 지역 일대
- 주요내용 : 청년의 날 기념식, 청년 주간 프로그램 운영 등
 - 청년의 날 기념식 : 기념사, 훈포상, 퍼포먼스 등
 - 청년주간 프로그램 : 컨퍼런스, 교류회, 이벤트 및 공연

○ 개선방안

- 지자체별 청년정책 박람회와 경연대회(전국 대학생 모의정책 제안 등), 학술행사 및 대토론회,
- 교류 및 축제문화행사(청년영화·연극제 등)
- 지자체 간 연합 정책, 협력 방안 등의 발표 행사(필요시).
- 부산청년정책네트워크를 통해 제안된 정책의 우수사례 발표 및 시상.
- 과년도 리빙랩 프로젝트, 세대 간·세대 내 공감 증진 프로그램 등의 사례 발표

○ 추진계획

- '24. 1~2월 : 청년주간 기획위원회 구성
- '24. 2~6월 : 청년주간 프로그램 및 운영방안 기획
- '24. 8~9월 : 청년주간 프로그램 확정 및 홍보
- '24. 9월 : 청년주간 본격 운영
- '24. 10~12월 : 청년주간 행사결과 평가 및 성과공유

④ 지역간 새로운 협력모델 발굴(신규)

○ 광역지자체 간 협력 추진

- 광역지자체 간 청년정책의 공동화 및 협력적 문제대응.
- 인접 지자체 간 협력을 선도함으로써,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거점으로 자리매김.
- 비수도권 연합, 동남권 연합, 부·울·경, 남해안 연합 등, 기존 지자체 간 협력 구조에 청년정책을 대입.
- 예를 들어, 부산, 울산, 경남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나 청년센터 간 협력을 통해 연합정책이나 사업을 수립·수행하고, '부울경 연합청년위원회' 등의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음.
- 지역화폐 등에 대한 전환 양해각서 등을 통해 지자체 간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 부산 기초지자체 간 교류·협력 모형 발굴

- 구·군 간, 동부산·서부산 간, 원도심·신도심 간 등, 지역 간 차이와 이질성을 극복하는 협력 프로그램 공모.
- 구·군의 청년활동공간이나, 지원 기관의 공동 프로그램 발굴.

○ 산(업현장)·학(업현장) 협력 모형 발굴

- 교육이나 인재양성, 학과 개설·운영 등이 아닌, 교류·협력을 통한 연대와 이해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공모.
- 부산의 청년롤모델 선정, 멘토링, 노하우 공유 등의 지원 프로그램 개발.

□ 기대 효과

- 청년의 사회적 자본 형성과 축적을 통해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음.
- 지자체 간 교류·협력 모형을 통해, 청년문제에 대해 지자체의 공동 대응, 혜택의 공유, 모범 사례의 전파 등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청년 정책의 보급 및 발전에 기여함.
- 지자체 간 교류·협력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거점이라는 이미지를 형성함.

주요 과제6. 청년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공감 증진 프로젝트

□ 추진 배경

- 최근 경제 상황 등의 영향으로 재정 지원 등, 복지 혜택에 전 세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확인되어,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 대한 타 세대의 반감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청년 문제가 전 세대의 미래에 직결되는 문제임을 공감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세대 간 공감 증진을 통해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현재 청년은 개인별로 파편화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다양한 집단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청년 내에도 이러한 개별 집단에 따라 이질적이고 차별적인 갈등 양상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음.
- 청년 내에서도 다양한 집단에 대한 이해와 포용,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 세부 사업내용

①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계속, 개선)

○ 추진배경

- 청년 취창업 및 문화와 관련된 청년이슈를 넘어 청년이 주체가 되는 청년활동 그 자체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는 정책수요 반영

- 다양한 분야에 있어 청년의 자발적 활동여건을 강화하고 그들의 사회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여 청년 권익 증진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 사업비 : 140백만원
- 사업목적 : 청년들의 자발적 활동 여건 조성 및 사회적 관계망 확장 등 사회참여 역량
- 사업내용 : 커뮤니티 활동 지원, 커뮤니티 간 네트워킹 활성화
 - 부산 청년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커뮤니티 활동비 지원
 - 커뮤니티 간 콜라보, 네트워킹 데이 개최 등 네트워킹 활성화 지원

○ 개선방안

- 로컬 청년 공동체(커뮤니티) 활동비 지원을 통해 지역 활성화 도모
- 커뮤니티 인큐베이팅을 통해 신규 커뮤니티를 양성하고 지속적 사회 참여 지원
- 네트워킹 데이 등 각 커뮤니티 간의 콜라보 활동 강화를 통해 청년의 소통 및 사회적 관계망 확장 도모

○ 추진계획

- '24. 1~2월 :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위탁사업비 교부, 참여자 모집
- '24. 3월~ : 청년 커뮤니티 참여자 선정 등 사업 추진, 사업 정산 및 평가

② 청년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세대공감 사업 추진(신규)

○ 세대 간 공감 증진

- 청년리빙랩 영역 중 하나로 '세대 간 공감 증진'을 설정하여 세대 공동 프로젝트를 공모·발굴.
- 세대 간 상호 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 등이 개발될 수 있음.
- 선정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성과를 익년 청년주간에서 사례 발표.
- 인천광역시의 2020년 계획에 '세대 소통 프로젝트 공모'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청년과 타 세대 간 협업 프로그램에 대해 연 2,500만 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사례가 있음.
- 광주의 2022년 계획의 세대 간 연대 프로젝트 과제에는 '세대 간 공감과 소통 프로젝트 지원', '청년과 부모가 참가하는 상담 프로그램 지원' 등의 세부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 세대 내 공감 증진

- 청년세대 내 다양한 이해관계에 기반 한 각 단체·커뮤니티 간 상호이해와 상호의존을 심화시키는 프로그램을 공모.
- 기존 구·군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진행된 청년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민관 협력형'으로 분류하여 해당 프로그램에 포함시켜 추진함.
- 소외 지역·계층·단체 등이 포함된 프로그램에 우선권을 부여하기 위한 '사회 배려형'

분류를 포함하여 사회적 약자와의 공감 증진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기존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 사업의 옹기종기 프로그램을 '공동체 공동형'으로 분류하여 해당 프로그램 형태로 전환하여 지원함.
- 선정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성과를 익년 청년주간에서 사례 발표.

□ 기대 효과

- 청년 - 중년, 청년 - 노년 등 세대 간 소통 및 문화 교류가 증진될 수 있음.
- 세대 간 교육·멘토링, 청년세대 내 집단 간 공동 프로그램 등을 통해 상호이해와 상호의존이 심화되어 갈등 상황을 예방하거나, 쉽게 조정할 수 있게 됨.
- 청년세대 내, 그리고 세대 간 공감대가 형성되면 청년친화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음.

<참고문헌>

- 박윤경·한창근·백승훈. 2023. 『전장에 선 청년들: 청년자산실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관계부처 합동. 2022.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2022년 10월 26일)
- 광주광역시. 2022. “‘청년도시 광주’ 실현을 위한 5개년 청년정책 기본계획”
- 구정태. 2021. “지방소멸 위기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2021년 6월 30일)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2023. “지자체 2023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1: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청년포털 검색 https://2030.go.kr/board/1/boardView?ntt_id=2074(2023년 4월 27일).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2023.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 청년포털 검색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56083>(2023년 4월 3일).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2022. 『2021년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 대표사례 모음집』 청년포털 검색 https://2030.go.kr/board/1/boardView?ntt_id=1544(2022년 4월 6일).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2020.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 청년포털 검색 <https://2030.go.kr/board/1/boardView?nttId=965>(2020년 9월 28일).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2020. 『지자체 청년정책 우수사례 모음집』 청년포털 검색 https://2030.go.kr/board/1/boardView?ntt_id=370(2020년 2월 10일).
- 국토교통부. 2022. “주거실태조사 통계정보보고서.”
- 김기현. 2022. “청년정책 전달체계 및 참여 거버넌스의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305권, 44-58.
- 김기현·유민상. 2020.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정책참여 현황과 과제.” 『블루노트 이슈 & 정책』 129호, 1-12.
- 김문길·김태완·임완섭·정은희·김재호·안주영·김성아·이주미·정희선·최준영. 2017. 『청년빈곤의 다차원적 특성 분석과 정책대응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비아·박상준·이고은. 2020. “해외봉사단 경험을 통한 대학생의 심리적 변화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21권 1호, 493-526.
- 김성아·김지연·김문길·조성은·정세정·노혜진·이정민·강예은·장성현. 2022. 『청년정책 지원대상 연구: 취약 청년과 지역 청년을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김수아. 2021. “청년정책과 청년 담론: 젠더 관점의 고찰.” 『이화젠더법학』 13권 2호, 251-286.
- 김영·황영미. 2013. “‘요요 이행’과 ‘DIY 일대기’: 이행기 청년들의 노동경험과 생애 서사에 대한 질적 분석.” 『한국사회』 14권 1호, 215-260.
- 김영미. 2016. “계층화된 젊음: 일, 가족형성에서 나타나는 청년기 기회불평등.” 『사회과학논집』 47권 2호, 27-52.
- 김종진. 2020.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 설계 방향과 과제 모색 - 노동자 개념 확대와 소득기반으로의 재편 전략.” 『월간 복지동향』 264호, 13-19.
- 김준현. 2019. “부산광역시 청년 일자리 정책 거버넌스 정책역량 분석.” 『한국지역정보학회지』 22권 2호, 1-24.

- 김태완·장미선. 2023.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미혼 청년 가구의 주거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 결혼 의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주거학회논문집』 34권 2호, 43-53.
- 남재량. 2006. 청년실업의 동태적 특성과 정책 시사점.” 『노동리뷰』 16호, 22-33.
- 남재욱·김영민·한기명. 2018. “고졸 청년 노동자의 노동시장 불안정 연구.” 『사회복지연구』 49권 1호, 221-262.
- 노법래·양경은. 2020. “한국복지패널로 들여다본 청년의 생애사: Multistate Model로 그린 한국 청년의 취업, 결혼, 출산의 경로와 소득집단별 비교.” 『사회복지연구』 51권 3호, 71-94.
- 대구광역시. 2022. “대구광역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 류승우·이양기. 2022. “부산지역 청년 정책의 현황과 보완을 위한 실증 연구.” 『전문경영인연구』 25권 4호, 341-375.
- 문혜진. 2010. “생애과정 관점에 대한 고찰과 적용: 성인으로의 이행과정에 대한 탐색적 분석.” 『사회복지연구』 41권 3호, 349-378.
- 박경진·김도형. 2020. “인구감소대응 지방자치단체 청년유입 및 정착정책 추진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1-405.
- 박미선. 2021. “청년주거정책: 불안한 대상과 혼란한 정책의 협주곡.” 『국토』 482호, 6-11.
- 박주홍, 손지현, 서두산. 2022.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부산복지개발원.
- 변금선. 2023. “서울 청년의 삶과 청년정책” 지역 청년정책을 말하다: 현황과 과제 세미나 자료집, 3-42.
- 변금선·이혜림. 2023. “청년의 사회적 불안 인식 격차: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생애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30권 2호, 127-156.
- 변금선·김기현. 2019. “청년층의 삶의 질 격차에 관한 연구: 1988-1998년생 청년의 다중격차 실태 분석.”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527-554.
- 변금선. 2018.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의 계층화: 1970-80년대 출생코호트의 청년기 노동력적 비교.” 『한국사회복지학』 70권 3호, 113-137.
- 부산광역시. 2023. “부산광역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 부산광역시. 2022. “부산시 청년정책 성과분석 연구보고서”
- 부산광역시. 2022. “부산광역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 부산광역시. 2022. “부산광역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보고서”
- 부산광역시. 2021. “부산광역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 부산광역시. 2021. “부산광역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보고서”
- 부산광역시. 2020. “부산광역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 부산광역시. 2019. “부산광역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 부산광역시. 2018. “부산광역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안)”
- 성미애·최연실·이재림. 2015. “출산 연기형 무자녀 기혼 여성의 관점에서 본 출산 연기의 맥락과 정책적 제언.” 『가족과 문화』 21집 1호, 271-303.
- 서복경·민화·정현미·이상돈. 2022. “부산시 청년정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도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주)더가능연구소.

- 서복경·정현미·윤태영·조형근·박수민·류기락. 2022. “청년정책의 패러다임과 전략과제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서울특별시. 2021.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사업 가이드북”
- 손동기. 2020. “이탈리아 ‘Bonus Cultura’와 프랑스 ‘Pass Culture’ 비교연구를 통한 공공문화서비스 활성화 방안.” 『이탈리아어문학』 59호, 29-52.
- 신영규. 2021. “핀란드 청년정책 동행.” 『국제사회보장리뷰』 18집 가을호, 79-90.
- 신진욱. 2022. 『그런 세대는 없다: 불평등 시대의 세대와 정치 이야기』 원주: 개마고원.
- 유민상·신동훈. 2022. 『2021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사후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민규. 2021. “최근 청년층 가계부채현황 및 평가.” 청년정책연구단 세미나 발표자료.
- 이병희. 2004. “청년층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동아시아 연구소 고용 없는 성장기의 청년실업해법 토론회 자료집, 1-23.
- 이삼식·윤여원·이지혜. 2012.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심층 사례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상직. 2023. 『한국 청년은 언제 집을 떠나는가: OECD 국가 비교』 국회미래연구원.
- 이승윤·백승훈. 2021. “생태적 전환을 위한 ‘참여소득’의 가능성: 기본소득, 보편적 기본서비스, 일자리보장제와의 비교.” 『시민과세계』 39호, 129-168.
- 이윤주·김기현·하형석. 2017. 『청년정책 추진 체계 발전방안 연구』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 이주미·김태완. 2022. “청년층 불평등 현황과 과제: 노동시장 소득 및 자산을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305권, 8-20.
- 청년친화연구단. 2022. 『인천광역시 청년친화도시 추진 방안』 인천연구원.
- 최영화. 2023. “인천 청년기본계획 및 청년정책 사례.” 지역 청년정책을 말하다: 현황과 과제 세미나 자료집, 127-152.
- 전라북도. 2022. “제2차 전라북도 청년정책 기본계획”
- 정인수·남재량·이승우. 2006. 『고졸 이하 청년층 실업실태 파악 및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송인방·조희정·이영재. 2023. “새로운 인구 개념의 정책 적용 가능성과 과제: 일본의 관계인구를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33집 3호, 29-58.
- 주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 2016. “싱가포르의 자국민 직무역량 향상 정책(SkillsFuture).” https://overseas.mofa.go.kr/sg-ko/brd/m_2511/view.do?seq=1205186(검색일: 2023.07. 28.)
- 진선미 의원실. 2022. “청년층 부채 실태조사.” 서울: 진선미 의원실.
- 최두현. 2021. “청년주거정책 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 『국토』 12월호, 44-49.
- 통계청 통계개발원. 2022. “한국의 사회동향 2022.” <https://sri.kostat.go.kr/menu.es?mid=a90104010100>(최종확인: 2023.08.03.)
- 한국개발연구원. 2022. “최근 취업자 수 증가세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전망.” https://www.kdi.re.kr/research/analysisView?art_no=3420(검색일: 2023.03.07.).
- 한국은행. 2023. “경제전망보고서.” <https://www.bok.or.kr/portal/bbs/P0002359/view.do?nttI>

- d=10075705&menuNo=200066&pageIndex=1(검색일: 2023.03.07.).
- 한국은행. 2020. “참고 1. 최근 청년층의 가계대출 현황 및 평가.” 『금융안정보고서(2020년 12월)』 22-23 (2020년 12월 23일).
- 한선화·정용찬·김성훈. 2021.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의 정책도입과 변동에 관한 연구: 정책형성과정에서 ‘협력’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국가정책연구』 35권 4호, 1-36.
- 함선유·이원진·김지원. 2021. 『코로나19의 확산과 청년노동시장 변화』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황규성. 2016. “다중격차: 다차원적 불평등에 관한 개념화 시론.” 『동향과 전망』 97호, 9-44.
- Arnett, Jensen J. 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5): 469-480.
- APEC Human Resource Development Working Group. 2018. “Best Practices of Youth Employment Policies in Selected APEC Economies.” https://www.apec.org/docs/default-source/Publications/2019/1/Best-Practices-of-Youth-Employment-Policies-in-Selected-APEC-Economies/219_HRD_Best-Practices-of-Youth-Employment-Policies-in-Selected-APEC-Economies.pdf#page71 (검색일: 2023.7.28.).
- Batarags, Lina. and Cheryl Teh. 2021. “Japan is trying to lure people into rural areas by selling \$500 homes, but it's not enough to fix the country's 'ghost town' problem.” *Insider*(June 26) <https://www.insider.com/japan-ghost-towns-population-vacancy-rates-akiya-banks-2021-6> (검색일: 2023.03.08.).
- BNK 경제연구원. “동남권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시사점.” 『BNK 경제인사이트』 2022-9호, 1-11.
- Mills, C. 1959. *The Sociological Imagination*. New York: Grove.
-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and Employment of Finland. 2018. “The One-Stop Guidance Center Model. <https://tem.fi/documents/1410877/2937056/The+One-Stop+Guidance+Center+model> (검색일: 2023.7.28.).
- Neugarten, B. 1970. “Dynamics of transition on middle age to old age.”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4(1):71-87.
- OECD. 2021. “The Updated OECD Youth Action Plan.” Meeting of the OECD Council of Ministers(May 31 and June 1)
-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2018. “Canada’s Input for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s Report on Youth and Human Rights –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35/14.” <https://www.ohchr.org/sites/default/files/Documents/Issues/Youth/Canada.doc> (검색일: 2023.7.28.).
- Hansenes, Pascal. and Wojciech Ciesla, 2022. “The Empty House: A window into Europe’s Vacant Property Problem.” *Investigate Europe*(December 14) <https://www.investigate-europe.eu/en/2022/the-empty-house-a-window-into-europes-vacant-property-problem/> (검색일: 2023.03.07.).
- Pollock, G. 2007. “Holistic Trajectories: A Study of Combined Employment, Housing and Family Careers by Using Multiple-sequence Analysis.”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Series A (Statistics in Society)*, 170(1):167-183.

- Riely, M. & Riely, J. 1994. "Age integration and the lives of older people." The Gerontologist, 34(1):110-115.
- Sorsa, Kaisa. 2020. "WP4 Youth Guarantee and One-Stop Guidance Center Case Study Report." <https://www.localfinland.fi/sites/default/files/media/file/Finland%20Youth%20Guarantee.pdf> InnoSI (검색일: 2023.07.28).
- Thackray, Lucy. 2023. "Italy's one euro houses: who can buy one and how does it work?" Independent(February 2) <https://www.independent.co.uk/travel/europe/italy/italy-one-euro-homes-buy-house-b2274302.html> (검색일: 2023.03.07.).

<인터넷 홈페이지>

광산구청 홈페이지.

https://www.gwangsan.go.kr/bb/bbBoard.php?action=view&pageID=mayor0201000000&SEQ=48889903&movePage=1&boardID=MAYOR_NEWS

(사)광주금융사회복지협회 청년금융복지센터 홈페이지.

<https://www.13account.or.kr/center/page/13account>

2023년 대구청년 탄탄대로 홈페이지. <https://www.daegu.go.kr/YouthPolicy>

경기도주거복지포털 홈페이지 <https://housing.gg.go.kr/>

경기예술인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youth.seoul.go.kr/site/main/content/cp_intro

경기청년포털 홈페이지. <https://youth.gg.go.kr/>

공공데이터포털 홈페이지. <https://www.data.go.kr>

광명도시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 <https://house.gmuc.co.kr/>

광주청년센터 공유공간 홈페이지. <https://www.giyouthcenter.kr/>

광주청년 정책플랫폼 홈페이지. <https://www.gwangju.go.kr/youth/>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대전청년포털 홈페이지. <https://www.daejeonyouthportal.kr/>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https://www.korea.kr/main.do/>

미국 'Art in the Loop' 홈페이지 <https://www.artintheloop.com/>

부산공공데이터 홈페이지. <https://data.busan.go.kr/>

부산청년플랫폼 청년G대 홈페이지. <https://young.busan.go.kr/>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https://youth.seoul.go.kr/site/main/home>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https://housing.seoul.go.kr/>

영국 Unipol 홈페이지. <https://www.unipol.org.uk/Home>

울산청년정책플랫폼 U-Page 홈페이지. <https://www.ulsan.go.kr/s/ulsanyouth>

이탈리아 온라인 빈집 포털 1 Euro Houses 홈페이지 <https://1eurohouses.com/>

인천청년포털 홈페이지. <https://www.incheon.go.kr/youth/index>

일본 'Akiya Bank' 홈페이지 <https://www.akiyabanks.com/>
 일본 고베시의 스타트업 에코시스템 홈페이지 <https://kobestartup.com/>
 제주문화재단 아트노크 홈페이지. <https://artknock.kr/introduce.html>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포털 <https://www.khug.or.kr/jeonse/index.jsp>
 청년G대 부산청년플랫폼 홈페이지. <https://young.busan.go.kr/index>
 캐나다 청년의회 홈페이지.
<https://www.canada.ca/en/campaign/prime-ministers-youth-council.html>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홈페이지. <https://www.clevelandorchestra.com>
 통계청 지표누리 홈페이지. <https://www.index.go.kr>

<신문 및 보도자료>

국제신문. 2020. “늙은 부산 ‘청년도시’ 희망을 봤다: 20대 초반 10년간 전출입.”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01112.33001004142> (2020년 11월 11일).

남도일보. 2023. “2년째 국회 계류 ... 멈춰선 ‘도심특구 특별법’ 처리 촉구.” <https://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17882>(2023년 3월 17일)

동아일보. 2023. “전세사기 피해 집중 지역, 갭투자도 많아... 서울 강서구-인천 미추홀구 등 빌라 타깃.”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30424/118970748/1>(2023년 3월 24일)

머니투데이. 2023. “탈부산 막자"...매출 5억→63억 대박 '창업 성지'로 뜨는 영도.”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91111305583228>.(2023년 9월 14일).

부산광역시. 2023. “부산청년이라 좋다(Good)! 부산시, 2023년은 청년 정착의 원년으로, 탄탄한 「청년G대」 만들겠습니다!” <https://www.busan.go.kr/nbtnewsBU/1553975?curPage=&srchBeginDt=&srchEndDt=&srchKey=sj&srchText=>(2023년 1월 25일).

블룸버그. 2016년 8월 23일자 기사.

선데이광명. 2022. “‘광명제16R구역 재개발 임대주택(행복주택)’ 특별·우선공급 입주자 모집.” <http://www.sundaygm.com/news/articleView.html?idxno=5862>(2022년 9월 16일).

서울특별시. 2021. “‘안심이앱’ 더 좋아진다...안심귀가택시·긴급알람 추가.”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3223>(2021년 11월 16일),

세계일보. 2022. “취약청년에 부동산 중개료·이사비 9억 지급.” <https://www.segye.com/newsView/20221229517401>(2022년 12월 29일)

시민일보. 2022. “광주광역시, 산단 중소기업 청년에 교통비 5만원 지원.” <https://www.siminilbo.co.kr/news/newsview.php?ncode=1160284657538812>(2022년 2월 9일)

연합뉴스. 2023. “[그래픽] 청년 가구 평균 부채 추이.” <https://www.yna.co.kr/view/GYH20230227000200044>(2023년 2월 27일).

이코노미스트. 2022. “엘리베이터도 없다...여전한 ‘외판 섬’ 임대주택 차별.” 2022.12.10. <https://economist.co.kr/article/view/ecn202212300018>(2022년 12월 30일),

조선일보. 2021. ““세어하우스, 꼭 모르는 사람과 살아야 하나요?”... 용산 청년주택 미달 쇼크.”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1/05/07/VVBKPN24IRALXHBPEHTD4TRBH4/(2021년 5월 7일),

통계청. 2022. “데이터 기반 청년정책 지원을 위한 청년통계등록부 구축.” 통계청 보도자료(2022/12/21)

통계청 통계개발원, “한국의 사회동향 2022.” <https://sri.kostat.go.kr/menu.es?mid=a90104010100>

한국일보. 2023. “5년 내 5000만 원 마련하는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된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30810450000433>(2023년 3월 8일)

KBS. 2022. “부산시, 공유형 모빌리티 시범사업 시행.”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22997>(2022년 3월 24일)

<청년 관련 조사/청년정책 만족도 조사>

공공데이터포털. 2023. “부산광역시_산업단지 조성 현황.” <https://www.data.go.kr/data/3076463/fileData.do?recommendDataYn=Y> (2023년 5월 30일).

부산청년센터 만족도 조사 결과(2021)(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부산청년정책 수요 조사 자료(2021)(부산시)

부산청년패널조사 원자료(2022)(부산시)

부산청년학교 만족도 조사 결과(2020~2021)(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원자료(2021)(국무총리실)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2019~2021)(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 도움을 주신 분들<자문 및 간담회의> *가나다 순

- 박민규(경북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연구위원)
- 박민준(부산청년정책조정위원회 공동위원장)
- 박은철(전 광주시청 청년특별보좌관)
- 변금선(서울연구원 도시모니터링센터 부연구위원)
- 부경대 올댓E&R
- 안수빈(부산청년정책네트워크 사회안전망 분과장)
- 엄창환(전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 이관률(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조원태(충청남도청 청년정책관)
- 조희정(더가능 연구소 실장)
- 최성훈(중소벤처기업부 청년인턴)
- 최영화(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 한국PR학회
- 한승희(부산대 행정학과 교수)